



2023.10.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전망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I

Economic Outlook for 2024 and the Medium-Term III

[소득 부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 소득 부문 -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I

- 소득 부문 -

총괄 | 진 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예 승 우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김 상 우 산업자원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이 동 엽 경제분석관
권 일 경제분석관
김 민 혁 경제분석관

작성 |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유 근 식 경제분석관
김 민 혁 경제분석관
이 소 연 경제분석관
천 경 록 경제분석관

지원 | 이 하 영 행정실무원
이 정 원 자료분석연구원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GDP 성장률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02) 6788-4749 | psad@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 소득 부문 -

2023.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3. 9. 2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2024년 우리 경제는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에서 점차 벗어나 올해보다 높은 성장이 기대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세계 경제 분절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의 개선 흐름을 제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도 세입 여건 약화로 인한 재정 여력 하락과 총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하여 국회의 예산안·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총 4권으로 구성된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제Ⅲ권 「소득부문」은 국민총소득을 비롯하여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등의 소득변수와 인구·고용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소득분배 구조를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총소득에서 영업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였으며, 최근의 이례적인 세입 감소로 인해 정부소득에 해당하는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소비 여력 확대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은 돌봄 부문에서의 노동수요 확대 및 노인일자리의 확대로 인해 양적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임금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총인구는 합계출산율 하락에 따라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경제정책 마련과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NABO 2024년 및 중기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명목 국내총소득 (NGDI=NGDP)	3.9	2.2	4.2	5.1	4.8	4.4
피용자보수	4.8	4.1	3.7	4.8	4.5	4.2
(GDP 대비 비중)	(47.6)	(48.5)	(48.2)	(48.1)	(48.0)	(47.9)
영업잉여	-3.2	-1.6	3.5	4.5	5.2	4.4
(GDP 대비 비중)	(20.1)	(19.4)	(19.2)	(19.1)	(19.2)	(19.2)
고정자본소모	10.2	4.9	5.9	5.6	5.4	5.3
(GDP 대비 비중)	(22.1)	(22.7)	(23.0)	(23.1)	(23.3)	(23.5)
순생산 및 수입세	2.4	-4.6	4.4	6.2	4.6	3.6
(GDP 대비 비중)	(10.2)	(9.5)	(9.5)	(9.6)	(9.6)	(9.5)
명목 국민총소득 (GNI)	4.3	3.3	4.2	5.0	4.8	4.4
국민처분가능소득 (NDI)	2.9	2.8	3.7	4.8	4.6	4.2
총인구	-0.09	-0.20	-0.08	-0.11	-0.14	-0.16
합계출산율(명)	0.78	0.75	0.74	0.72	0.70	0.69
취업자 수 증감(만명)	81.6	32.9	23.7	21.5	15.1	10.1
(증감률)	3.0	1.2	0.8	0.8	0.5	0.3
고용률	62.1	62.6	62.8	63.1	63.2	63.2
실업률	2.9	2.7	3.0	3.2	3.3	3.3
임금상승률	4.9	2.9	3.0	3.4	3.2	3.2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고용노동부



I. 동향

1. 분배국민소득

□ 피용자보수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4.5% 증가

- 2018년 868.1조원에서 2022년 1,029.7조원으로 증가하여 1,000조원을 돌파하였고,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5%
- 명목GDP 성장률(지난 5년 평균 3.3%)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5.7%에서 2022년 47.6%로 상승

□ 영업잉여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2021년을 제외하고 매해 감소

- 법인영업잉여 하락세, 자영업자 수 감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연평균 2.6% 감소하여 2022년 수준값은 2017년 대비 12.1% 하락
- 명목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은 2017년 26.9%에서 2022년 20.1%로 6.8%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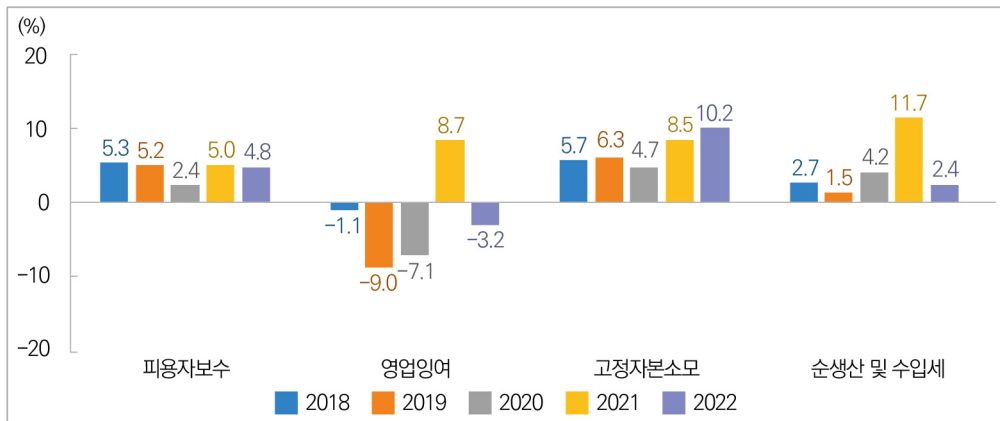
□ 고정자본소모는 지난 2년간(2021~2022년) 큰 폭으로 증가

- 지난 5년간(2018~2022년) 고정자본소모는 연평균 7.1% 증가
- 원자재 등 자본재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5%, 10.2%의 높은 증가율 보임

□ 지난 5년간(2018~2022년) 순생산 및 수입세 규모는 꾸준히 증가

-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18년(181.8조원)부터 2022년(219.7조원)까지 지속 증가하여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4%
- 국내총소득 중 정부로 분배되는 몫이 증가해오면서 명목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이 2021년에는 10.3%까지 상승하였으나, 2022년에는 소폭 하락

[분배국민소득 항목별 증가율(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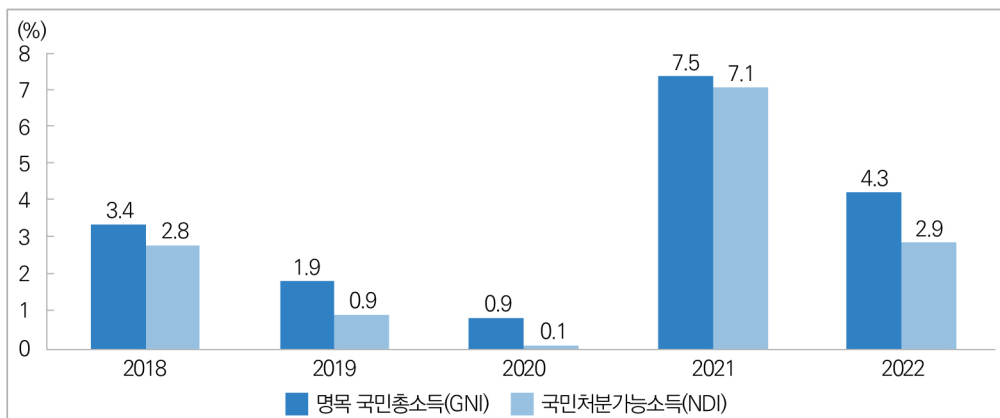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 국민총소득

□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지난 5년간 국내총소득보다 0.2%p 빠르게 증가

-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빠른 증가로 인해 지난 5년간 국내총소득 증가율 3.3%보다 0.2%p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국민처분가능소득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의미하는데, 지난 5년간 국민총소득보다 0.8%p 낮은 2.7% 성장률을 보임

[명목 국민총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증가율(2018~2022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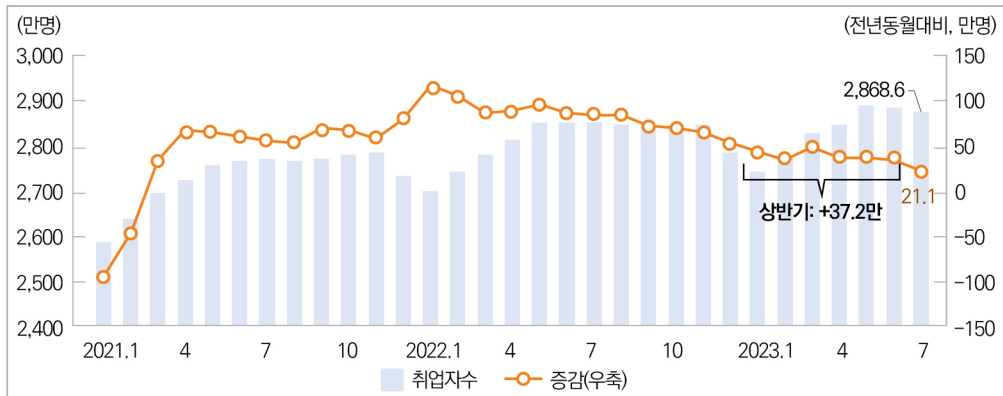


3. 고용

□ 2023년 상반기 고용은 전년대비 양호한 증가세 시현

-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여 양호한 상황
- 다만, 고용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어 7월 취업자 수는 29개월래 최소 증가폭 기록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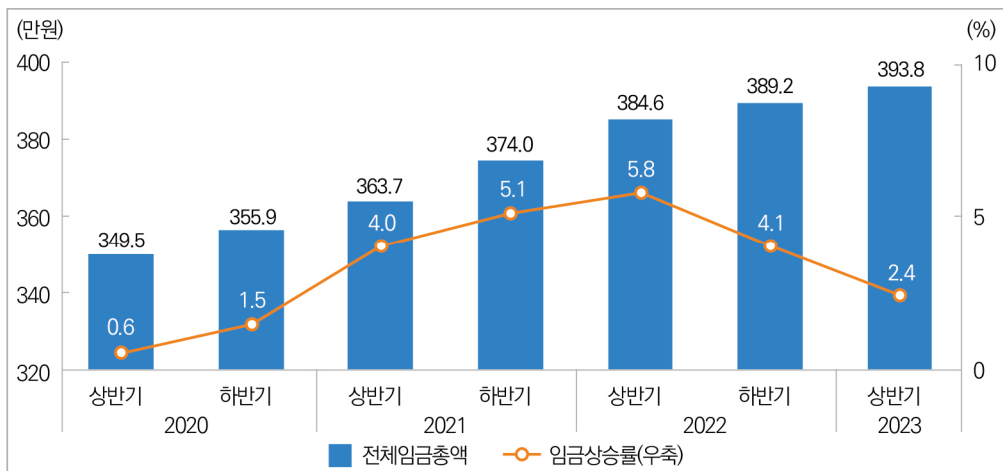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023년 상반기 명목 임금은 2.4% 상승하여 물가 대비 낮은 상승세 시현

- 상용직 특별급여 하락과 임시일용직 노동시간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낮은 상승세 기록
- 2023년 상반기 물가상승률(4.0%)을 고려할 때, 실질임금은 하락

[임금상승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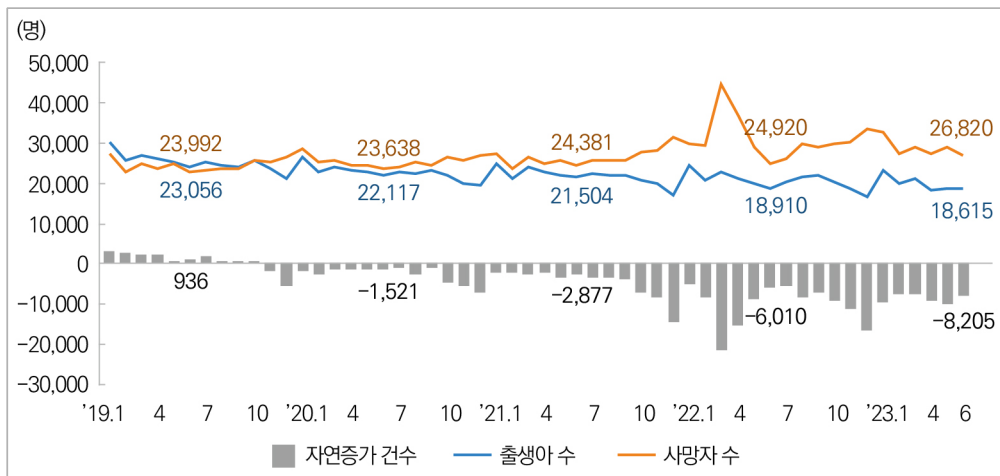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4. 인구

□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

- 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출생아수가 사망자 수를 하회하면서 44개월째 자연감소 지속
 - 합계출산율은 2016년 1분기 이후 지속 감소하였으며,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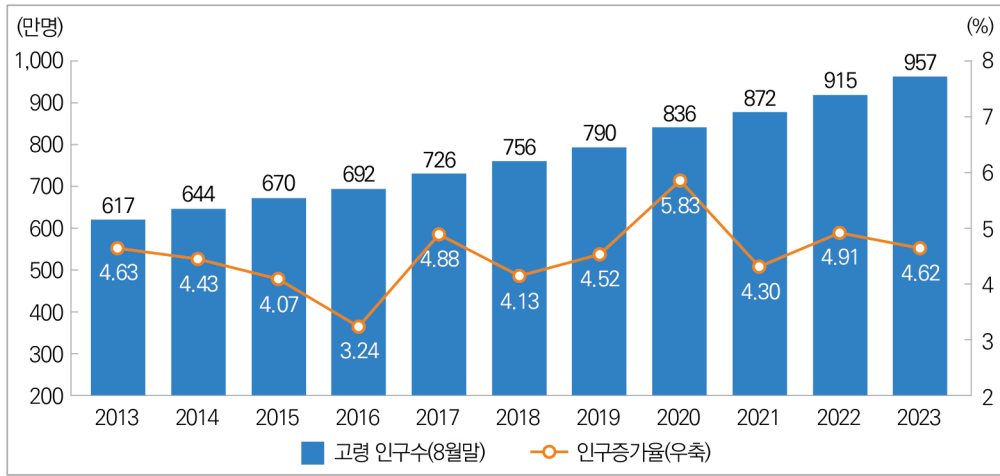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고령 인구 증가세 지속으로 고령 인구 비중 상승
 -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4.8%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 비중 상승
 -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3.0% 감소



[고령자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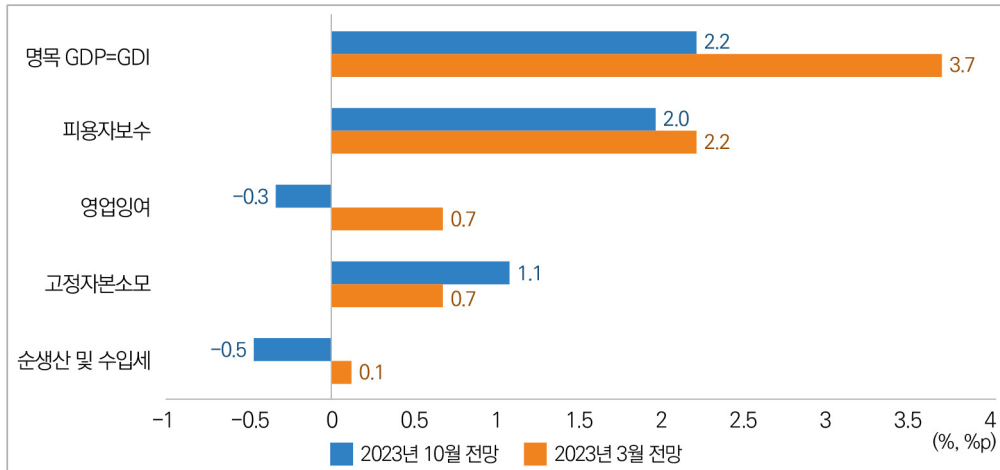
주: 각 연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II. 2024년 및 중기 전망

□ 2023년 국내총소득의 3개 구성항목 성장률 기여도 하향 조정

- 명목GDP 성장률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수출 및 생산활동 위축 등이 예상됨에 따라 피용자보수(-0.4%p), 영업잉여(-5.1%p), 순생산 및 수입세(-5.9%p)의 증가율 하향 조정
-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전망 방법의 변경 및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전망의 상향 조정으로 1.7%p 상향 조정

[2023년 국내총소득 전망의 분배부문별 기여도 비교]



□ 2024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지난 전망 대비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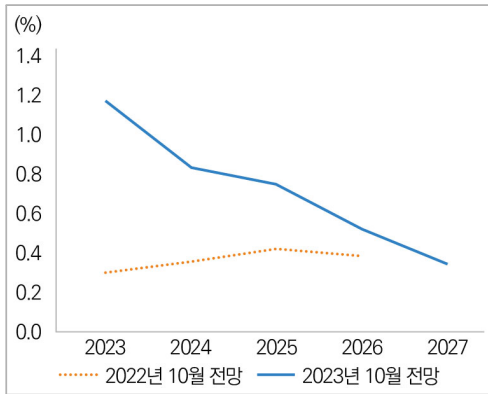
- 2024년 취업자 수는 23.7만명(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 전망(10.3만명, 0.4%) 대비 13.4만명(0.4%p) 상향 조정
 - 돌봄 부문의 노동수요 증가와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상향 조정의 주요 원인
 - 또한, 최근 고용호황 이후 GDP와 취업자 수 간 장기균형으로의 복귀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
- 중기적으로도 지난 전망 대비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나타나지만, 외생적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와 GDP성장률 변화에 따라 지난 전망 수준으로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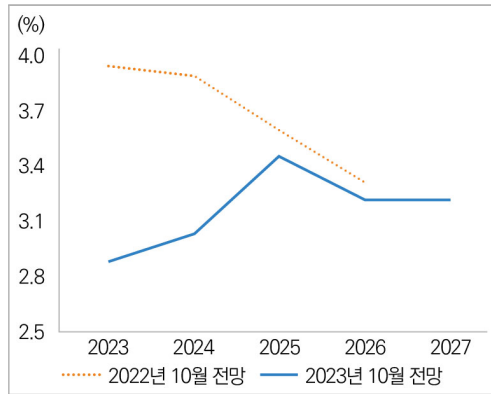
□ 2024년 임금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전망 대비 하향 조정

- 2024년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3.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 전망치(3.9%) 대비 0.9%p 하향 조정
 - 예상보다 높은 취업자 증가세로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기존 전망 대비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저임금근로자 증가로 인한 구성효과를 반영
- 2024년 이후에도 기존 전망 대비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취업자 수 증가율 비교]



[임금상승률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4년 사용자보수는 3.7%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세 둔화 전망

- 2024년 사용자보수는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명목GDP 성장률을 하회하여 GDP 대비 비중은 0.3%p 하락 전망
- 2023~2027년 사용자보수는 연평균 4.3% 증가하여, 지난 5년 대비 증가세 둔화

□ 2024년 영업잉여는 전년까지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

- 경기회복에 의한 GDP성장률 증가로 2024년 영업잉여는 전년(1.6% 감소 전망)보다 5.1%p 높은 3.5% 증가할 전망
- 2024~2027년 중 영업잉여 증가율은 연평균 4.4%로 동 기간 명목GDP성장률(연평균 4.6%)에 근접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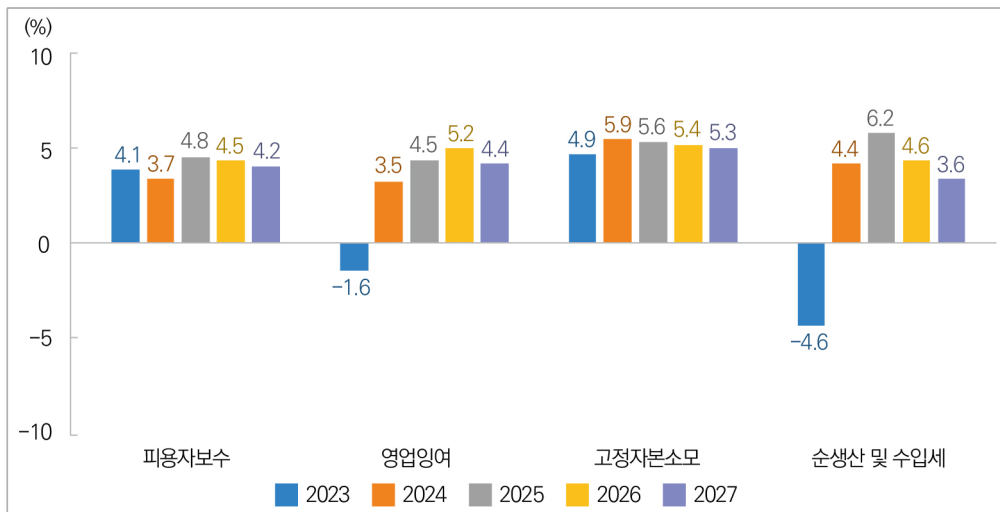
□ 2024년 고정자본소모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2024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4.9% 증가 전망)보다 1.0%p 높은 5.9% 증가할 전망
- 2018~2022년 중 연평균 7.1% 증가했던 고정자본소모는 자본재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2023~2027년 중에는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

□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23년에는 4.6% 감소한 뒤, 2024년부터 반등

- 2023년에는 대외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순생산 및 수입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는 경제성장률 상승세 회복과 세계 교역량 증가에 따라 반등할 것으로 전망

[분배국민소득 항목별 증가율 전망(2023~20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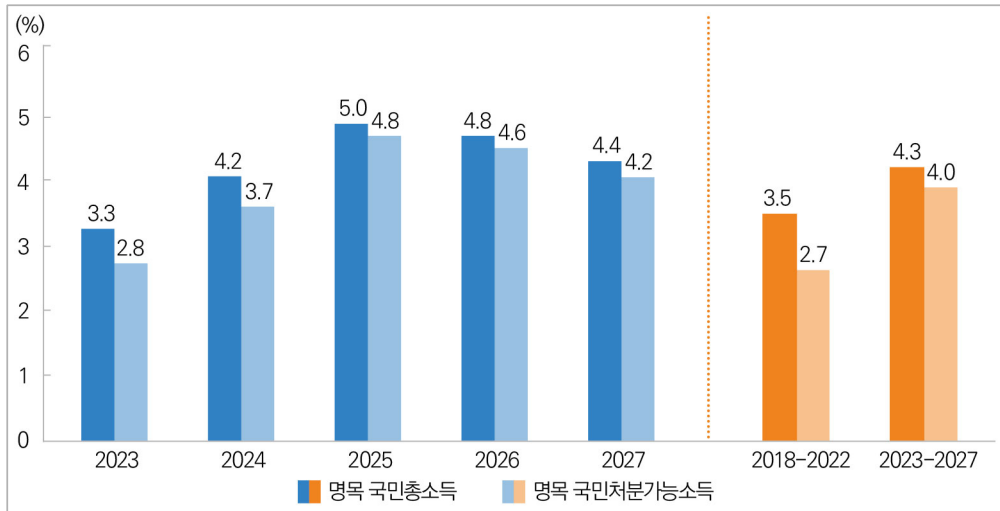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명목 국민총소득은 해외수취자본소득의 증가로 안정적 성장세 전망

- 향후 5년(2023~2027년)동안 국민총소득은 연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민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국민총소득 대비 연평균 0.3%p 낮을 것으로 전망



[중기 명목 국민총소득(GNI)과 국민처분가능소득(NDI)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24년 취업자 수는 23.7만명(0.8%) 증가, 취업자 수 증가세는 지속 둔화할 전망

- 2023년 취업자 수는 32.9만명(1.2%) 증가가 전망된다는 점에서, 2024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대비 10.2만명(0.4%p) 축소
-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는 연평균 20.7만명(0.7%) 증가하여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27.3만명 증가) 대비 증가폭 축소
- 2023년 32.9만명 증가를 기록한 후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 둔화하여 2026년부터 10만명대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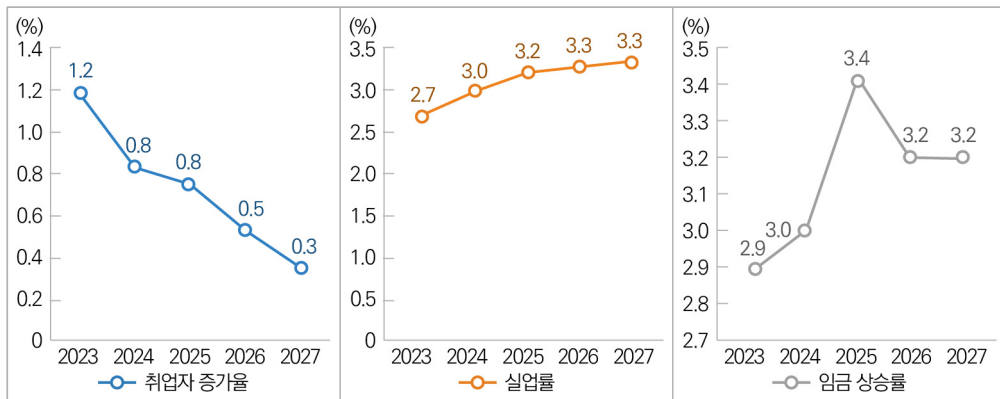
□ 2024년 실업률은 3.0%를 기록할 것이며, 향후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 전망

- 2023년 실업률은 2.7%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2024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3%p 상승한 수치
- 2023~2027년 실업률은 평균 3.1%를 기록하여 지난 5년(2018~2022년 평균 3.6%) 대비 0.5%p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다만, 2023년 2.7%로 저점 기록 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3.0% 상승할 전망

- 2023년 임금상승률은 2.9%로 전망되어, 2024년 임금상승률은 전년 대비 0.1%p 상승
- 2023~2027년 임금은 연평균 3.1% 상승하여 지난 5년(2018~2022년 평균 3.8%) 대비 0.7%p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고용 항목별 변화 전망(2023~20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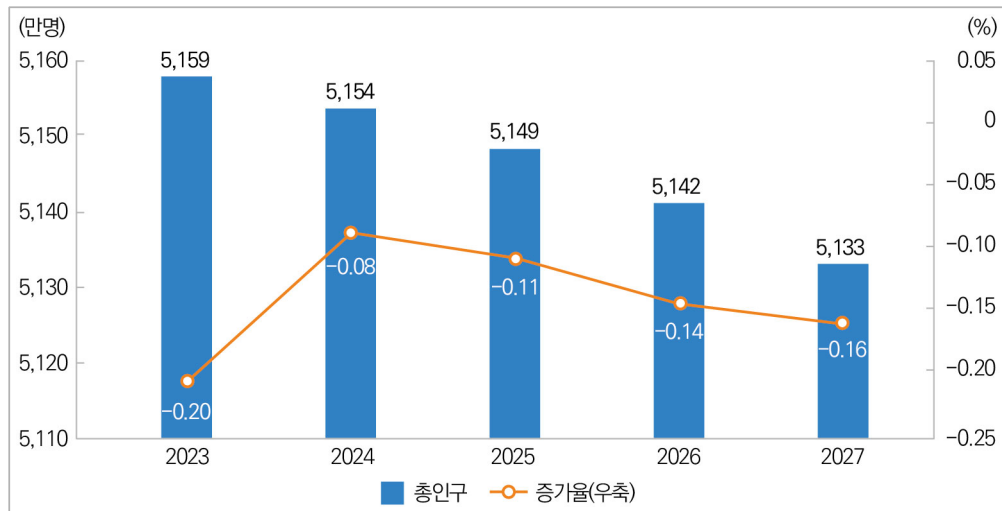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3~2027년 인구는 출산율의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 영향으로 2023~2027년 기간의 우리나라 총인구는 연평균 0.14% 감소 전망
 -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7년 0.69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로 사망자가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 전망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부모 급여 등 정책적 노력 및 국제 인구 순유입 증가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저출산 지속, 기대 자녀 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총인구 및 증가율 전망(2023~2027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 I 부 동향]

제1장 분배국민소득	3
제2장 국민총소득	20
제3장 고용	27
제4장 인구	33

[제 II 부 2024년 및 중기 전망]

제1장 경제전망의 수정 요인	41
제2장 피용자보수	45
제3장 영업잉여	50
제4장 고정자본소모	54
제5장 순생산 및 수입세	58
제6장 국민총소득	64
제7장 고용량	72
제8장 임금상승률	81
제9장 인구	86

[BOX 1] 생산 및 수입세 구성	17
[BOX 2] 국민소득지표	26
[BOX 3] 인구 정점	37
[BOX 4] 가계부문 처분가능소득	71
[BOX 5]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	91



[제 I 부]

[표 I-1]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분배와 처분 25
[표 I-2] 합계출산율 35
[표 I-3] 혼인 건수 및 증감률 36

[제 II 부]

[표 II-1] 2023년 국내총소득 수정 전망(구성비) 42
[표 II-2] 임금근로자 증가율 및 임금상승률 전망치 46
[표 II-3] 명목GDP 성장률 전망 48
[표 II-4] 주요 세목의 2023년 7월 국세수입 실적 60
[표 II-5]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본원소득수지 66
[표 II-6] 1인당 국민총소득 전망 70

[제 I 부]

[그림 I -1] 명목 국내총소득(GDI) 구성의 변화	3
[그림 I -2] 피용자보수 및 명목GDP 대비 비중	5
[그림 I -3] 영업잉여 및 명목GDP 대비 비중	7
[그림 I -4] 제도부문별 영업잉여 동향	7
[그림 I -5] 영업잉여와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8
[그림 I -6] 자영업자 및 혼합소득 동향	9
[그림 I -7] 고정자본소모 및 명목GDP 대비 비중	10
[그림 I -8] 고정자산 유형별 감가상각률 및 비중	11
[그림 I -9] 고정자본소모(실질 및 명목) 및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증가율	12
[그림 I -10] 고정자산 유형별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증가율	13
[그림 I -11] 국민계정상 조세 및 보조금의 분류 체계	15
[그림 I -12] 순생산 및 수입세 및 명목GDP 대비 비중	15
[그림 I -13]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추이	16
[그림 I -14] GNI와 1인당 GNI	20
[그림 I -15] GDI와 GNI 증가율 비교	20
[그림 I -16] 국외수취 및 지급 요소소득	21
[그림 I -17]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1
[그림 I -18] GDI 대비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2
[그림 I -19]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요인	22
[그림 I -20] OECD 국가별 1인당 GNI와 1인당 GDP	22
[그림 I -21] 국민처분가능소득(NDI)	23
[그림 I -22] GNI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	23
[그림 I -23]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경제주체별 비중	24
[그림 I -24] 경제주체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24
[그림 I -25] 취업자 수 변화	27
[그림 I -26]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	28
[그림 I -27] 실업률 변화	28



[그림 I-28]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29
[그림 I-29] 서비스업 특성별 취업자 수 증감	29
[그림 I-30]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29
[그림 I-31]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30
[그림 I-32] 빈일자리 변화	30
[그림 I-33]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 변화	31
[그림 I-34] 상용직 임금변화 분해	32
[그림 I-35] 임시·일용직 임금상승률 분해	32
[그림 I-36] 2022년 및 2023년 상반기 산업별 임금상승률	32
[그림 I-37] 총인구	33
[그림 I-38] 유소년 인구수	34
[그림 I-39] 고령자 인구수	34
[그림 I-40]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35
[그림 I-41] 연도별 내국인 외국인 추이	36

[제 II 부]

[그림 II-1] 2023년 국내총소득 전망의 분배부문별 기여도	42
[그림 II-2] 2024년 고용전망 비교	43
[그림 II-3] 취업자 수 증가율 비교	44
[그림 II-4] 임금상승률 비교	44
[그림 II-5] 피용자보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47
[그림 II-6] 중기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	49
[그림 II-7] 고정자본소모 주요 결정 요인	51
[그림 II-8] 코스피 상장사 분기별 영업이익 현황	51
[그림 II-9] 중기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53
[그림 II-10] 영업잉여 증가율 예측치	53
[그림 II-11] 고정자본소모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55

[그림 II-12] 중기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전망	56
[그림 II-13]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예측치	57
[그림 II-14]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59
[그림 II-15] 국세수입 실적과 순생산 및 수입세 추이	60
[그림 II-16] 중기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전망	61
[그림 II-17] 중기 순생산 및 수입세의 명목GDP 대비 비중 전망	62
[그림 II-18] 순생산 및 수입세 예측치	63
[그림 II-19] 국민총소득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65
[그림 II-20]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본원소득수지	66
[그림 II-21] 국외경상이전과 이전소득수지	66
[그림 II-22] 순대외금융자산	67
[그림 II-23]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67
[그림 II-24] 체류외국인 현황	68
[그림 II-25] 외국인 취업자의 한국-모국 임금 격차	68
[그림 II-26]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구성	68
[그림 II-27] 중기 국민총소득(GNI) 및 국민처분가능소득(NDI) 성장율 전망	70
[그림 II-28] GDP와 취업자 수의 상관관계(1998~2023년)	73
[그림 II-29]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	74
[그림 II-30] 노인일자리 수 변화	74
[그림 II-31] 비전문취업(E-9) 쿼터 변화	75
[그림 II-32] 숙련일자리(E-7-4) 쿼터 변화	75
[그림 II-33] 고용지표와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	76
[그림 II-34] 중기 취업자 수 증감 전망	78
[그림 II-35] 중기 실업률 전망	79
[그림 II-36] 취업자 수 증감 전망	80
[그림 II-37] 실업률 변화 전망	80
[그림 II-38] 임금상승률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83
[그림 II-39] 중기 임금상승률 전망	84



[그림 II-40] 임금상승률 전망	85
[그림 II-41] 총인구 및 증가율 전망(2023~2027년)	87
[그림 II-42]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89
[그림 II-43] 출생아 수(2010~2022년)	89
[그림 II-44] 월별 혼인 추이	90
[그림 II-45] 평균 초혼 연령	90
[그림 II-46] 평균 출산 연령	90
[그림 II-47] 기대여명 전망	92
[그림 II-48] 월별 사망 추이(2020~2023년)	93
[그림 II-49] 사망자 수 추이(2010~2022년)	94
[그림 II-50] 연간 내·외국인 국제이동 추이	95
[그림 II-51] 국제인구 순유입 추이(2010~2022년)	96
[그림 II-52] 성별 연령별 국제순이동률	96

I 동향

제1장 분배국민소득

제2장 국민총소득

제3장 고용

제4장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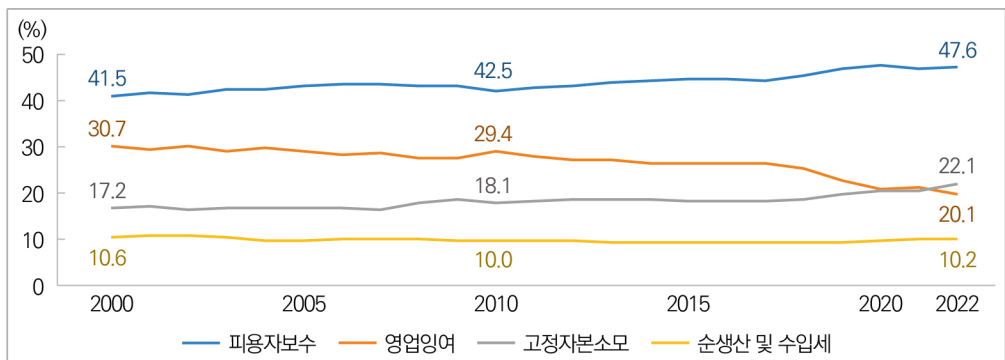
분배국민소득

제1절 명목 국내총소득

- **명목 국내총소득**은 생산활동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및수입세로 1차 분배된 값으로 국내총생산과 동일
- 최근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영업잉여의 비중이 감소**

최근 국내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 이하 GDI)의 분배는 노동소득과 고정자본소모의 비중 증가, 영업잉여의 비중 감소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가 국내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1%p와 4.9%p 증가하였다. 순생산 및 수입세는 국내총소득의 10% 내외로 안정적인 반면, 기업 및 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영업잉여는 2018년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여 2022년 기준 20.1%를 기록하였다. 명목 국내총소득은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과 동일한 값을 의미한다.

[그림 I-1] 명목 국내총소득(GDI) 구성의 변화



자료: 한국은행

허가형 인구조류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제2절 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는 한 국가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중 노동을 대가로 분배되는 임금과 급여, 부가급부 등을 의미¹⁾
- **2022년 피용자보수**는 1,029.7조원으로 명목GDP의 47.6%를 차지
 - 피용자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5% 증가
 - 피용자보수 비중은 2021년(47.2%) 보다 0.4%p 상승

(전년대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22
증가율	5.3	5.2	2.4	5.0	4.8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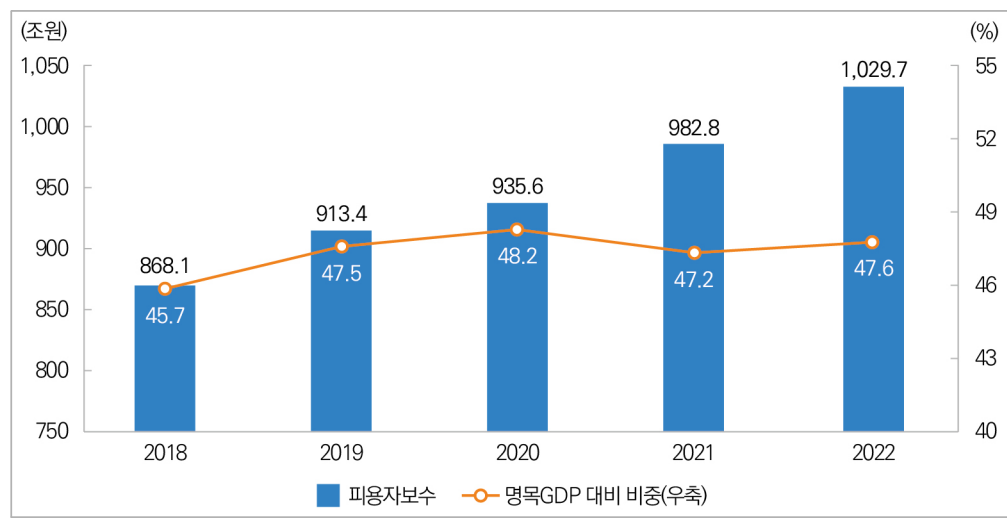
2022년 기준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1,029.7조원으로 역대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하였다. 또한, 2022년 명목 GDP 성장률(3.9%)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명목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은 2021년 47.2%에서 2022년 47.6%로 상승하였다.

2018년 이후 피용자보수는 연평균 약 4.5%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명목GDP(또는 GDI) 성장률²⁾인 3.3% 대비 약 1.2%p 높은 수치이며, 그 결과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추세적 상승세를 나타내며 2018년 45.7%에서 2022년 47.6%로 1.9%p 상승하였다. 빠른 상승세를 보이던 피용자보수 비중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48.2%로 정점을 기록 후 2021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22년에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 1) 피용자보수는 임금 및 급여와 각종 수당, 통근비 등 보조수당, 특별보너스, 피고용자가 받는 커미션, 봉사료, 기타 피고용자 가족들이 사용하는 주거서비스, 피고용자가 작업장 밖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유니폼, 피고용자가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차량 또는 기타 내구재의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피고용자가 무상 또는 할인가격으로 이용하는 경우, 피고용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스포츠 및 휴양시설, 통근수송, 주차, 피고용자 자녀의 탁아소, 피고용자가 주택, 가구 등을 구입할 때 고용주가 저리 대출을 제공한 경우 고용주의 이자부담액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수혜자로 하여 사회보장기구나 민간기금, 사회보험기금 등에 납부하는 실제 사회부담금과 고용주가 비기금형 사회수혜금으로 제공하는 귀속 사회부담금을 포함한다. (자료: 연미숙, 「분기 분배국민소득 집계방법 연구」, 한국은행, 2002)
- 2)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은 동일한 값이며, 국민소득의 분배를 논하는 본 고에서는 국내총소득을 분배 국민소득의 기준지표로 설명한다. 다만 부문간 비중 혹은 성장을 비교시 GDP가 보다 보편적인 경우에는 혼용하여 설명한다.

[그림 I-2] 피용자보수 및 명목GDP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제3절 영업잉여

- **영업잉여**는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이익
 -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하여 산출
- **2022년 영업잉여**는 434.7조원으로 명목GDP의 20.1%를 차지
 - 영업잉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6% 감소
 - 명목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은 2021년(21.6%) 보다 1.5%p 하락

(전년대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22
증가율	-1.1	-9.0	-7.1	8.7	-3.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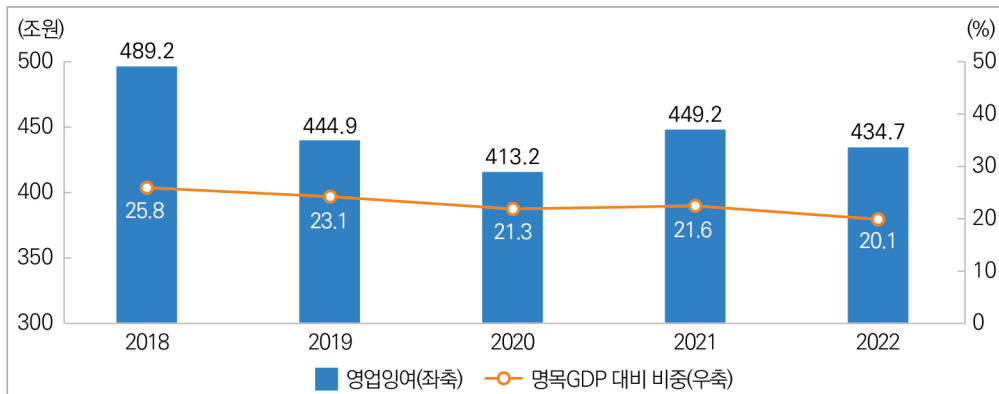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³⁾ 단, 자영업자 등 가계 비법인 기업의 소득에는 자본에 대한 대가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섞여 있는데, 국민계정에서는 이를 영업잉여에 포함시키기는 하되 혼합소득(mixed income)이라는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영업잉여는 한 해 동안의 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잔차로 구한다.

1980년 이후 영업잉여 비중은 장기추세로 감소하고 있다. 자본의 한계수익률이 낮아지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업잉여의 비중뿐 아니라 절대적 수준마저 감소하는 추세다. 2018~2022년 사이에는 2021년 한 해를 제외하면 영업잉여가 매년 감소하여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2022년 수준 값은 2017년 대비 12.1% 하락하였고 명목GDP 대비 비중은 26.9%에서 20.1%로 6.8%p 하락하였다.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3) 한국은행은 이 밖에도 영업잉여를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잉여로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금융자산, 토지, 기타유형의 비생산자산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이자, 임료, 기타 재산소득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규정한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 p.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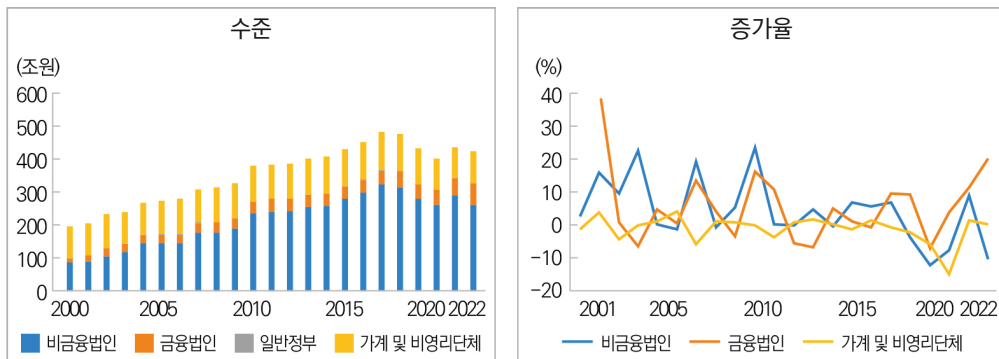
[그림 I-3] 영업잉여 및 명목GDP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영업잉여의 제도부문별 구성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비금융법인의 영업 잉여가 전체의 6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22.8%, 금융법인이 15.2%, 정부가 0.2%를 차지한다. 2000년에 비금융법인이 44.4%,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49.6%, 금융법인이 5.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법인 비중이 확대되고 가계 비중이 축소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의 영업 잉여 하락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문은 비금융법인으로, 동 부문의 영업잉여는 2022년 9.2% 하락하는 등 2021년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매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였다.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부문은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가계 및 비영리단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201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3.9% 하락하였다가 이후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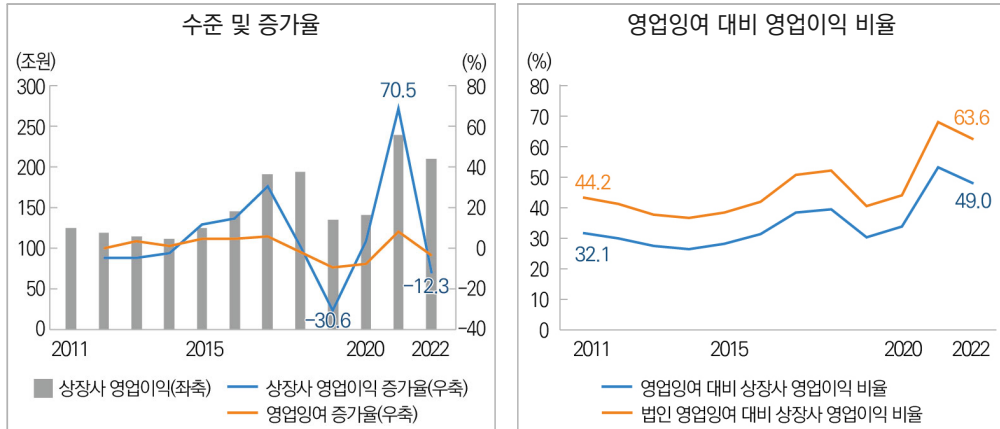
[그림 I-4] 제도부문별 영업잉여 동향



자료: 한국은행

법인 영업잉여는 기업 손익계산서의 이익항목 중 영업이익과 개념상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회계자료가 제공되는 코스피(KOSPI) 상장기업의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잉여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2019년(30.6% 하락), 2021년(70.5% 증가), 2022년(12.3% 하락)의 증감은 영업잉여의 증감률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전체 영업잉여 대비 상장기업 영업이익의 비율은 상장기업 영업이익 규모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2021년 영업이익이 70.5% 증가한 결과 영업잉여 대비 영업이익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54.1%를 기록하였고 2022년 영업이익이 12.3% 하락함에 따라 영업잉여 대비 비율도 49.0%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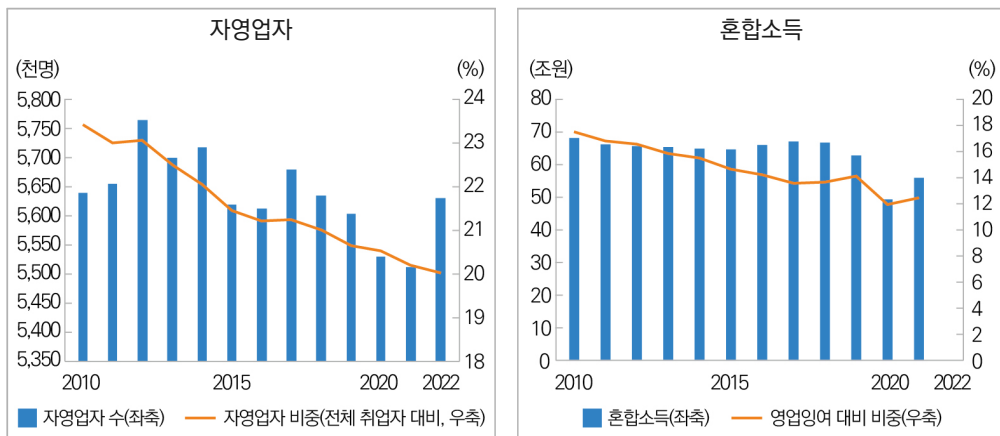
[그림 I-5] 영업잉여와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자료: 한국은행, Fn가이드

최근의 영업잉여 감소세는 자영업자 비중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다. 영업잉여에는 자영업자의 혼합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영업자가 감소하면서 영업잉여 총량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0년 23.5%에서 2022년 20.1%로 3.4%p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잉여에서 혼합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7.5%에서 2021년 12.4%로 5.1%p 하락하였다. 단,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2022년에는 자영업자 수도 10만명 이상 증가하여 2022년 혼합소득은 2021년 대비 증가할 수 있다.

[그림 I-6] 자영업자 및 혼합소득 동향



주: 혼합소득은 2021년까지지만 자료가 공개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제4절 고정자본소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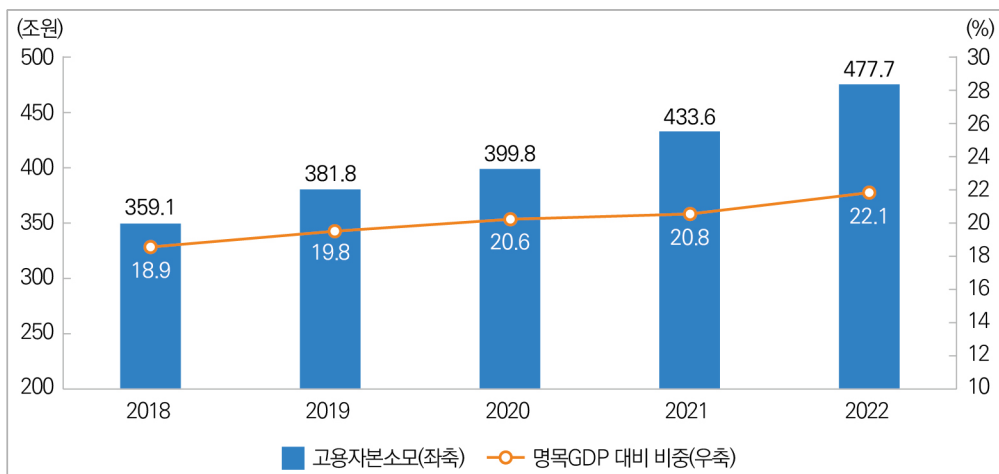
- **고정자본소모**는 생산활동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
- **2022년 고정자본소모**는 477.7조원으로 명목GDP의 22.1%를 차지
 - 고정자본소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7.1% 증가
 -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은 2021년(20.8%) 보다 1.3%p 증가

(전년대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22
증가율	5.7	6.3	4.7	8.5	10.2	7.1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는 한 해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소모된 고정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생산활동에 사용된 고정자산이 마모되거나 진부화되어 가치가 감소하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구조가 자본집약형으로 자본의 비중이 커질수록 고정자본소모도 커지게 된다. 명목GDP에서 고정자본소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7.2%에서 2022년 22.1%로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장기추세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고정자본소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명목GDP의 연평균 증가율 3.3%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림 I-7] 고정자본소모 및 명목GDP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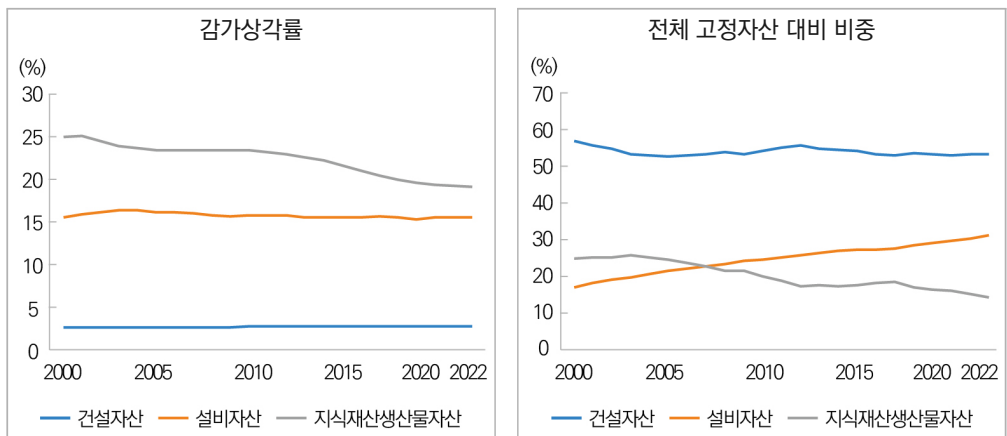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고정자본소모는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3종의 고정자산(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 재산생산물자산)의 실질 가치 감소분을 화폐액으로 평가한 값으로, 각 자산의 실질 가치 감소분에 대해 연도 자본재 가격이 반영된 (자산유형별)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를 곱하고 합산하여 산출된다. 고정자산의 실질 가치 감소분은 자본축적 방정식⁴⁾에서 감가상각률과 전기의 자본스톡을 곱한 항(δK_{t-1})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감가상각률은 관측되는 값이 아니므로 δK_{t-1} 은 당해 연도 고정자본형성(I_t)에서 당해 연도 고정자본스톡 변화량($K_t - K_{t-1}$)을 차감한 값으로 추정된다.⁵⁾ 이렇게 추정된 고정자산의 실질 가치 감소분을 다시 전년도 자본스톡(K_{t-1})으로 나누면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률(δ)도 추정할 수 있다.

기존 자산이 진부화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감가상각률은 고정자산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기술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지식재산생산물자산의 감가상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술발전의 영향을 덜 받는 건설자산의 감가상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림 I-8] 고정자산 유형별 감가상각률 및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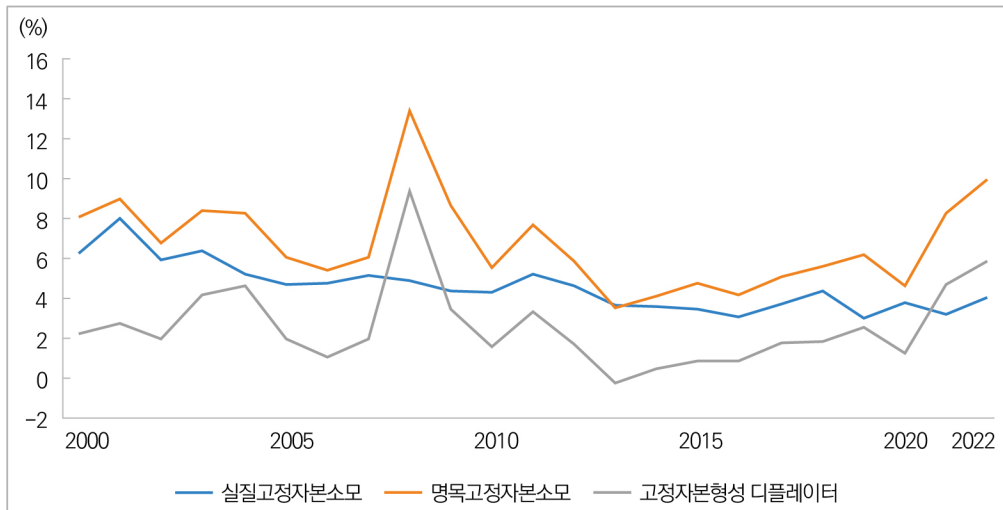
4) $K_t = I_t + (1 - \delta)K_{t-1}$, I_t 는 당기의 고정자본형성(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5) $\delta K_{t-1} = I_t - (K_t - K_{t-1})$

그러나 자산 유형에 관계없이 감가상각률은 변동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실질로 계산한 고정자본소모(각 유형 고정자산의 실질 가치 감소분의 합)의 증가율도 변동성이 크지 않다. (명목)고정자본소모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을 고정자본소모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등락폭을 보인다. 가령 2008~2009년과 2021~2022년의 이례적으로 높은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실질 고정자본소모가 아니라 디플레이터의 움직임으로 주로 설명된다. 고정자본소모는 특히 2022년에 10.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건설자산 등의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가 대폭 상승한 결과로 보이며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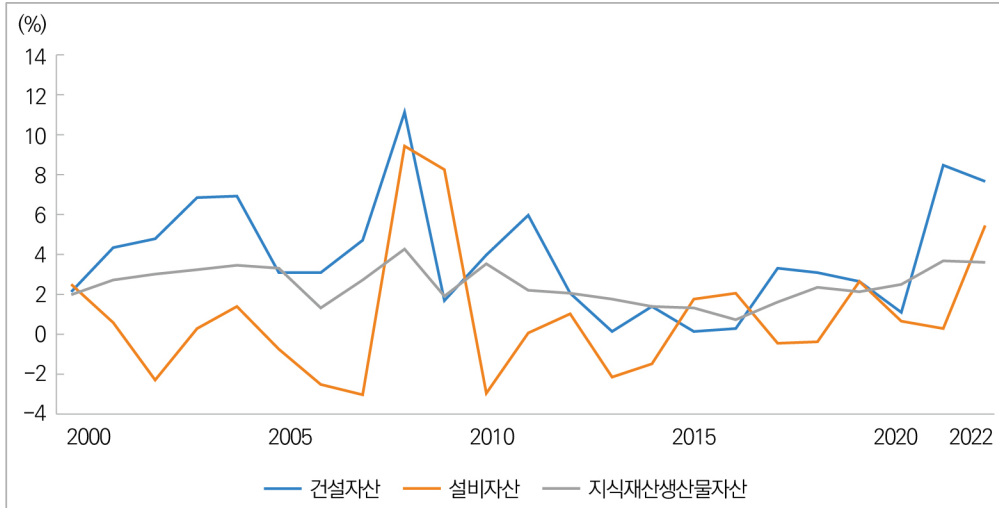
한편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지식재산생산물자산 투자 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연구개발 투자도 활발해지고 기존 자본스톡의 진부화도 가속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9] 고정자본소모(실질 및 명목) 및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0] 고정자산 유형별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제5절 순생산 및 수입세

- **순생산 및 수입세**는 국내총소득 중 정부로 1차 분배되는 몫을 의미
- **2022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219.7조원으로 명목GDP의 10.2%를 차지
 - 순생산 및 수입세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 증가
 -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은 2021년(10.3%) 보다 0.1%p 하락

(전년대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22
증가율	2.7	1.5	4.2	11.7	2.4	4.4

국민계정체계에서 조세는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⁶⁾,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그리고 자본세로 분류하고, 보조금(subsidies)⁷⁾은 생산물보조금과 기타생산보조금으로 분류한다([그림 I-11] 참고).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에서 보조금을 제한 값에 해당하는데, 이는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본원소득 중 정부로 1차 분배되는 몫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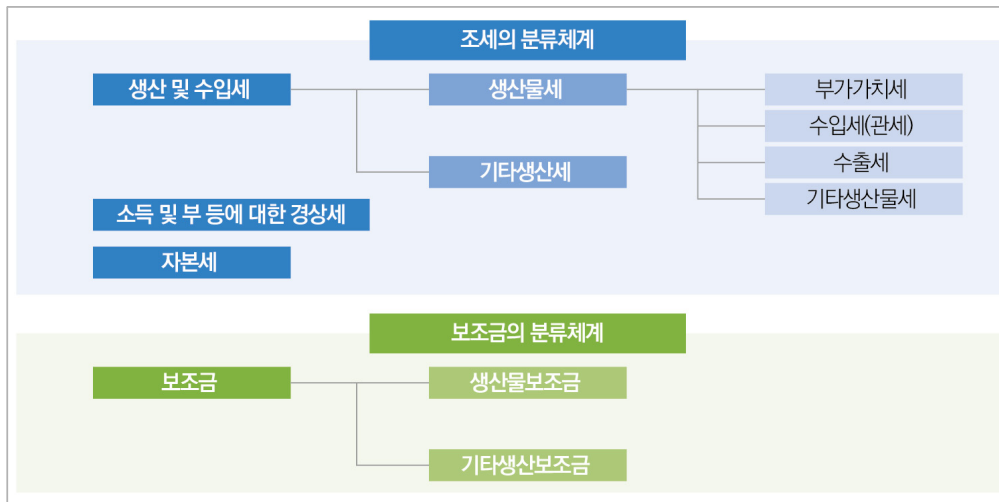
[그림 I-12]는 지난 5년간의 순생산 및 수입세 실적과 명목GDP 대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2022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219.7조원으로, 2018년(181.8조원)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나타났다.

2018년 명목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약 9.6%였으나 2021년에는 10.3%까지 상승하였다. 2000년대 이후 순생산 및 수입세의 GDP 대비 비중은 9.4%~11.1% 사이에서 변동하였으며, 평균 비중은 9.9% 수준이다. 2013년에 명목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이 9.4%를 기록한 이래 정부로 분배되는 몫이 지속하여 증가해 왔으나, 2022년에는 소폭(0.1%p) 하락했다.

김민혁 경제분석관(mh.k@assembly.go.kr, 6788-4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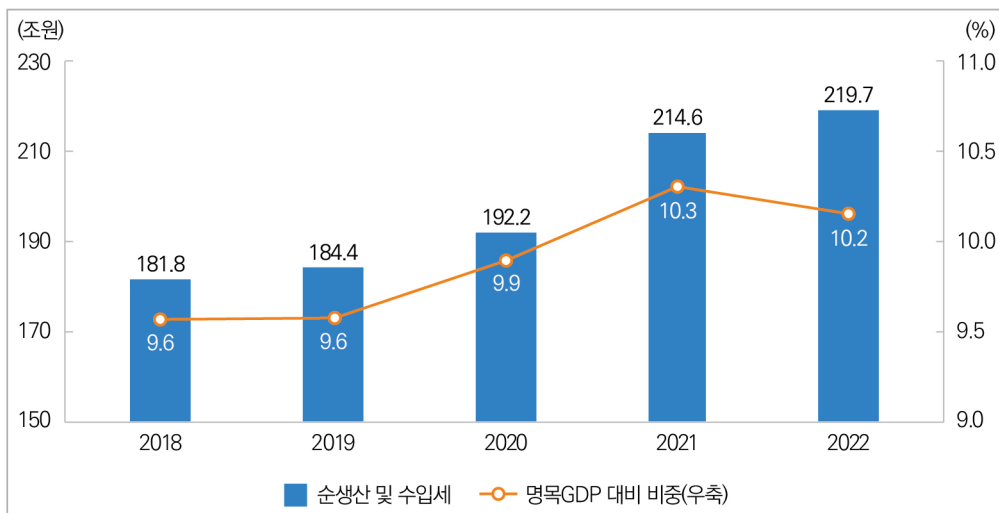
- 6) 국민계정체계에서는 간접세 대신에 생산 및 수입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각종 조세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고, 경제학에서도 간접세 등의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성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하거나 기타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고,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이다.
- 7)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인데, 대중교통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석탄생산에 대한 보조금 등이 있다. 보조금은 재화 또는 서비스가 생산·판매 또는 수입되었을 때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 한 단위당 지급되는 보조금인 생산물보조금과 그 밖에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수취하는 보조금으로서 지급급여 또는 고용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기타생산보조금으로 구분한다.

[그림 I-11] 국민계정상 조세 및 보조금의 분류 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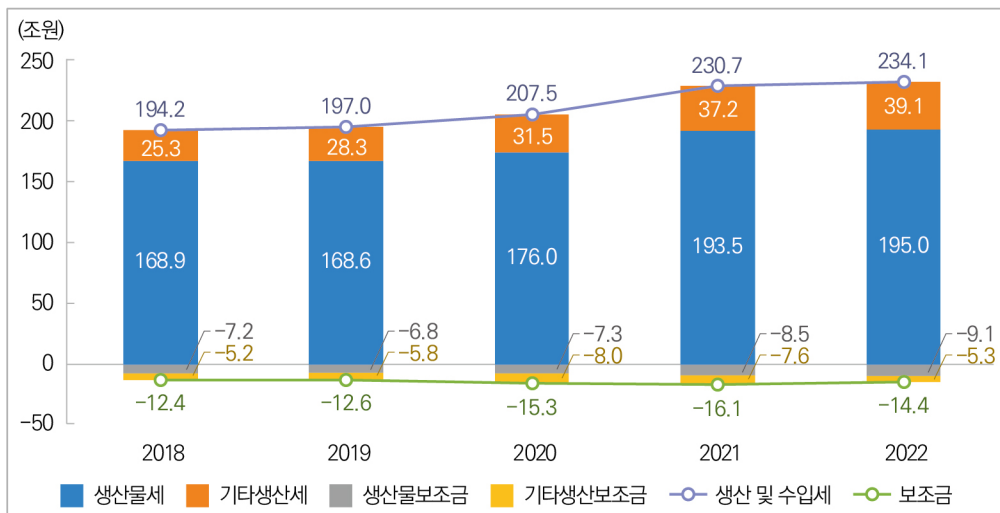
[그림 I-12] 순생산 및 수입세 및 명목GDP 대비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I-13]은 지난 5년간의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생산 및 수입세는 2018년(194.2조원)부터 2022년(234.1조원)까지 매년 증가했으며, 그 중 자산의 소유·이용에 대한 조세인 기타생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13.0%)에서 2022년(16.7%)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보조금은 2018년(12.4조원)부터 2021년(16.1조원)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는 기타생산보조금이 전년대비 2.3조원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0.6% 하락한 14.4조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I-13]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BOX 1] 생산 및 수입세 구성

□ 우리나라의 생산 및 수입세는 국세 10종과 지방세 10종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물세는 부가가치세, 수입세(관세) 또는 기타생산물세로 분류
 - 국세 8종(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7종(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 기타생산세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포함
 - 국세 4종(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6종(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 일부 세목은 생산물세와 기타생산물세 모두에 해당
 - 국세 2종(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는 본세(本稅)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
 - 농어촌특별세 또한 부가세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및 경상세로 구분
 - 지방세 4종(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및 자동차세)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대상에 따라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
 - 지방교육세는 7개 지방세목에 대한 부가세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및 경상세로 구분
 - 주민세는 세원 구분(개인·사업소·종업원)에 따라 기타생산세와 경상세로 구분
 - 자동차세는 주행분은 생산물세로, 소유분은 용도에 따라 기타생산세와 기타경상세로 구분

[BOX 1] 생산 및 수입세 구성

[조세 체계와 국민계정체계에 따른 분류]

구분		국민계정체계에 따른 분류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경상세
			법인세	경상세
			상속·증여세	자본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생산물세
			개별소비세	생산물세
			주세	생산물세
			인지세	기타생산세
			증권거래세	생산물세
	관세	생산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생산물세		
	교육세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농어촌특별세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종합부동산세	기타생산세			
지방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생산물세
			등록면허세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레저세	생산물세
			지방소비세	생산물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기타생산세
			지방교육세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시군세	주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재산세	기타생산세	
		자동차세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담배소비세	생산물세	
		지방소득세	경상세	

주: 음영은 생산 및 수입세에 해당하는 세목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1년도의 생산 및 수입세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230.7조원 중 생산물세가 193.5조원(83.9%)을 차지했고, 기타생산세가 37.2조원(16.1%)으로 생산물세의 규모가 기타생산세의 5배 이상에 달한다.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순생산 및 수입세를 구성하는 세목별 과거 실적 추이를 파악하고 이로부터 주요 결정요인이 되는 거시경제변수를 선별해낼 필요가 있으나, 한국은행은 순생산 및 수입세 산출에 활용된 세목별 실적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순생산 및 수입세의 구성비와 세목별 추이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BOX 1] 생산 및 수입세 구성

이에 국세수입 실적 자료⁸⁾로 대신하여 생산 및 수입세를 구성하는 세목들의 수입 규모를 살펴보았다. 생산물세 국세분의 경우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및 관세 순으로 수입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세분은 취득세, 지방소비세 순이었다. 기타생산세의 경우 국세분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분에서는 재산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산 및 수입세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2021년)]

(단위: 억원, %)

구분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세 목	수입 규모	(비중)	세 목	수입 규모	(비중)
국세	- 부가가치세	712,046	(53.8)	- 종합부동산세	61,302	(86.5)
	- 교통·에너지·환경세	165,984	(12.5)	- 인지세	9,597	(13.5)
	- 증권거래세	102,556	(7.8)			
	- 개별소비세	93,638	(7.1)			
	- 농어촌특별세 ¹⁾	89,000	(6.7)			
	- 관세	82,270	(6.2)			
	- 교육세 ¹⁾	51,039	(3.9)			
	- 주세	26,734	(2.0)			
	계	1,323,267	(100.0)	계	70,899	(100.0)
지방세	- 취득세	337,166	(46.0)	- 재산세	149,743	(78.4)
	- 지방소비세	178,166	(24.3)	- 주민세 ¹⁾	22,829	(12.0)
	- 자동차세 ¹⁾	83,546	(11.4)	- 지역자원시설세	18,411	(9.6)
	- 지방교육세 ¹⁾	75,986	(10.4)			
	- 담배소비세	35,579	(4.9)			
	- 등록면허세 ¹⁾	21,550	(2.9)			
	- 레저세	1,060	(0.1)			
		계	733,053	(100.0)	계	190,983

주: 1) 해당 세목은 단일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생산물세분, 기타생산세분 또는 경상세분으로 배분되는데, 표에서는 생산물세분이 포함되는 경우 생산물세로 분류하였고, 생산물세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생산세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통계는 현금주의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반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국민계정통계는 발생주의에 기반하여 작성되므로 통계상 차이가 발생한다.

제2장

국민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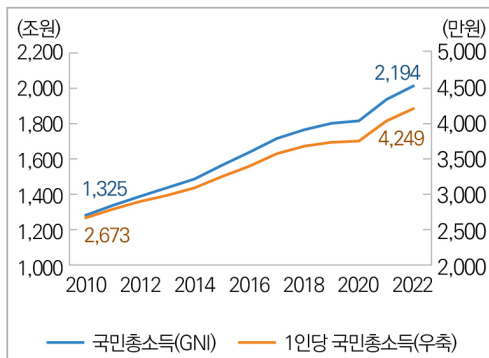
- 2022년 **국민총소득**은 지난 5년의 연평균 성장률(3.5%) 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
 - 국민총소득(GNI) = 국내총소득(GDI)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2022년 **국민처분가능소득**은 지난 5년의 연평균 성장률(2.7%)과 유사한 수준
 - 국민처분가능소득(NDI) = 국내총소득(GDI)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고정자본소모

(전년대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22
국민총소득	3.4	1.9	0.9	7.5	4.3	3.5
국민처분가능소득	2.8	0.9	0.1	7.1	2.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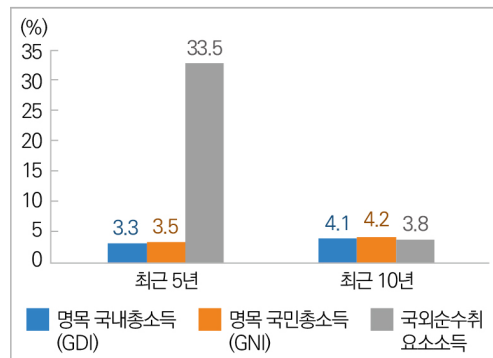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은 지난 5년간 3.5% 증가하여 국내총소득 증가율보다 0.2%p 높았다. 두 지표의 차이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으로만 나타나는데, 특히 지난 5년 동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연평균 33.5% 증가하여 GNI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14] GNI와 1인당 GNI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5] GDI와 GNI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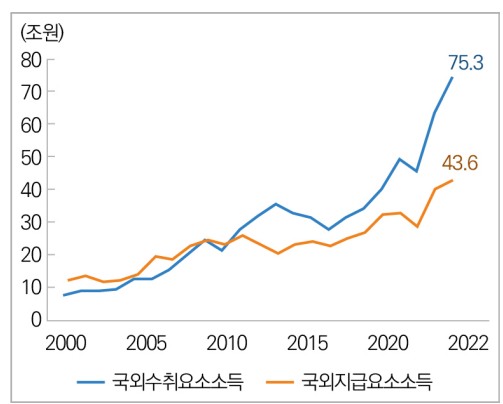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허가형 연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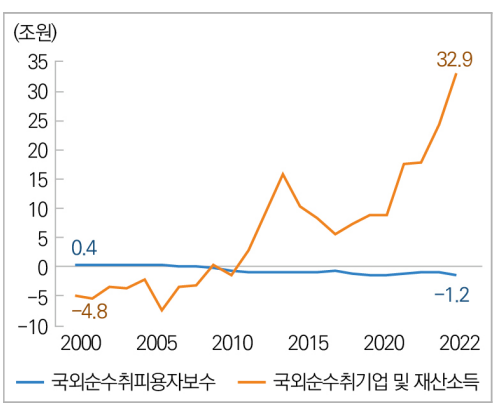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하는 국외지급요소소득과 국외에서 들어오는 국외수취요소소득으로 구분되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외에서 들어오는 국외수취요소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GNI 증가율이 국내총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졌다. 이를 요소소득으로 구분하여보면,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와 국외순수취 영업잉여(기업 및 재산소득)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가 영업잉여보다 컸으며, 국외순수취 영업잉여는 상당한 적자상태였다. 하지만, 국내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인력이 국내 거주자의 해외근로보다 늘어남에 따라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⁹⁾는 적자가 되고, 반면 국내 자본의 해외 시장 투자가 증가함에 따른 국외순수취 영업잉여¹⁰⁾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국외순수취 영업잉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2022년에는 32.9조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I-16] 국외수취 및 지급 요소소득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7] 국외순수취요소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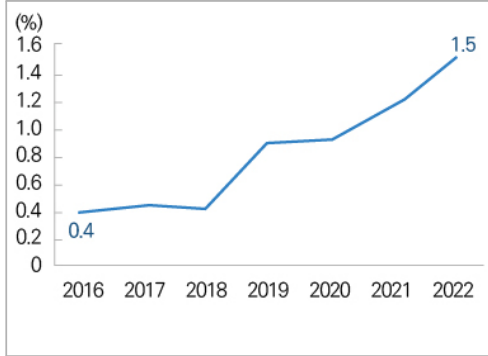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따라서 국내총소득 대비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비중은 2010년 0.1%에서 2016년 0.4%, 2022년 1.5%로 증가한다. 최근 증가한 국외수취 영업잉여는 해외 투자소득 증가에 기인하는데, 2022년 국외로부터의 기업 및 재산소득은 전년대비 17.3% 증가하였다. 특히 증권투자 소득수지는 2021년 26억불에서 2022년 54억불로 104.6% 증가했으며, 직접투자 소득수지는 2021년 105억불에서 2022년 118억불로 12.4%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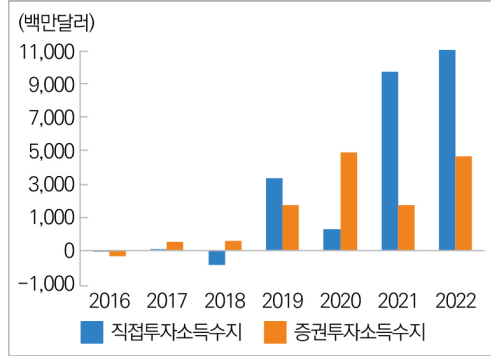
9)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는 국외로부터의(에 대한) 급료 및 임금을 의미한다.
 10) 국외순수취 영업잉여는 국외로부터의(에 대한) 투자소득으로 기업 및 재산소득이다.

[그림 I-18] GDI 대비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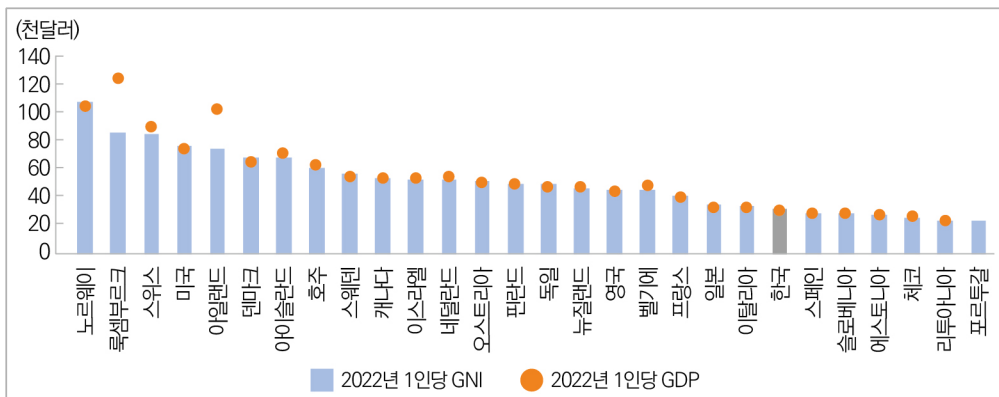
[그림 I-19]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요인



자료: 한국은행

1인당 GNI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구매력을 파악하는데 쓰이므로 일반적으로 달러 표시를 이용한다. 2022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2,679 달러(명목)로 OECD 중 22위이다. 1인당 GDP는 32,255달러로 GNI 순위와 동일하며,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1인당 GDP의 1.3%에 해당하였다. OECD 국가의 1인당 GNI와 GDP를 비교하면 GNI가 더 높은 국가는 28개국 중 12개국이다. 특히 일본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GDP의 6.4%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덴마크와 스웨덴도 3.8%로 비중이 높았고, 독일(3.4%), 노르웨이(3.1%), 프랑스(2.9%), 미국(1.5%)이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외지급 요소소득이 더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31.3%), 아일랜드(-27.5%), 체코(-7.7%), 아이슬란드(-5.1%) 등 이었다.

[그림 I-20] OECD 국가별 1인당 GNI와 1인당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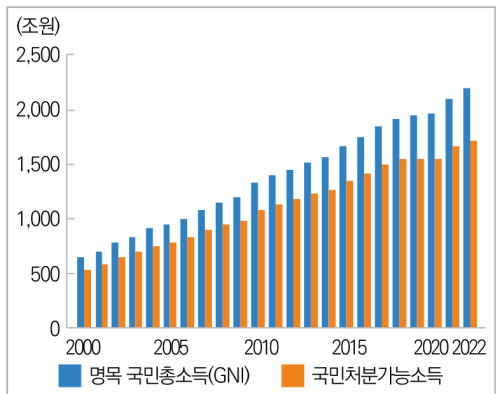


자료: Worldbank

국민처분가능소득(Naional Disposable Income, 이하 ‘NDI’)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총소득 중 처분가능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만, 고정자본소모는 포함하지 않으며,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인 국외순취요소소득을 더하고, 외국에 지급한 소득인 국외지급경상이전은 차감하여 산출한다. 국외지급경상이전은 국외순취요소소득과는 정반대 양상으로 2000년 이전에는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수취하는 소득이 더 많았으나, 이후로는 음(-)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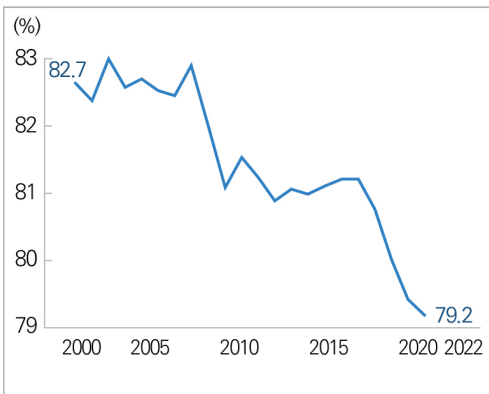
앞서 [그림 I-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정자본소모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NDI의 증가율을 낮추었다. 따라서 2000년에는 GNI 대비 NDI의 비중이 82.7%였으나 2022년에는 79.2%로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면 GNI는 3.5%이고 NDI는 2.7%로 0.8%p 만큼 느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21] 국민처분가능소득(NDI)



자료: 한국은행

[그림 I-22] GNI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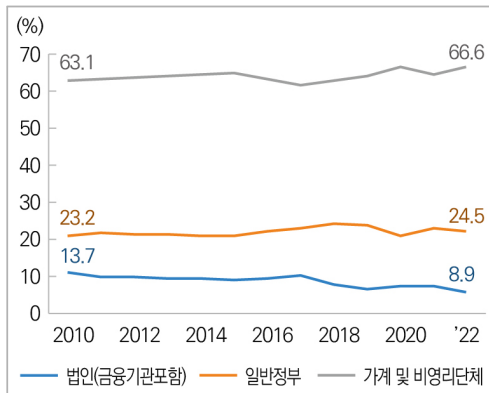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1) 국외순취경상이전은 1981년에는 명목 GDI 대비 비중이 10.6%로 높았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부터 음(-)의 값으로 바뀌었으며 2022년에는 -0.15% 수준으로 낮아졌다.

NDI는 2차 분배로 경제주체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일반 정부, 법인으로 구분한 경제주체별 비중을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NDI 중 가장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일반정부의 비중은 2010년 23.2%에서 2022년 24.5%로 1.3%p 증가에 그친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2010년 63.1%에서 2022년 66.6%로 3.5%p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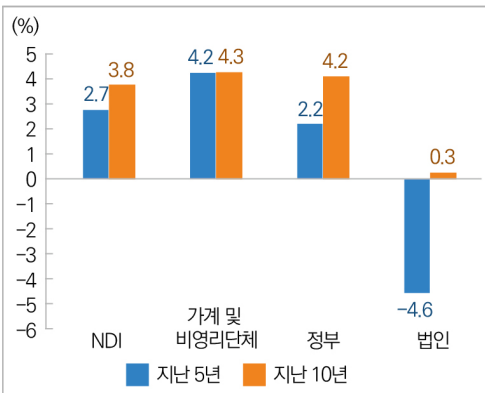
경제주체별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일반정부의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은 2.2%이지만,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4.2%로 전체 국민처분가능소득 증가율(2.7%)를 웃돌아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소비여력은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하였다. 반면 금융기관을 포함한 법인의 비중은 2010년 13.7%에서 2022년 8.9%로 4.8%p 하락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4.6%로 하향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22년의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의 증가율은 4.3%와 4.2%로 양호한데, 법인의 증가율은 0.3%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그림 I-23]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경제주체별 비중



자료: 한국은행

[그림 I-24] 경제주체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NDI의 처분은 최종소비지출과 순저축으로 구분되며, 최종소비지출의 주체는 민간과 정부로 구분된다. 2022년 기준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이며, 정부최종소비지출은 23.7% 였다. 최종소비지출되지 않고 남은 소득은 순저축에 해당하며, 순저축도 동일하게 제도부문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은 4.2%의 속도로 증가한 가운데,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낮았다. 이와 같이 NDI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최종소비지출은 가계의 저축 확대와 그에 따른 자산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저축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2.1%로 NDI의 증가율을 넘어섰다. 즉, 가계는 처분가능한 소득의 증가가 있었으며, 최종소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민간부문 순저축이 증가하였고 이는 자산시장이나 미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의 처분가능소득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2% 증가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연평균 7.5%씩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순저축은 2017년 순저축은 92조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3조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2.0%의 큰 폭 감소가 있었다. 정부의 순저축 감소는 경기변동시 재정지출 대응여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상세한 순저축 감소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I-1】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분배와 처분

(단위: 조원, %)

		2022	지난5년 연평균 증가율	지난10년 연평균 증가율
국민처분가능소득(NDI)		1,714	2.7	3.8
분배	가계 및 비영리단체	1,142	4.2	4.3
	정부	419	2.2	4.2
	법인(금융기관 포함)	153	-4.6	0.3
처분	민간최종소비지출	1,039	3.6	3.5
	정부최종소비지출	406	7.5	6.7
	순저축	269	-4.7	1.7
	- 가계 및 비영리단체	126	12.1	18.0
	- 정부	13	-32.0	-14.9
	- 법인(금융기관 포함)	129	-6.1	-0.5

자료: 한국은행

[BOX 2] 국민소득지표

□ 국민소득통계는 국가의 경제력과 국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

- 국내 생산활동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이며, 이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로 1차 분배되어 국내총소득(GDI)으로 집계
 -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은 동일한 값을 의미하며, 소득의 분배가 주요 검토대상인 소득부문에서는 GDP를 GDI로 표기

□ 소득지표를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실질구매력을 검토

- **국내총소득(GDI)**과 국외 소득을 고려한 **국민총소득(GNI)**, **국민처분가능소득(NDI)** 등을 통해 총소득과 소비 및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소득을 파악
 - 국민총소득(GNI)은 국내총소득(GDI)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순소득을 더하여 구함
 -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국민총소득(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고 고정자본소모를 제하여 구함

[국민소득지표 비교(2021년, 명목)]

(단위: 조원)

구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 소모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국내총소득(GDI/GDP)	2,080					
	983	449	215	434		
국민총소득(GNI)	2,104					
	983	449	215	434	23	
국민처분가능소득(NDI)	1,666					
	982	473	21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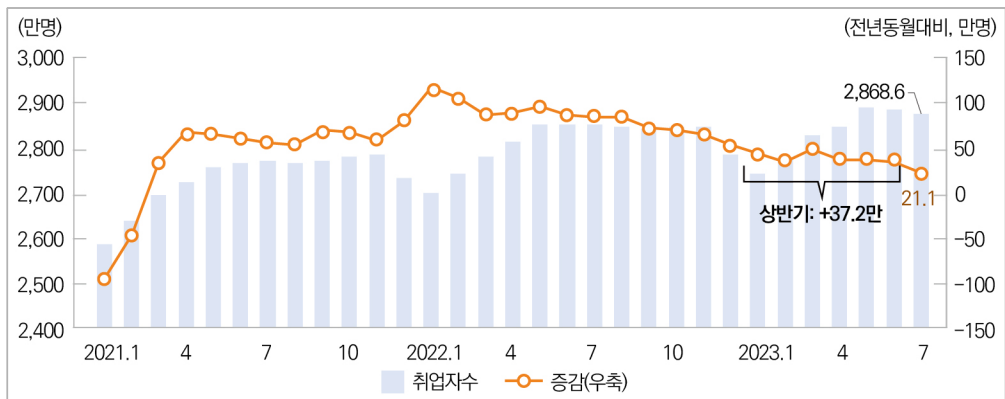
주: 국민처분가능소득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각각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에 포함
자료: 한국은행

제1절 고용량

- 2023년 상반기 고용량은 전년대비 양호한 증가세 시현
 -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 서비스업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하였고, 특히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큰 폭 증가
 -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어 7월 취업자 수는 29개월래 최소 증가폭 기록

2023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2,823.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7.2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2년 1월의 113.5만명 이후 추세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21.1만명 증가에 그쳐 29개월래 최소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그림 I-25] 취업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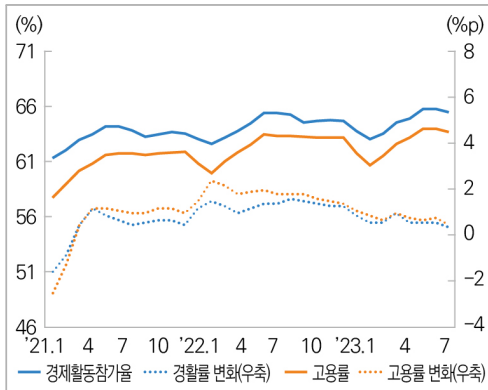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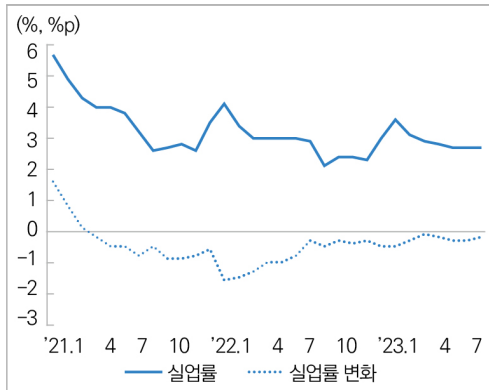
2023년 1~7월 주요 고용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양호한 개선세를 나타냈다.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3%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62.4%로 0.6%p 상승하였다. 고용률이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3.0%를 기록하였다. 다만, 양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세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둔화되는 상황이다.

[그림 I-26]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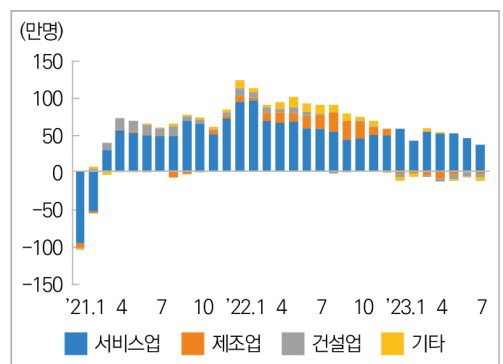
[그림 I-27] 실업률 변화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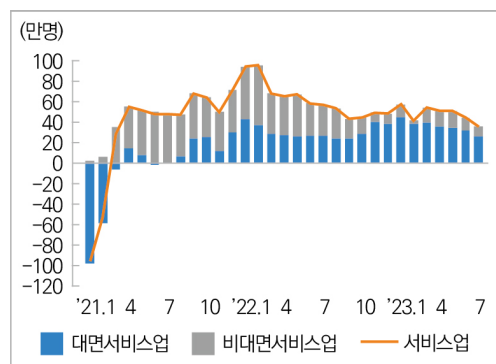
2023년은 서비스업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하였다. 2023년 1~7월 동안 서비스업 취업자는 44.2만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4.2만명)과 건설업(-3.7만명), 그 외 기타산업(-1.3만명)의 취업자는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대면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에서 회복하는 초기에는 비대면 서비스업의 역할이 주요하였으나, 이후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이 시차를 두고 확대되었다. 2023년에는 비대면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축소된 가운데 대면서비스업은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1~7월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 중 약 75%가 대면서비스업에서 발생하였다. 대면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16.9만)과 숙박·음식업(+15.8만)의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비대면서비스업 중에서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1만)은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림 I-28]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주: 기타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그림 I-29] 서비스업 특성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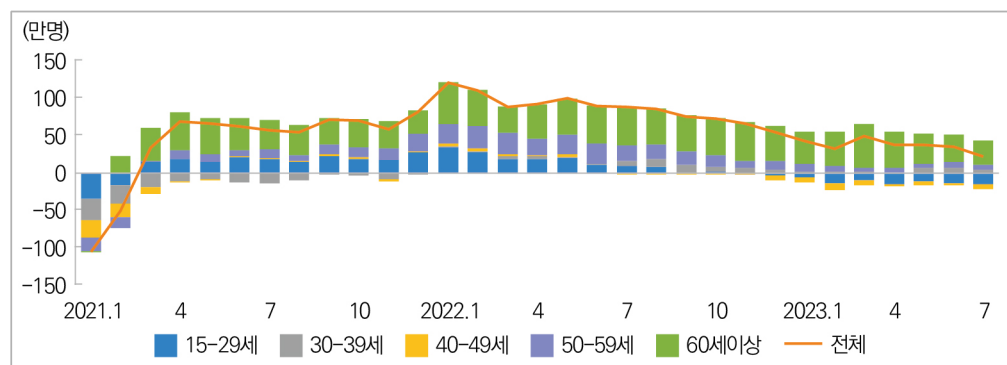


주: 대면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업,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하며, 비대면서비스업은 대면서비스업 외 서비스업종을 모두 포함
자료: 통계청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40.3만명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50대(+6.7만명)와 30대(+3.9만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0.8만명 감소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40대(-5.3만명) 취업자도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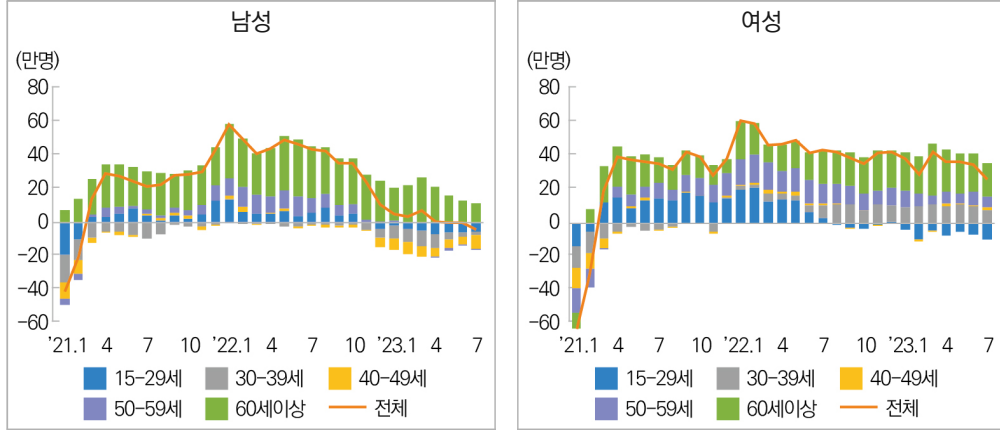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 취업자는 1.9만명 증가에 그친 반면, 여성 취업자는 33.0만명 증가하였다. 남성 취업자 중 고령층만이 유의한 증가세(+17.7만명)를 기록하였고, 그 외 연령집단의 취업자는 감소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세(+22.7만명)가 두드러지지만, 30대(+9.5만명)와 50대(+6.7만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그림 I-30]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자료: 통계청

[그림 I-31]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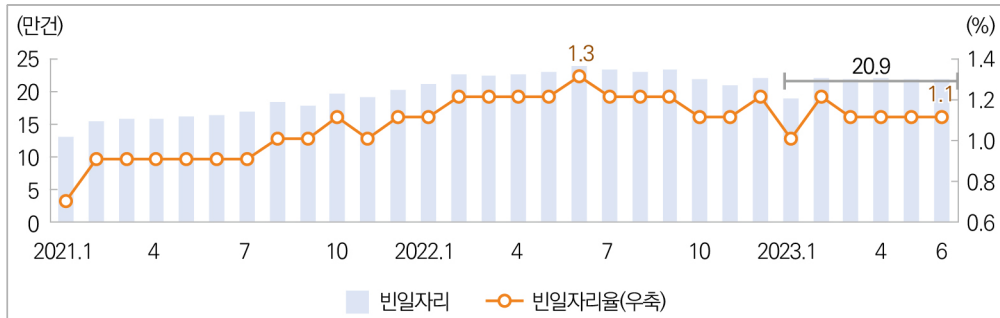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수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빈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약 20.9만개의 빈일자리가 존재하였고, 빈일자리율은 1.1%를 기록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빈일자리수: 5.7만명, 빈일자리율: 1.5%), 운수·창고업(2.6만명, 3.8%), 숙박·음식업(2.8만명, 2.4%), 협회·단체·개인서비스(0.7만명, 1.5%) 등에서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는 보건·복지업의 경우 빈일자리율(1.0%)은 그리 높지 않지만 2.1만개의 빈일자리가 존재하였다. 높은 빈일자리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운수창고업 등의 취업자는 감소세를 보여, 일부 산업에서 미스매치로 인한 노동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I-32] 빈일자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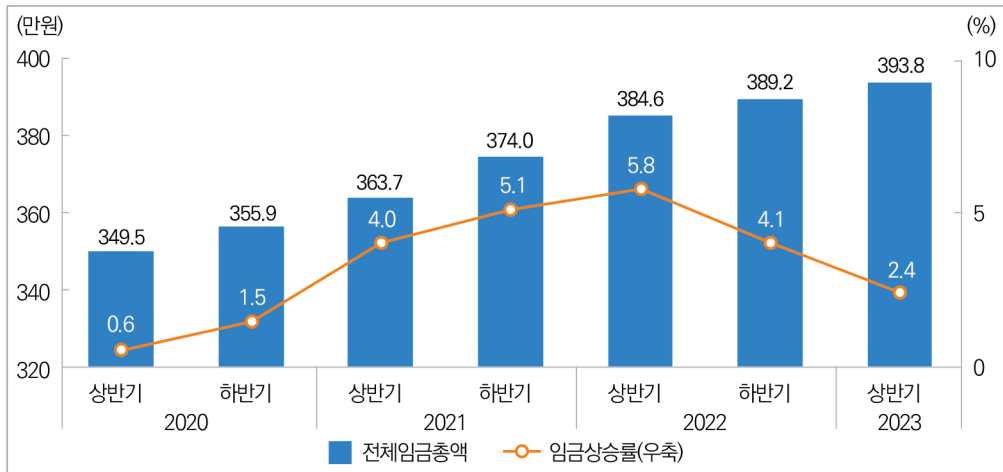
주: 1) 빈일자리는 조사 기준 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의미
 2) 빈일자리율은 전체일자리(종사자수+빈일자리) 중 빈일자리 비율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제2절 임금상승률

- 2023년 상반기 임금상승률은 2.4%에 그쳐 물가 대비 낮은 상승세 시현
 - 상용직은 지난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특별급여가 하락하며 낮은 상승세 기록
 -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노동시간 감소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 기록
 - 2023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4.0%였다는 점에서, 실질임금은 하락

2023년 상반기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2.4% 상승하였다.¹²⁾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이다. 종사상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은 2.8% 상승하였다. 상용직의 임금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측면에서 상승한 반면, 특별급여는 경기둔화와 2022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의 기저효과로 하락하였다.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0.05% 상승에 그쳐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임시·일용직의 시간당임금은 8.4% 상승하였으나, 1인당 노동시간이 약 8.3% 감소하며 임금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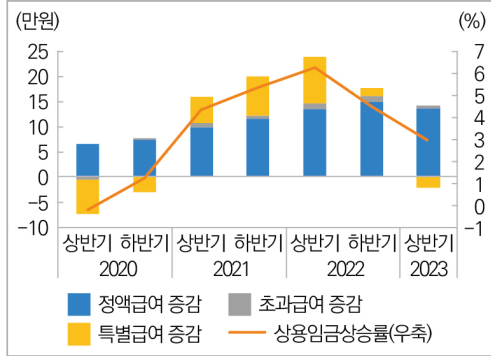
[그림 I-33]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 변화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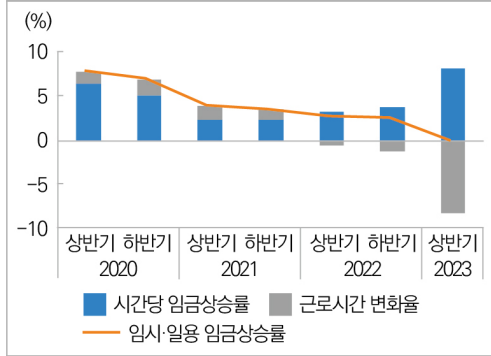
12)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직의 임금총액 및 세부항목(정액급여와 초과급여, 특별급여)과 임시·일용직의 임금총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용직 임금 중 ①정액급여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을 의미하며, ②초과급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을 나타낸다. ③특별급여는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을 의미하며 고정상여금을 포함한다.

[그림 I-34] 상용직 임금변화 분해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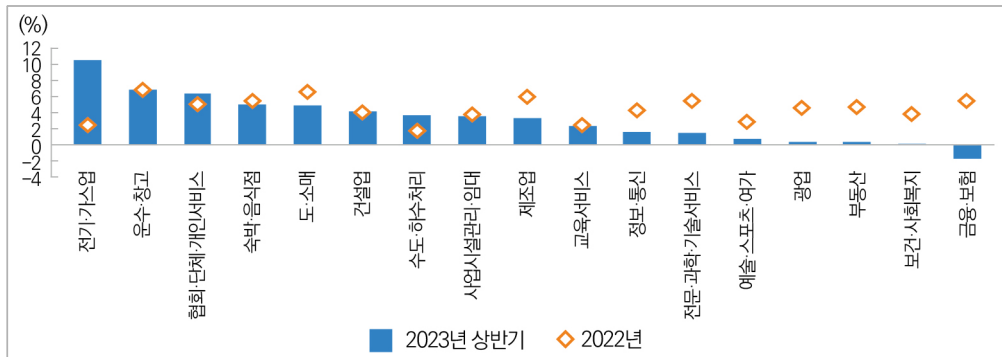
[그림 I-35] 임시·일용직 임금상승률 분해



주: 자연로그 변환을 통해 임시·일용직 임금총액의 변화율을 시간당임금 상승률과 근로시간 변화율로 분해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전기·가스업의 경우 지난 몇 년간 타 산업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23년 상반기에는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 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전기·가스업의 종사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0.3%)은 그리 크지 않아 총임금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2023년 상반기 금융·보험업의 임금상승률(2022년 5.2%→2023년 -1.7%)은 특별급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하였고, 보건·복지업(3.6%→0.1%)과 부동산업(4.5%→0.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3%→1.4%) 등의 임금상승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종사자 비중이 18.9%로 가장 높은 제조업에서도 임금상승률이 하락(5.8%→3.1%)하며 전체 임금상승률 둔화로 이어졌다.

[그림 I-36] 2022년 및 2023년 상반기 산업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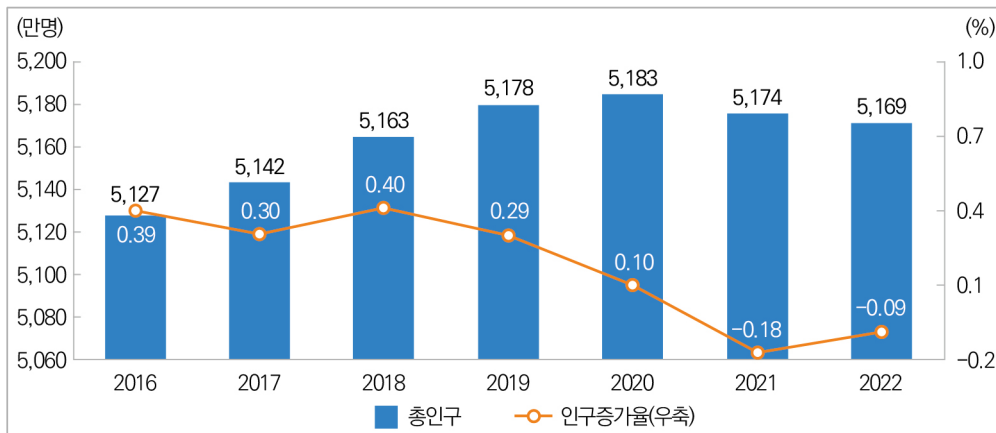
- 인구변동요인: 출산, 사망, 국제이동
- 2022년 총인구는 5,169만명으로 2020년 이후 감소세 지속
 - 총인구는 2021년(5,174만명) 보다 5만명(-0.09%) 감소

(단위: 만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2022
인구	5,163	5,178	5,183	5,174	5,169	5,173
증가율	0.40	0.29	0.10	-0.18	-0.09	0.10

2022년 국내 총인구는 5,169만명으로 202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22)¹³⁾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I-37] 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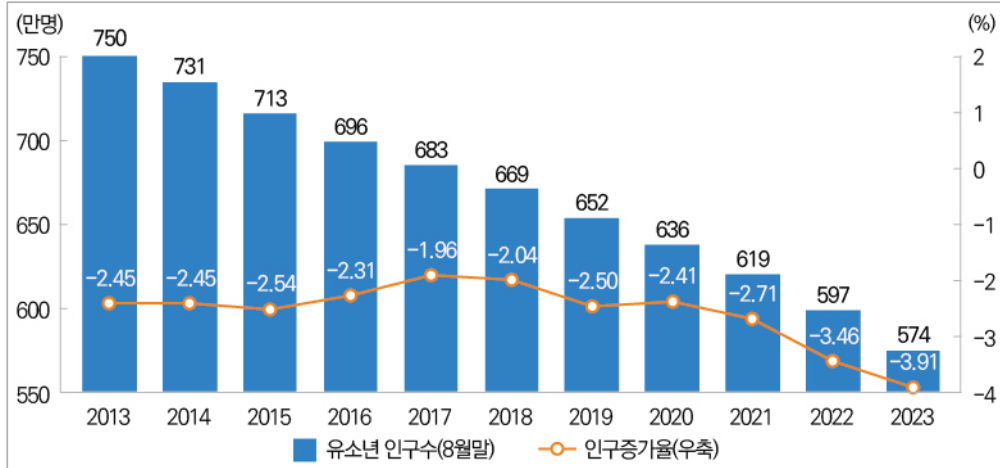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이소연 경제분석관(soynlee@assembly.go.kr, 6788-4752)

13) 인구주택총조사(2022)는 통계청에서 2022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7종의 행정자료를 통계적 목적으로 연계 보완하여 작성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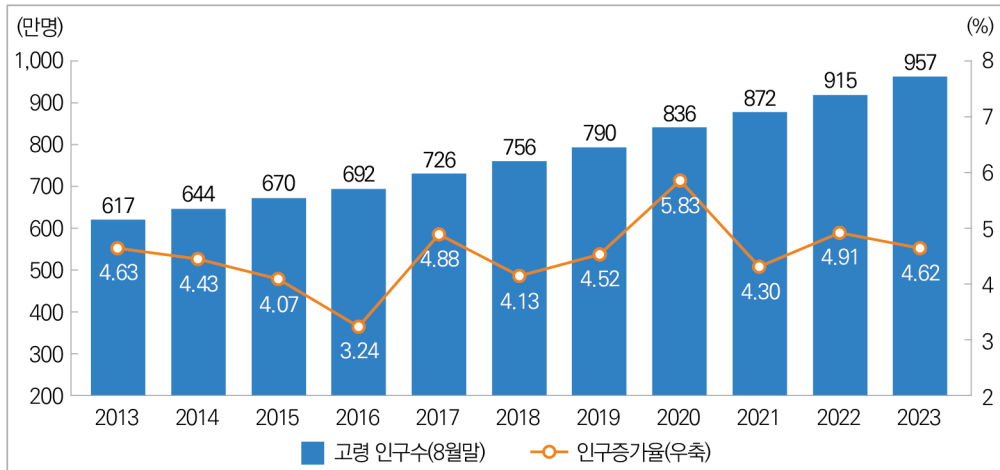
2023년 8월 기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574만명(전체 인구 대비 11.2%)으로 2013년 이후 연평균 2.6% 감소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57만명(전체 인구 대비 18.6%)으로 2013년 이후 연평균 4.5% 증가하고 있다.

[그림 I-38] 유소년 인구수



주: 각 연도 8월말 기준 15세 미만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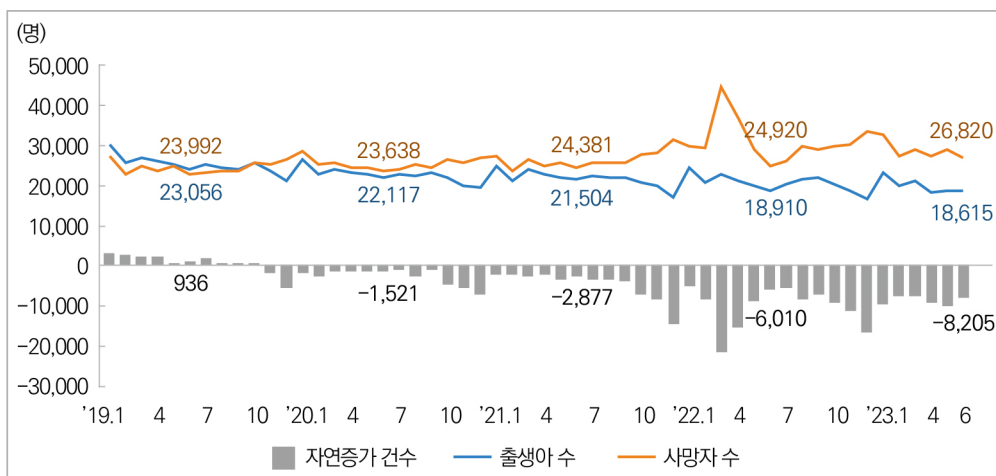
[그림 I-39] 고령자 인구수



주: 각 연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2023년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08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062명(-6.8%) 감소하였으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하회하면서 44개월째 자연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2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2016년 1분기 이후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¹⁴⁾ 2023년 2분기 사망자 수는 8만 3,359명으로 코로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7,142명(-7.9%) 감소하였다.

[그림 I-40]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자료: 통계청

[표 I-2] 합계출산율

(단위: 명)

	2021	2022	2022				2023p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합계출산율	0.81	0.78	0.87	0.75	0.80	0.70	0.81	0.70

자료: 통계청

2022년 출생아 중 첫째아(15만 6,000명)는 전체 출생아(24만 9,000명) 중 62.7%로 출산 순위별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첫째아의 비중은 2011년부터 12년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아 비중은 전체의 29.9%로 전년보다 1.3%p 감소하여 2015년부터, 셋째아 비중은 전체의 6.4%로

14) 통계청,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 보도자료, 2023.8.30

전년보다 0.7%p 감소하여 2018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다.

혼인 건수는 2023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9.2% 상승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하였던 결혼 수요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3] 혼인 건수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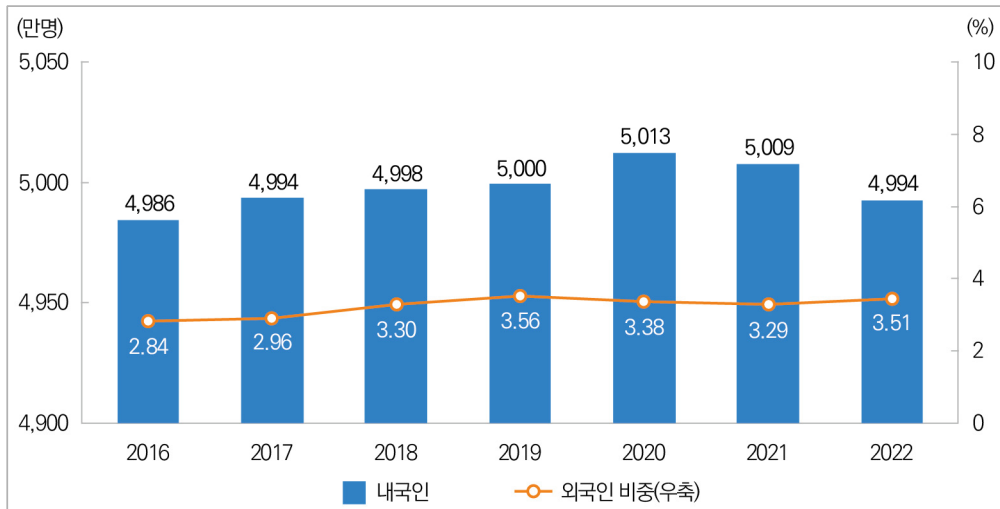
(단위: 건, 전년대비, %)

	2021	2022	2022				2023p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혼인건수	192,507	191,690	45,374	47,733	45,413	53,170	53,964	47,740
증감률	-9.8	-0.4	-5.5	-1.1	2.8	2.1	18.9	0.0

자료: 통계청

내국인은 전년보다 14만 8,000명(-0.3%) 감소하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4천만명대로 감소하였으나, 외국인은 전년보다 10만 2,000명(6.2%)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여파로 2년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며 외국인 비중이 3.5%로 상승하였다.

[그림 I-41] 연도별 내국인 외국인 추이



자료: 통계청

[BOX 3] 인구 정점

□ 한국의 총인구 정점은 2020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상 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으로 정점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총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상 인구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포함하며 해외 체류하는 내국인은 제외
- 주민등록연앙인구는 2019년 5,185만명으로 정점
 -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매년 7월 1일 인구를 작성하여 제공하며 재외국인은 포함하며 외국인은 제외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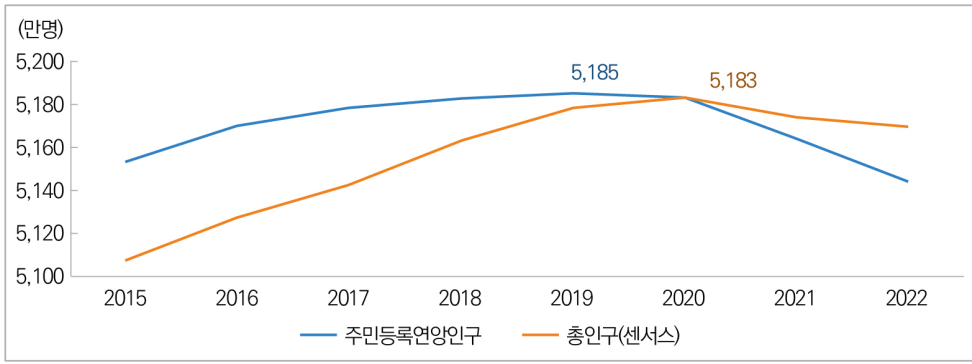
(단위: 만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총조사	5,127	5,142	5,163	5,178	5,183	5,174	5,169
주민등록연앙인구	5,170	5,178	5,183	5,185	5,183	5,164	5,144
생산가능인구	3,760	3,757	3,762	3,763	3,738	3,703	3,668
15세이상인구	4,361	4,393	4,418	4,450	4,479	4,508	4,526
경제활동인구	2,742	2,775	2,790	2,819	2,801	2,831	2,892

자료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생산가능인구(만 15세~64세)의 정점은 2019년
- 경제활동인구는 고령인구 유입으로 완만한 증가세 유지
 -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취업을 하였거나 구직활동 중에 있는 인구)

[총인구 정점 비교]



자료: 통계청, 행정안전부

II 2024년 및 중기 전망

제1장 경제전망의 수정 요인

제2장 피용자보수

제3장 영업잉여

제4장 고정자본소모

제5장 순생산 및 수입세

제6장 국민총소득

제7장 고용량

제8장 임금상승률

제9장 인구



경제전망의 수정 요인

제1절 분배국민소득

1. 2023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2023년 명목GDP 전망(2.2%)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전망¹⁵⁾(3.7%) 대비 1.5%p 하향 조정되었다.

피용자보수는 고용 전망의 수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전망(4.5%) 대비 0.4%p 하향 조정하였다. 지난 전망 대비 2023년의 명목임금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어 피용자보수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영업잉여는 지난 전망(3.5%) 대비 5.1%p 하향 조정하였다. 명목GDP 성장률이 기존 3.7%에서 2.2%로 대폭 하향 조정된 영향이 컸으며, 2023년 상반기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한 데서도 영업이익 하락 추세가 감지된다.

고정자본소모는 지난 전망(3.2%) 대비 1.7%p 상향 조정된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고정자본소모의 경우 고정자산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던 기존의 전망 방식에서 고정자산 유형별로 고정자본소모를 전망하여 합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뀐에 따라 전망치에 변동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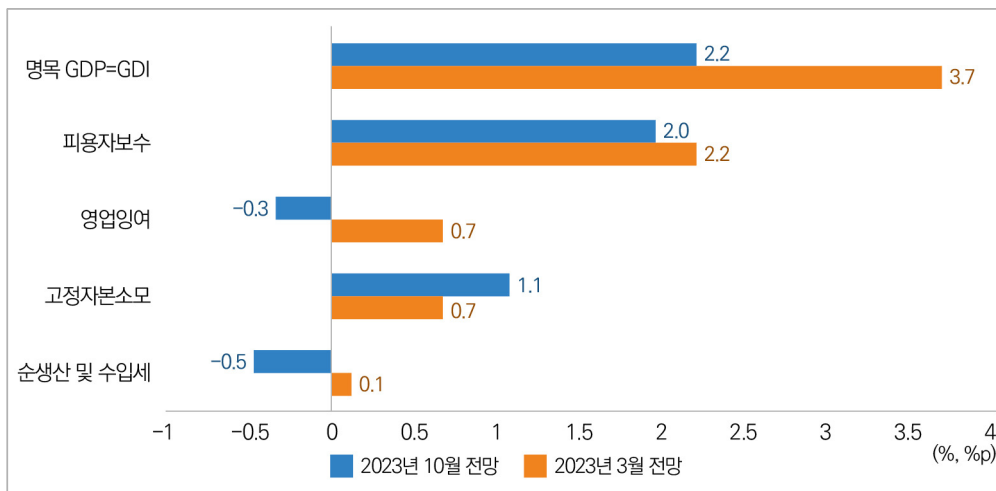
순생산 및 수입세는 명목GDP 성장률의 하방조정과 2023년 상반기 통관기준 수입 및 수출금액 실적이 크게 부진함에 따라 지난 전망(1.3%) 대비 5.9%p 하향 조정된 -4.6%를 전망하였다.

2023년 명목 국내총소득 전망의 분배부문별 기여도를 지난 전망과 비교하면, 피용자보수 -0.3%p, 영업잉여 -1.0%p, 순생산 및 수입세 -0.6%p로 하향 조정되고, 고정자본소모는 0.4%p 상향 조정되었다.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15) 국회예산정책처, 「2023 경제전망」, 2023.3

[그림 II-1] 2023년 국내총소득 전망의 분배부문별 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II-1] 2023년 국내총소득 수정 전망(구성비)

(단위: %, %p)

	23.3월 전망	23.10월 전망	차이
피용자보수	49.7	48.5	-1.2
영업잉여	19.5	19.4	-0.1
고정자본소모	21.2	22.7	1.5
순생산 및 수입세	9.6	9.5	-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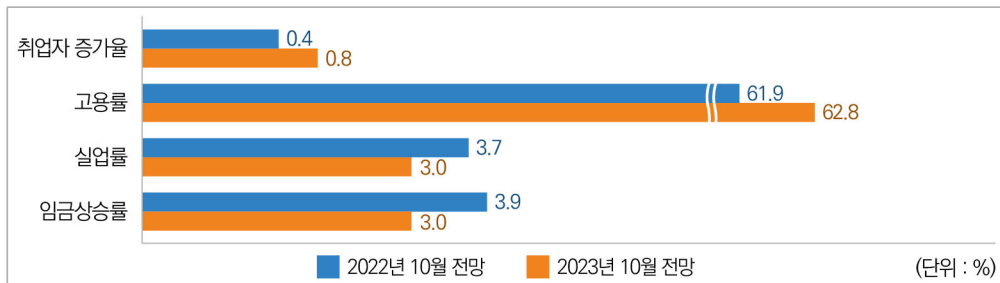
제2절 고용

1. 2024년 전망 차이 및 요인

2024년 취업자 수는 23.7만명(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2022년에 발표한 중기전망¹⁶⁾의 전망치(10.3만명, 0.4%) 대비 13.4만명(0.4%p)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번 조정에는 지난해 전망에서 일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포착한 것과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우선 2022년 전망 시점에서는 향후 돌봄 분야의 노동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돌봄 분야의 노동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취업자 수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3년 대비 14.7만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외국인력 도입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2024년 취업자 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22년 전망에서 2024년 임금상승률은 3.9%로 전망하였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3.0%로 0.9%p 하향 조정하였다. 임금상승률 전망은 1인당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2024년의 GDP 성장률은 하향 조정된 반면, 취업자 증가율은 상향 조정되어 1인당 노동생산성 예상치가 하락하였다. 또한, 돌봄 관련 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등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2024년 임금상승률 전망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II-2] 2024년 고용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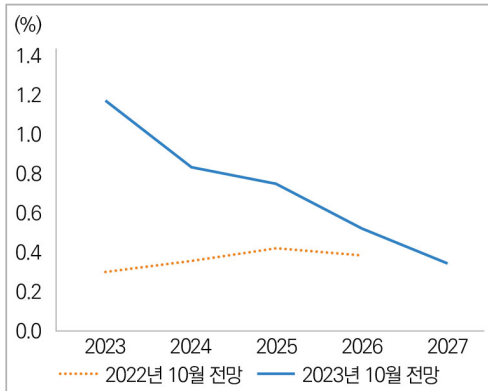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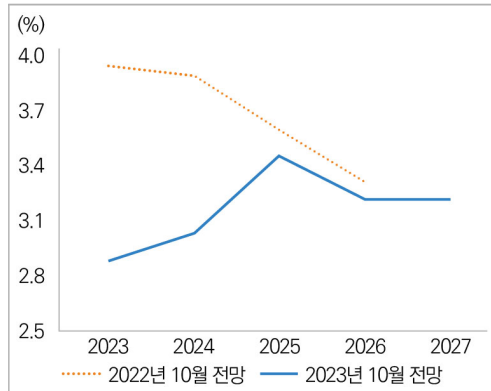
16)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2.10

2. 중기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그림 II-3] 취업자 수 증가율 비교



[그림 II-4] 임금상승률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돌봄 부문의 노동수요가 경기와는 무관한 외생적 노동수요이며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4년 노인일자리 규모를 103만개로 확대한 후, 2027년까지 120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또한 중기 취업자 수 증가율을 상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다만, 외생적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와 GDP성장률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해 전망치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 유입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노동시장 미스매치 등이 해소된다면,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중기적으로 임금상승률은 기존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수 증가율 상향조정으로 인한 1인당 노동생산성의 하향 조정,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 등이 중기 전망치 수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은 기존 전망 대비 1%p 수준의 큰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2025년 이후부터는 조정의 규모가 0.1%p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제2장

피용자보수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3.7% 증가할 전망
 - 이는 전년도 증가율(4.1% 전망) 대비 0.4%p 하락한 수치
 - 명목GDP 성장률 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8.5%에서 48.2%로 0.3%p 하락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피용자보수	4.8	4.1	3.7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 임금상승률 둔화
	• 임금근로자 증가세 둔화

2024년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3.7% 증가할 전망이다. 임금상승률과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부분은 피용자보수 전망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정부 정책 등에 기반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등은 피용자보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3년 중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4.1% 증가할 전망이다. 피용자보수가 노동의 몫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임을 고려할 때, 고용전망을 통해 도출되는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통해 기본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¹⁷⁾ 2023년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호한 고용상황으로 인해 임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17) 피용자보수 전망을 위해, 고용량 전망에서 도출한 취업자 수 전망치에 기존 추세에 기반하여 생성한 임금근로자 비중을 적용하여 임금근로자 증가율을 도출하였다.

금근로자 수 또한 비교적 큰 폭(1.6%)으로 증가하여 피용자보수는 명목GDP 성장률(2.2% 전망)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⁸⁾ 이에 따라 GDP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7.6%에서 2023년 48.5%로 상승할 전망이다.

2024년 중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3.7% 증가할 전망이다.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전년의 4.1% 대비 0.4%p 하락한 것으로 명목GDP 성장률(4.2% 전망)을 하회하여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3년 48.5%에서 48.2%로 하락할 것이다. 2024년 임금근로자 수는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증가하는 임금근로자 중 상당수가 돌봄 분야의 일자리와 노인일자리 등 저임금 일자리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는 평균임금과 부가급부 상승률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II-2] 임금근로자 증가율 및 임금상승률 전망치

(단위: %)

	2022	2023	2024
임금근로자 증가율	3.6	1.6	1.4
(임금근로자 비중)	(76.5)	(76.9)	(77.3)
임금상승률	4.9	2.9	3.0

주: 1)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고용량 전망에서 제시된 취업자 수 전망치에 기존의 추세에 기반하여 생성한 임금근로자 비중을 적용하여 도출하였음

2) 고용량 및 임금상승률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I부 7~8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고용노동부

18) 관련 논의는 본권 II부 7장, 8장 고용량 및 임금상승률 전망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의 구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피용자보수는 임금근로자 수와 그들이 받는 임급의 곱으로 표현되며, 결과적으로 피용자보수의 증가율은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관계를 다음의 그림에 제시하였다. 해당 방법론을 통해 기본 전망치를 도출한 후, 기본 전망치가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망치를 보정하였다.²⁰⁾

[그림 II-5] 피용자보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9) 임금과 임금근로자 수의 곱을 더하기 관계로 변환시키는 방법은 다음의 수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피용자보수} &= \text{명목임금} \times \text{임금근로자 수} \\ \Rightarrow \ln(\text{피용자보수}) &= \ln(\text{명목임금}) + \ln(\text{임금근로자 수}) \\ \Rightarrow \Delta \ln(\text{피용자보수}) &= \Delta \ln(\text{명목임금}) + \Delta \ln(\text{임금근로자 수}) \\ \Rightarrow \text{피용자보수 증가율} &= \text{명목임금상승률} + \text{임금근로자 증가율} \end{aligned}$$

20)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는 임금 외에도 임금근로자들이 받는 주거서비스, 건강·보건비용, 보육지원금 등 복지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임금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간접노동비용의 상승으로 복지비용 등의 영향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여,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통해 추정된 기본 전망치에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 데이터의 바탕이 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일부만을 포착(2022년 기준 87.7%)한다는 점에서, 누락된 임금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망치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중기 전망

• 2023~2027년 피용자보수는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

-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4.5% 증가) 대비 증가세 둔화

(전년대비, 연평균,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 ~2022	2023 ~2027
4.1	3.7	4.8	4.5	4.2	4.5	4.3
(48.5)	(48.2)	(48.1)	(48.0)	(47.9)	(47.3)	(48.1)

주: 괄호안의 값은 GDP대비 비중을 나타냄

2023~2027년 기간 중 피용자보수는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연평균 성장률인 4.5% 대비 0.2%p 낮은 수치이다. 동기간 동안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명목GDP 성장률을 상회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 평균인 47.3% 대비 0.8%p 높은 48.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5년의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명목GDP 성장률 보다 높은 것은 2023년의 영향이 크며²¹⁾, 2023년을 제외한 2024년부터는 피용자보수는 명목GDP 대비 낮은 증가세를 보이며 GDP대비 비중이 지속 하락할 것이다.

[표 II-3] 명목GDP 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연평균,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 ~2022	2023 ~2027
2.2	4.2	5.1	4.8	4.4	3.3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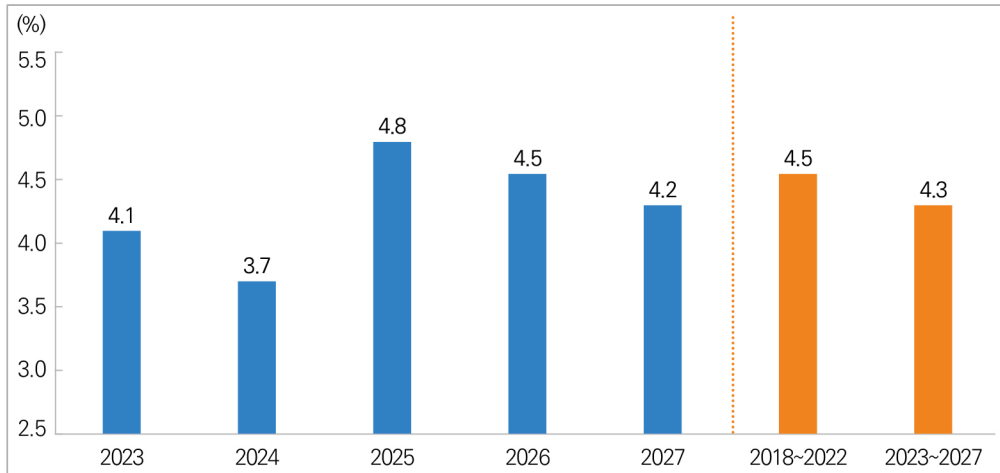
주: 명목GDP 성장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참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2~2023년 발생한 고용호황은 지금까지 GDP와 취업자 수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취업자 수 증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임금근로자의 증가율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인구고령화 등으로 돌봄 부문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노인일자리 및 외국인력 확대 등을 계획하고

21) 2023년 명목GDP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용자보수는 이보다 1.9%p 높은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있다는 점은 임금근로자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상승한 바와 같이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에 따라 향후 임금상승률은 기존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부가급부의 증가율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것들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피용자보수 증가율을 전망하였다.

[그림 II-6] 중기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제3장

영업잉여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영업잉여는 전년(-1.6% 전망)보다 5.3%p 높은 3.6%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3.2	-1.6	3.5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경기 회복에 의한 명목 국내 총소득 성장률 증가	•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상승
• 피용자보수 증가율 하락	•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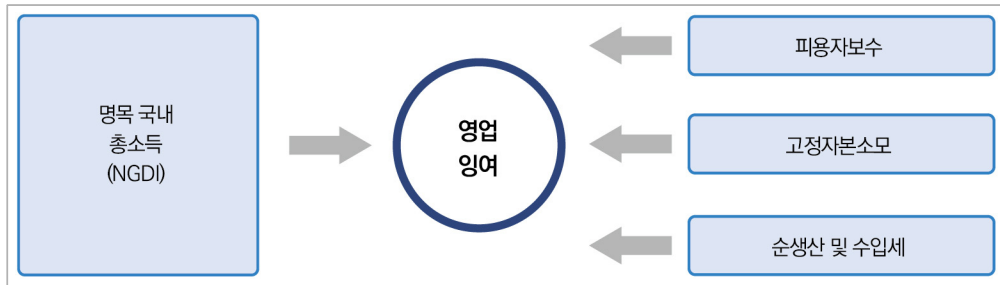
2023년 영업잉여는 전년대비 1.6% 감소하고 2024년에는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영업잉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된 이유는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명목GDP는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피용자보수는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22년 대비 크게 하락하는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여 2023년 영업잉여 감소폭은 2022년의 -3.2%보다 1.6%p 축소될 전망이다. 2024년의 경우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영업잉여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경기 회복으로 명목GDP 성장률(4.2%)이 피용자보수 증가율(3.7%)을 앞지르는 등의 영향으로 영업잉여가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영업잉여 전망은 명목GDP 전망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을 제한 잔차로 구한다. 국민계정에서도 영업잉여를 소득발생계정의 균형

항목(balancing item)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UN의 국민계정 매뉴얼에서도 영업잉여를 균형항목으로 추계하고 있다.²²⁾ 따라서 영업잉여의 결정요인은 명목GDP의 여타 구성항목들과 명목GDP 자체다. 피용자보수 등 구성항목들의 증가는 영업잉여의 하방요인으로, 명목GDP의 증가는 상방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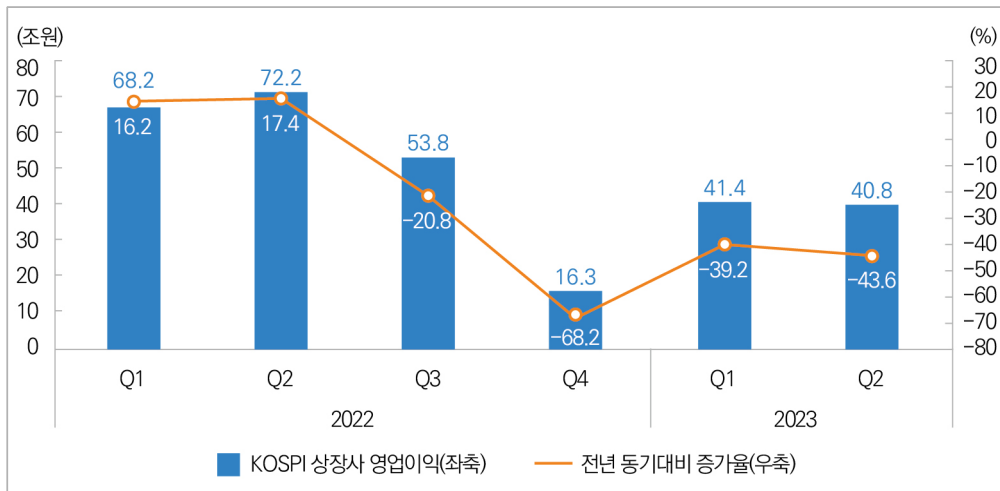
[그림 II-7] 고정자본소모 주요 결정 요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영업잉여는 기업 이윤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2023년의 영업잉여 감소세는 본고 작성 시점까지 발표된 기업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분기별 영업이익은 2023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39.2%, 43.6% 감소하였다.

[그림 II-8] 코스피 상장사 분기별 영업이익 현황



자료: Fn가이드

22) 다만 국가별로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를 묶어서 파악하기도 한다.

제2절 중기 전망

- 2023~2027년 중 영업잉여는 연평균 3.2% 증가

-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2.6%)의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전환

(전년대비, 연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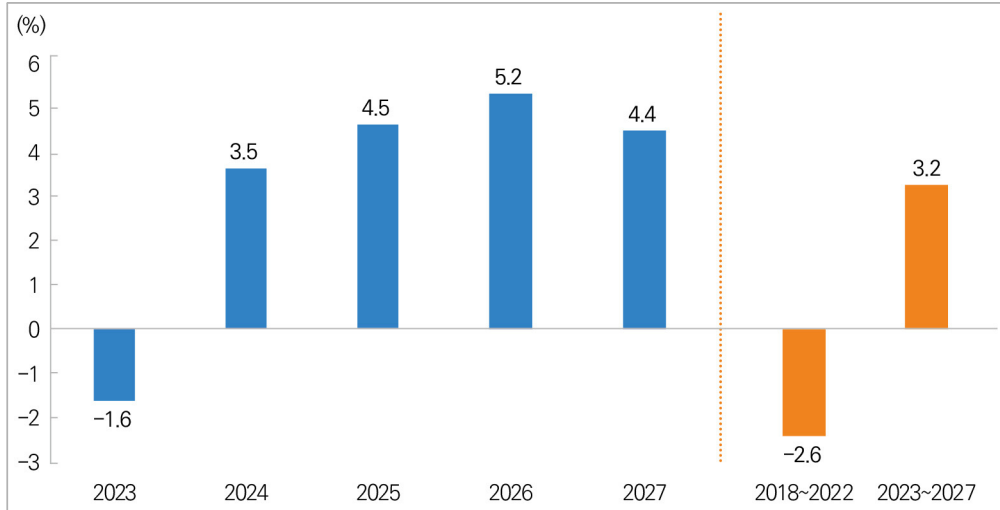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 ~2022	2023 ~2027
-1.6	3.5	4.5	5.2	4.4	-2.6	3.2

2023~2027년 영업잉여는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평균 성장률인 -2.6%보다 5.8%p 높은 수준이다. 영업잉여는 2023년에 한 차례 감소한 뒤로는 줄곧 명목GDP 성장률(2024년부터 연평균 4.6% 성장 전망)과 근접한 속도(연평균 4.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영업잉여의 명목GDP 대비 비중도 2023년 19.4%에서 2027년 19.2%로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22년의 영업잉여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주된 이유는, 지난 5년간은 기업의 인건비가 전체 부가가치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던 반면 향후 5년간은 인건비와 부가가치 총액이 서로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8~2022년 기간에는 기업의 고용 관련 비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피용자보수가 연평균 4.5% 증가하였으나 2023~2027년 중에는 노인 일자리 등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확대되는 영향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3%로 둔화할 전망이다. 반면 부가가치 총액에 해당하는 명목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2018~2022년 3.3%에서 2023~2027년 4.2%로 증가가 예상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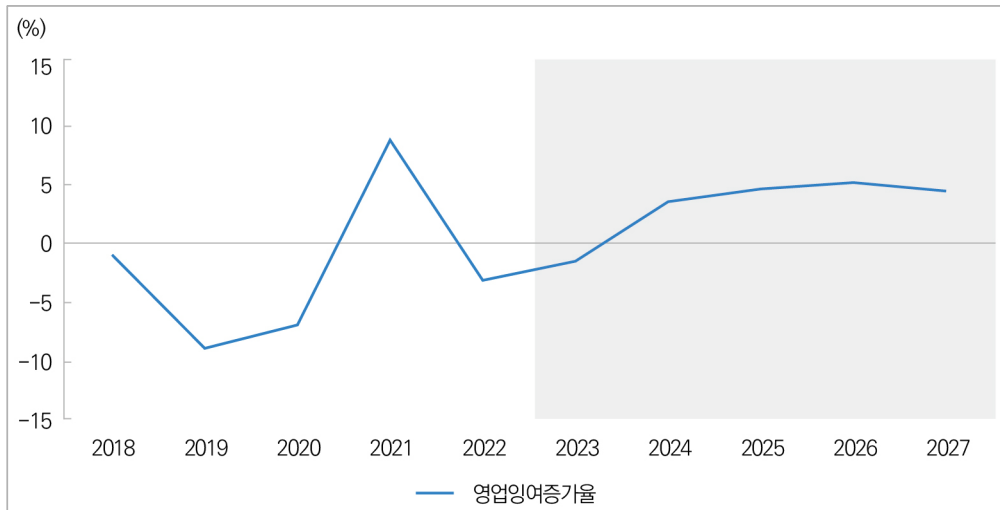
23) 명목GDP 성장률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참조

[그림 II-9] 중기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II-10] 영업잉여 증가율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제4장

고정자본소모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4.9% 전망)보다 1.0%p 높은 5.9%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10.2	4.9	5.9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혁신으로 인한 기존 자본의 진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인한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하락

고정자본소모는 2023년 4.9%, 2024년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년 8.5%, 2022년 10.2%보다 대폭 하락한 수치로, 주로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2021~2022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기인한다. 2021~2022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가 건설 자산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점차 회귀할 전망이다.

고정자본소모는 기존 자본스톡의 노후화, 진부화 등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의 화폐 평가액이다. 고정자본소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고정자산 유형별 감가상각률, 전년도 고정자산 스톡, 자본재 물가를 반영하는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의 대리변수인 지식재산생산물자산 투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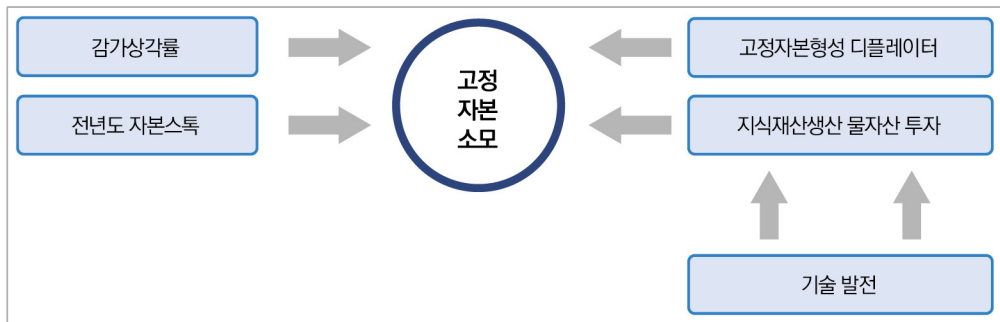
[그림 II-11]은 고정자본소모와 이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고정자산 유형별 자본스톡의 실질 가치 감소분은 자본축적 방정식²⁴⁾에 따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24) $K_t = I_t + (1 - \delta)K_{t-1}$, I_t 는 당기의 고정자본형성(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라 감가상각률(δ)과 전년도 자본스톡(K_{t-1})에 의해 결정된다. 고정자본소모는 이 감소분을 화폐액으로 평가한 명목 변수이므로 자본재 가격을 반영하는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지식재산생산물자산 투자(기술 발전 속도)가 증가하면 기존 자본스톡의 진부화가 빨라져 고정자본소모가 증가한다. 이러한 관계에 기반하여 고정자본소모를 전망하였다.

[그림 II-11] 고정자본소모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정자본소모 전망의 첫 단계로 감가상각률을 전망하였다. 모든 고정자산 유형의 감가상각률이 단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임을 감안하여 2022년 이후의 감가상각률은 이전 4년의 추세를 연장하여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고정자산 유형별 감가상각률 전망치와 고정자본형성 전망치를 자본축적 방정식에 대입하여 2022년 이후의 고정자본스톡을 재귀적으로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각 연도의 (자산 유형별)고정자본스톡을 감가상각률 전망치와 곱하면 다음 연도의 실질 고정자본소모가 도출된다. 끝으로 자산 유형별 실질 고정자본소모를 고정자산형성 디플레이터 전망치와 곱한 뒤 합산하여 명목 고정자본소모를 전망하였다.

기술 혁신도 고정자본소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2023~2024년에는 기술 혁신의 대리변수인 지식재산생산물자산 투자 증가율 전망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전망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다만 향후 2차전지, AI 등에서 파괴적 혁신이 도입될 경우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2절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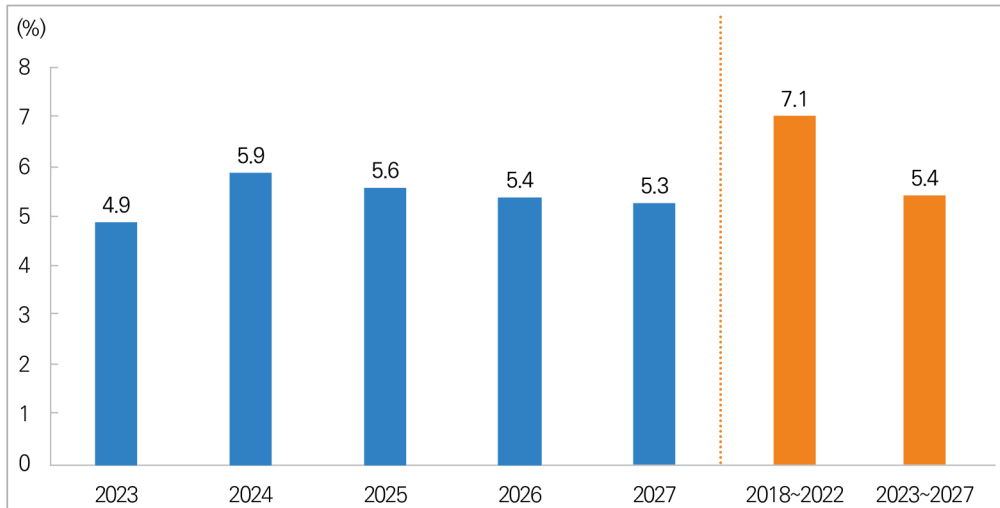
- **2023~2027년 중 고정자본소모**는 연평균 5.4% 증가
 -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7.1%)에 비해 증가속도 둔화
 - 다만, 이는 2021~2022년의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에 기인하며 2021년 이전 추세와 비슷함

(전년대비, 연평균,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 ~2022	2023 ~2027
4.9	5.9	5.6	5.4	5.3	7.1	5.4

2023~2027년 고정자본소모는 연평균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평균 성장률인 7.1%보다 1.7%p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2021년(8.5%)과 2022년(10.2%)을 제외하면 2018~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5.6%이며, 2023~2027년에도 이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II-12] 중기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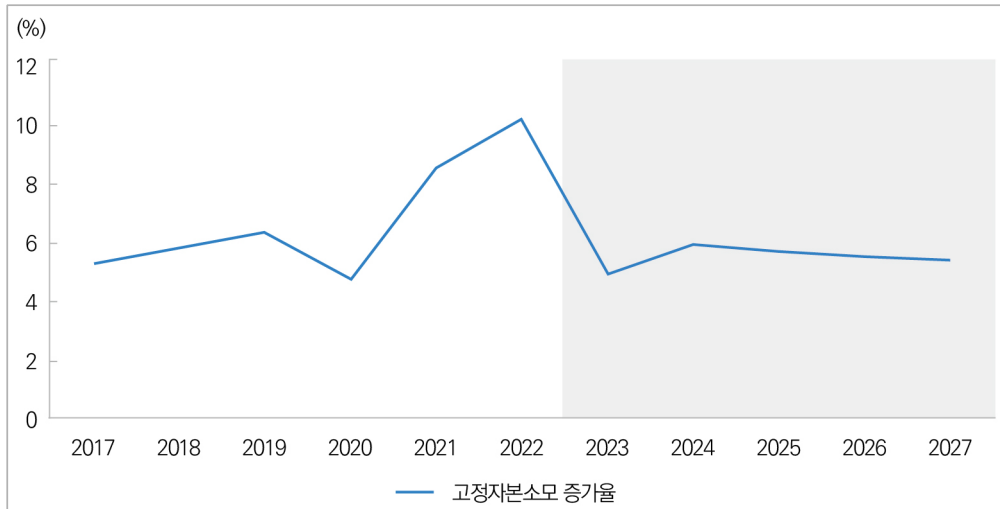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2023년 4.9%에서 2024년 5.9%로 한 차례 증가하였다가 이후 매년 하락하여 2027년 5.3%가 될 전망이다. 이는 모든 자산 유형의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한 차례 높아졌다가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향후 5년간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는 건설자재 등 수입 자본재 가격의 증가세가 비록 둔화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GDP디플레이터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그 결과 고정자본소모 증가율도 명목GDP 증가율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에 지식재산생산물자산 투자의 증가율은 3.2%~4.7% 수준으로 이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고정자본소모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중기에는 기술 격변으로 인하여 고정자본소모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II-13]은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에 대한 2023년 이전의 실측치와 이후의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이후에 예상되는 증가세는 2020년 이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13]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제5장

순생산 및 수입세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4.4% 증가할 전망²⁵⁾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2.4	-4.6	4.4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경제성장률 상승	• 중국경제 리스크 확대
• 소비·투자 등 내수경기 진작	• 중간재에 대한 환급액 증가
• 세계교역증가율 상승	

2024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4.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 전망(-4.6%) 대비 9.0%p 증가한 것이다.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명목 GDP 성장률이 상승(2.2→4.2%)하면서 순생산 및 수입세도 증가세를 회복하겠다. 특히, 내수경기 진작과 세계교역증가율 회복에 따라 통관기준 수입이 크게 증가(-10.5→5.7%)하면서 순생산 및 수입세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²⁶⁾ 다만, 중국 경제의 부동산 등 리스크와 중국 정부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중장기성장률이 예상보다 하향되는 경우 우리경제에도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면서 순생산 및 수입세에 대해서도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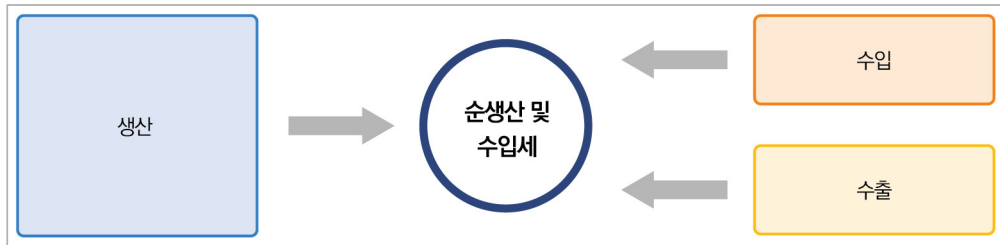
김민혁 경제분석관(mh.k@assembly.go.kr, 6788-4750)

25) 발생주의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통계인 순생산 및 수입세는 현금주의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국세수입 통계와 차이가 있으며,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은 국세수입 전망과 다른 것이다.

26) 경제성장률 및 대외거래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에서 설명한다.

순생산 및 수입세는 명목GDP 성장률, 통관수입액 및 통관수출액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선정하여 전망하였다. 생산물세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판매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단위 또는 가격에 기반하여 부과되므로 명목GDP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생산물세 중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통관수입액에 영향을 받는다. 한편, 수출에 사용된 중간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관세환급특례법」에 근거하여 수출에 활용된 수입 원재료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수출지원 관세 환급제도가 운영 중이므로 통관수출액을 결정요인에 반영하여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요인 간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II-1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14]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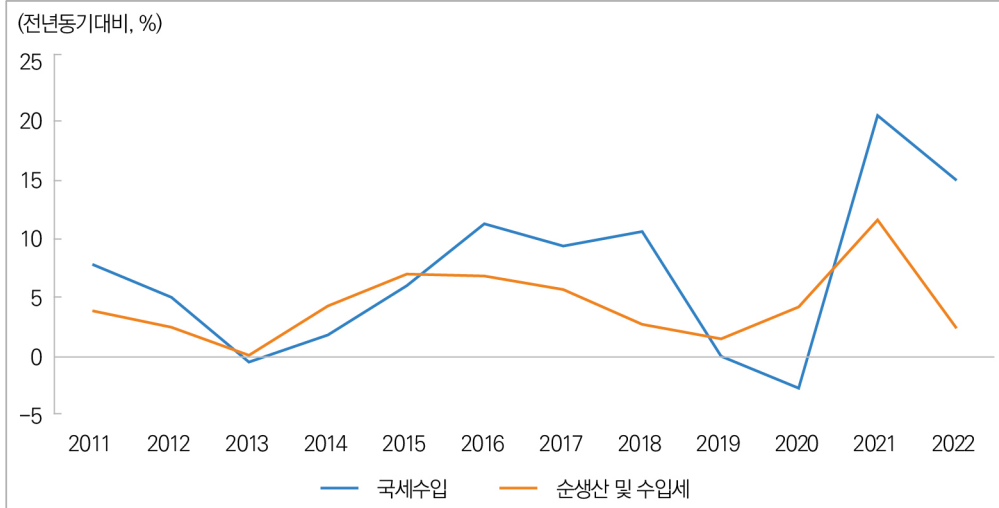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이례적인 감소세(-4.6%)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GDP 성장률이 2022년 3.9%에서 2023년 2.2%로 1.7%p 감소하여 순생산 및 수입세의 상방 요인은 제한적인 가운데 통관기준 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22년 18.9%에서 2023년 -10.5%로 크게 하락(29.4%p 감소)함에 따라 2023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생산 및 수입세의 이례적인 감소세는 국세수입 실적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발생주의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순생산 및 수입세와 현금주의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국세수입 실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세수입 실적과 순생산 및 수입세 실적은 상관관계(상관계수 0.62)를 가지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그림 II-15] 국세수입 실적과 순생산 및 수입세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II-4]는 2023년 7월까지 순생산 및 수입세와 관련된 주요 세목(5종)의 세입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국세수입 실적이 16.6% 감소한 상황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와 관련된 주요 세목의 세입 실적 또한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9.7%), 개별소비세(-5.4%), 증권거래세(-16.4%), 교통·에너지·환경세(-9.5%), 관세(-39.4%)까지 5종의 세목 모두에서 세입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3년의 순생산 및 수입세 감소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II-4] 주요 세목의 2023년 7월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상반기 누계				진도율		'22년 실적	'23년 예산
	'22.7	'23.7	증감액	증감률	'22.7	'23.7		
국세수입	261.0	217.6	△43.4	△16.6	65.9	54.3	395.9	400.5
부가가치세	62.9	56.7	△6.1	△9.7	77.0	68.2	81.6	83.2
개별소비세	5.7	5.4	△0.3	△5.4	61.1	52.9	9.3	10.2
증권거래세	4.2	3.5	△0.7	△16.4	66.1	70.0	6.3	5.0
교통·에너지·환경세	6.9	6.2	△0.7	△9.5	61.9	55.9	11.1	11.1
관세	6.5	3.9	△2.6	△39.4	62.8	36.7	10.3	10.7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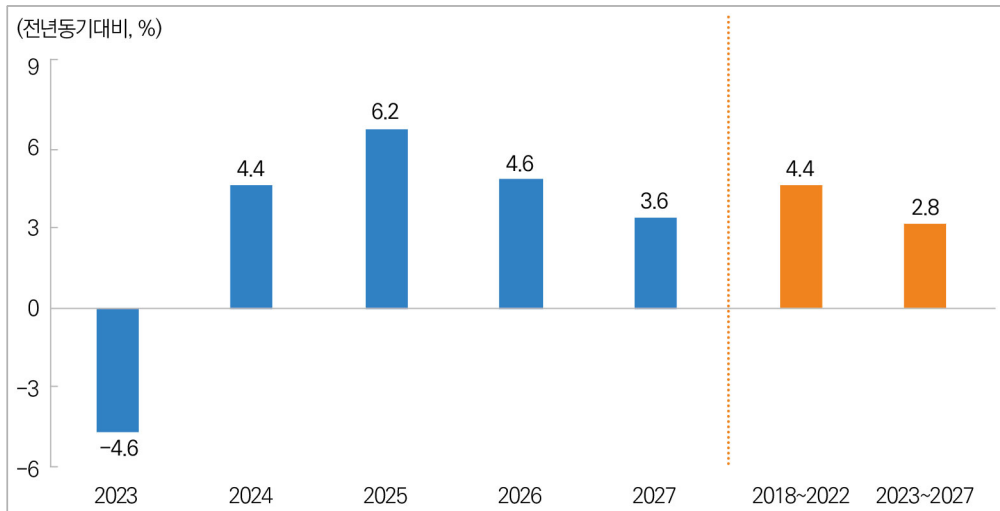
제2절 중기 전망

- **2023~2027년 중 순생산 및 수입세**는 연평균 2.8% 증가
 -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4.4%)에 비해 증가폭 1.6%p 감소
 - 다만, 이는 2023년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며 2024년부터 증가세 회복 전망
(전년대비, 연평균,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 ~2022	2023 ~2027
-4.6	4.4	6.2	4.6	3.6	4.4	2.8

2023~2027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순생산 및 수입세 연평균 증가율인 4.4%보다 1.6%p 낮은 수준이다. 다만, 향후 5년의 순생산 및 수입세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대부분 2023년의 순생산 및 수입세 감소(-4.6%)로부터 기인한다. 2025년에는 명목GDP 성장률이 5.1%까지 높아질 전망이며, 이에 같은 해 순생산 및 수입세는 6.2% 증가하는 등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4.7%에 달해 오히려 지난 5년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16] 중기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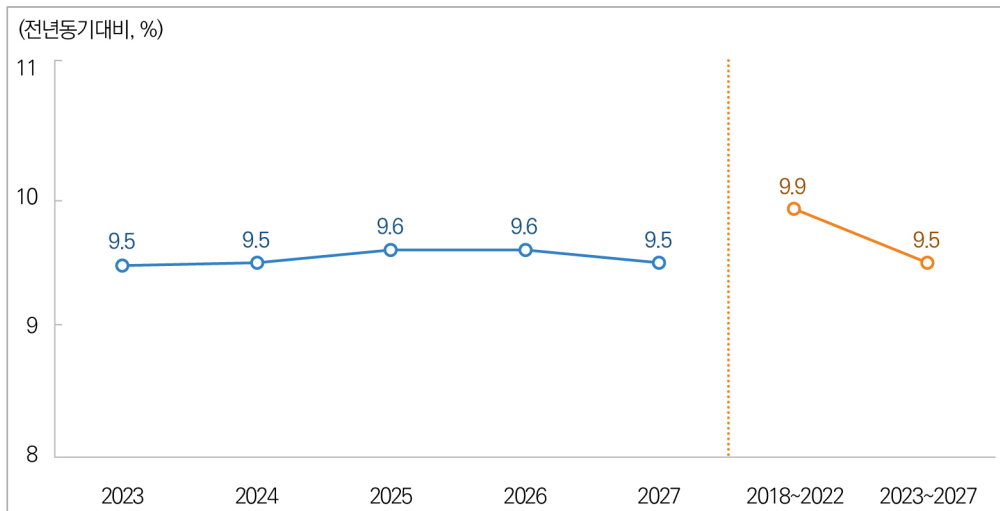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명목GDP 성장은 생산물의 단위에 기반하여 부가되는 순생산 및 수입세의 주된 상방요인이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2년에 3.9%를 기록한 이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연평균 4.7%의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순생산 및 수입세의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²⁷⁾

순생산 및 수입세의 또 다른 주요 변동 요인인 대외거래 전망²⁸⁾을 살펴보면 2022년에 통관기준 수입은 18.9% 상승하였으나 2023년에는 1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세 규모는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통관기준 수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입세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관기준 수출은 2022년에 6.1%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9.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에 따른 환급 금액은 단기적으로 감소하였다가, 통관기준 수출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7.1%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 감소한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24년 이후 점차 균형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명목GDP 대비 비중은 지난 5년간(9.9%)에 비해 9.5%로 소폭 낮아져 국내총소득 중 정부의 몫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17] 중기 순생산 및 수입세의 명목GDP 대비 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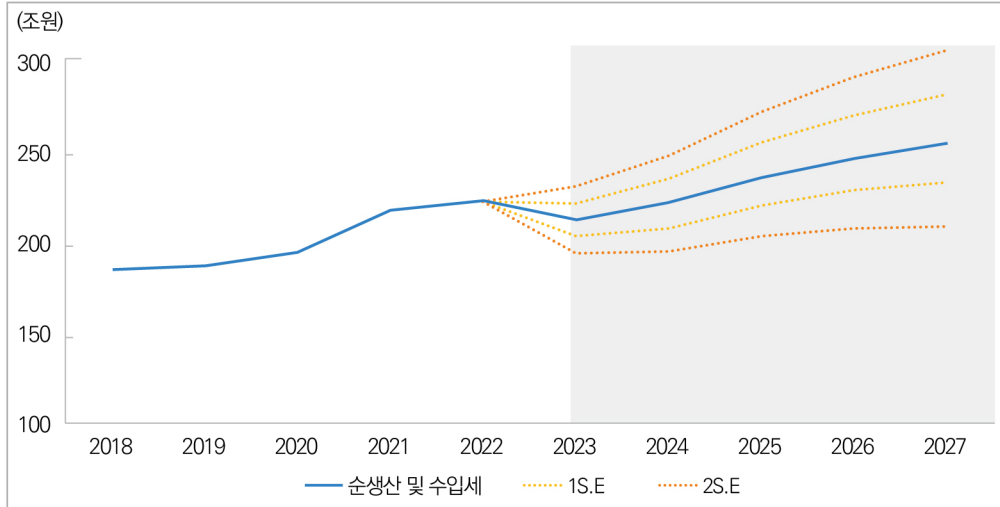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27)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지출 부문」에서 설명한다.

28) 대외거래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지출 부문」에서 설명한다.

[그림 II-18]은 순생산 및 수입세에 대한 전망치와 예측구간(prediction band)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18] 순생산 및 수입세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제6장

국민총소득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국민총소득(GNI)은 4.2% 증가할 전망
- 2024년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은 3.7%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국민총소득(GNI)	4.3	3.3	4.2
국민처분가능소득(NDI)	2.9	2.8	3.7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해외 투자 배당 수익 증가	• 외국인임금근로자 유입 확대
• 국내총생산 증가	• 중국 경기 부진 및 대외 리스크 확대

2024년 국민총소득(GNI)은 4.2%,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은 3.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각각 지난 5년(2018~2022년) 증가율인 3.5%와 2.7%를 상회한다. 하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NDI의 증가율이 GNI 증가율보다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 확대 여력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인해 국외 재산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인력유치가 가시화되어 외국인 임금근로자가 크게 유입될 경우²⁹⁾ 국외로 지급되는 피용자보수가 증가하여 해외 투자배당수익을 상쇄함으로써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29) 관련 논의는 본권 II부 7장 고용량 전망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2023년의 GNI는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국내총소득 증가율 전망치 2.2%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해외 투자배당수익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최근 해외 투자 규모 증가와 함께 우호적 제도 변화의 영향도 받았다.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 불산입 제도³⁰⁾” 로 배당이 늘면서 2023년도 1분기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역대 최대였고, 2분기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였다.

[그림 II-19] 국민총소득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본 전망에서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경상수지 상 본원소득수지와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국민소득통계 종합계정 상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피용자보수와 기업 및 재산소득을 의미하며, 본원소득수지는 국제수지표의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통계가 실리는 표의 차이로 개념상으로는 동일하다. 또한 국민계정상 국외경상이전³¹⁾은 국제수지표의 이전소득수지와 동일하다.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계정의 국외거래계정과 유사하다.³²⁾

30) 2023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되었다. 국제조세조정에 따라 특정외국법 유보소득의 간주배당금, 혼성금융상품 거래 배당금, 이와 유사한 배당금이 모두 익금처리된다. 따라서 모회사는 해외 자회사의 수익으로 국내 모회사에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법인에서 낸 법인세를 인정하므로 국내 법인세는 감소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1) 국외경상이전은 교포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경상이전)과 무상원조 등 우리나라가 외국에 특별한 대가없이 지급한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32) 국외거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등의 경상거래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자본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수지 역시 두 거래의 결과가 각각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기록된다. 특히 경상수지는 국민계정의 경계계정인여와 대응되는데 상품의 수출입치를 나타내는 상품수지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를 기록한 서비스수지, 근로자가 해외에 나가 벌어들인 임금, 국외투자 결과 발생한 배당 및 이자를 기록하는 본원소득수지, 대가없이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이전소득수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만, 양 통계는 작성목적의 차이로 거래항목 분류가 다소 상이하고 금액도 차이가 있는데 국제수지의 상품 및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국외거래계정에서는 각각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외요소소득, 국외경상이전 등으로 구분 기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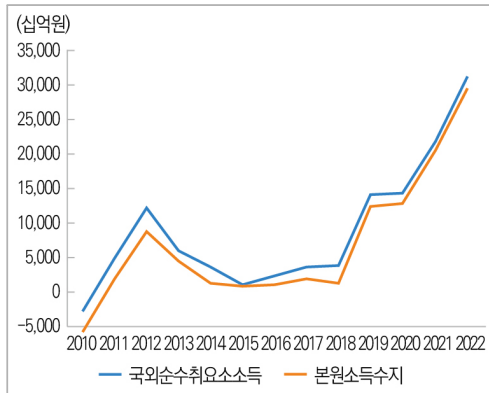
[표 II-5]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본원소득수지

국민소득통계 종합계정	국제수지표
I. 재화의 수출입	I. 상품수지
II. 서비스의 수출입	II. 서비스수지
III. 국외순수취요소소득	III. 본원소득수지
- 국외로부터의(에 대한) 피용자보수	- 급여 및 임금
- 국외로부터의(에 대한) 기업 및 재산소득	- 투자소득
IV. 국외경상이전	IV. 이전소득수지
V. 경상계정잉여	V.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 p.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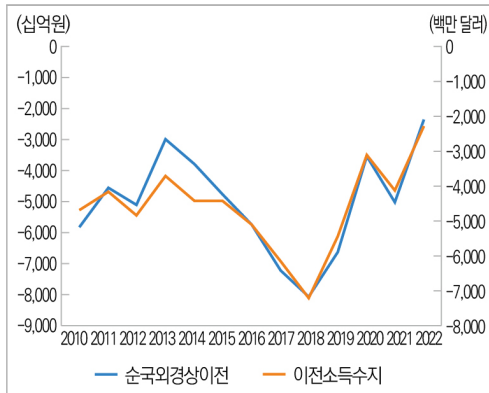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본원소득수지, 국외경상이전과 이전소득수지의 수준값을 비교하면 상관계수 1.0에 근사하여 동일한 변동성과 추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전망에서는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의 경상수지에서 전망한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를 이용한다.

[그림 II-20]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본원소득수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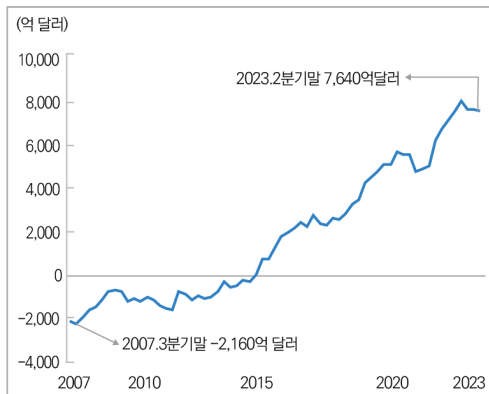
[그림 II-21] 국외경상이전과 이전소득수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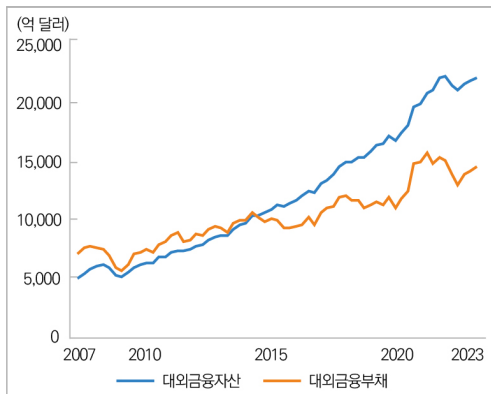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은 2023년 2/4분기말 기준 7,640억달러로 2015년 이후 순자산이 축적되고 있다.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를 비교하면 대외금융 자산은 2009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추세가 유지된다고 할 때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22] 순대외금융자산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23]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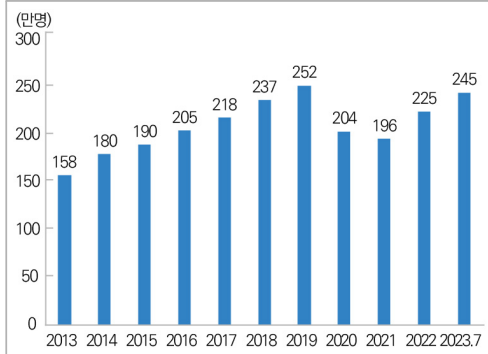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는 국외에서 임금을 받는 내국인이 감소하는 반면, 국내에서 임금을 받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추세적으로 음(-)의 값을 갖는다. 2023년 7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³³⁾은 245만명으로 전년동월의 208만명보다 17.9% (37.3만명) 증가하였고, 최근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를 확대하고 있다.³⁴⁾ 외국인 취업자의 한국과 모국의 임금격차를 검토하면, 2021년까지는 한국의 임금이 높은 비율이 73.9%로 높은 수준이므로 해외인력 공급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외지급 피용자보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3) 체류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을 의미하며, 관광 등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과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를 모두 포함한다.

34)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권 II부 7장 고용량에서 설명한다.

[그림 II-24] 체류외국인 현황



자료: 법무부

[그림 II-25] 외국인 취업자의 한국-모국 임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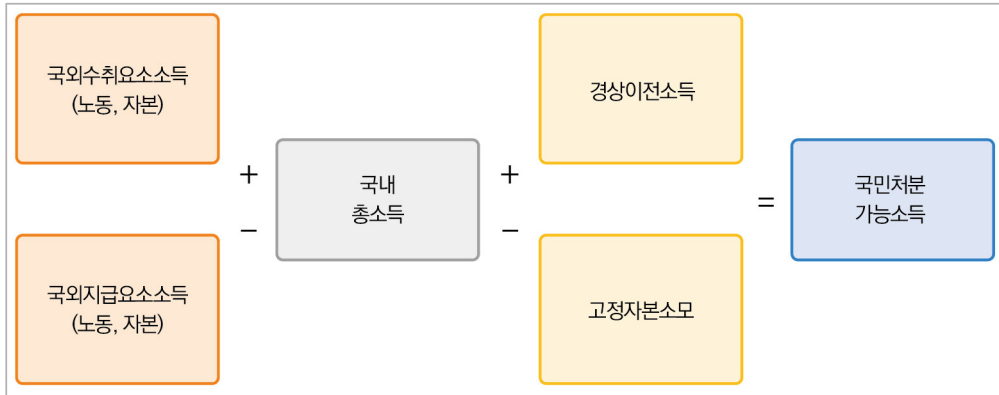
(단위: 만원, %)

	평균	높음	낮음
2017	214.9	76.4	6.7
2019	230.3	78.8	6.4
2021	242.9	73.9	7.8

자료: 통계청

NDI는 GNI에 국외경상이전을 더하고 고정자본소모 전망치³⁵⁾를 제하여 구하였는데, 2024년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이 5.9%로 명목 GNI 증가율 4.2%를 1.7%p 상회함에 따라 NDI 증가율은 GNI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6]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구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5) 고정자본소모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권 II부 4장 고정자본소모에서 설명한다.

제2절 중기 전망

- **2023~2027년 중 국민총소득(GNI)**은 연평균 4.3% 증가
-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3.5%)에 비해 증가폭 확대

(전년대비, 연평균,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 ~2022	2023 ~2027
3.3	4.2	5.0	4.8	4.4	3.5	4.3

- **2023~2027년 중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은 연평균 4.0% 증가
-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2.7%)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나 국민총소득에는 미치지 못하여 소비 혹은 투자여력은 제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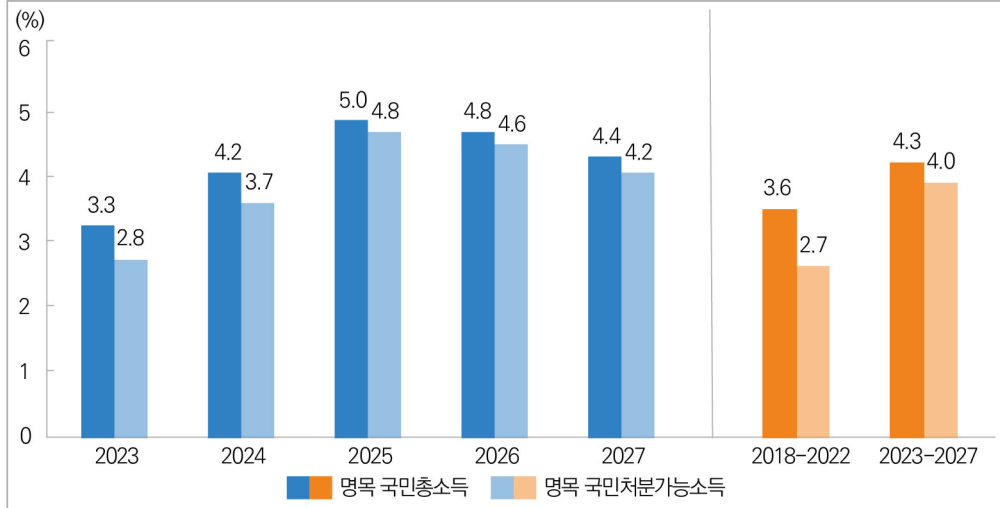
(전년대비, 연평균,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 ~2022	2023 ~2027
2.8	3.7	4.8	4.6	4.2	2.7	4.0

2023~2027년 기간 중 GNI는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5년(2018~2022년) 증가율은 3.5%로 국내총소득 증가율인 3.3%를 상회하여 국외로부터의 소득이 국민경제규모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5년의 경우 국외로부터 들어오는 순소득의 증가율이 1.7%에 그치면서 국민총소득의 추가적인 성장에는 제약이 예상된다.

2023~2027년 기간 중 국민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4.0%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5년(2018~2022년) 증가율은 2.7%로 국민총소득 및 국내총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민총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산출을 위한 본원소득수지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14.2%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가는 2023년 소득정책의 변화에 기인하며, 2024~2027년 평균 증가율은 1.7%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27] 중기 국민총소득(GNI) 및 국민처분가능소득(NDI) 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전망³⁶⁾을 이용하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산출하였다. 2023~2027년 중 총인구가 연평균 0.14%씩 감소함에 따라 1인당 GNI의 증가율은 국민총소득 증가율보다는 높다. 2023~2027년의 1인당 GNI 증가율은 연평균 5.6%로 전망되었으며, 본 전망에 따르면 2026년에는 1인당 명목 GNI가 41,037USD로 5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6] 1인당 국민총소득 전망

(단위: USD)

	2023	2024	2025	2026	2027
1인당 GNI	33,900	36,325	38,787	41,037	43,2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6) 총인구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권 II부 9장에서 설명한다.

[BOX 4] 가계부문 처분가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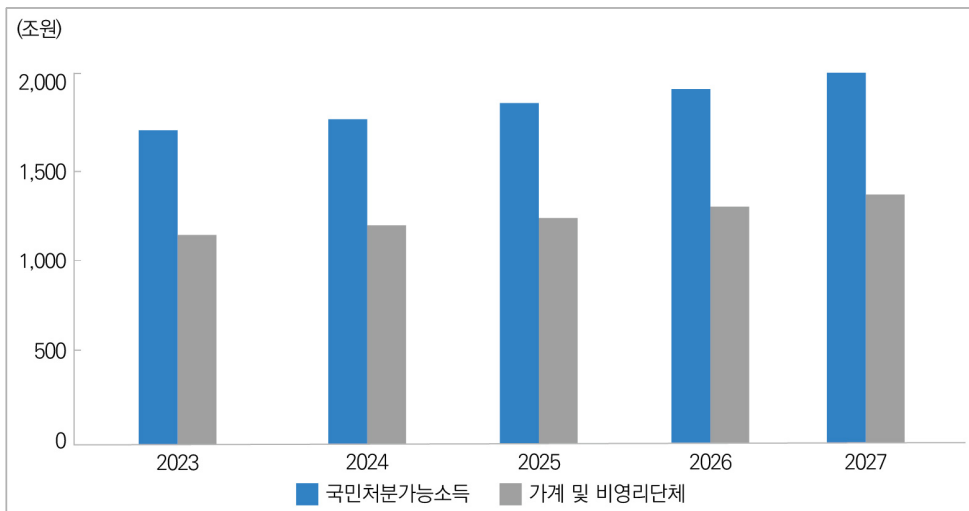
□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을 통해 가계와 정부, 법인의 처분가능소득을 파악

- 지난 5년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부문')의 처분가능소득은 정부와 법인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가계부문의 처분가능소득은 4.2% 증가하여 정부(2.2%), 법인(-4.6%)를 상회하며, 민간소비지출은 3.6%로 크게 낮아 가계부문의 순저축은 연평균 12.1%에 해당

□ 가계부문은 국민처분가능소득의 66% 비중을 차지

- 가계부문은 2022년 기준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의 66%를 차지하며 정부는 24.4%, 금융기관을 포함한 법인 8.9% 분배됨
- 2023~2027년 국민처분가능소득 전망의 66%가 가계부문에 분배된다고 가정하면 가계부문에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2024년 기준 1,215조원에 해당
 -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순저축간의 처분 내역에 따라 소비와 투자로 연계될 수 있음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추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7장

고용량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3.7만명(0.8%) 증가할 전망
 - 고용률은 전년(62.6% 전망) 대비 0.2%p 상승한 62.8%로 전망
- 2024년 실업률은 전년(2.7% 전망) 대비 0.3%p 상승한 3.0%로 전망

(전년대비, 만명,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취업자 수	81.6	37.2	28.6	32.9	23.7
(증가율)	(3.0)	(1.3)	(1.0)	(1.2)	(0.8)
고용률	62.1	62.2	63.0	62.6	62.8
실업률	2.9	3.0	2.4	2.7	3.0

• 전망의 주요 변동 요인(고용)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돌봄 노동수요의 지속 확대	• 저성장 기조 지속
• 노인일자리 확대	• 최근 지속된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
•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 및 유연화	
•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	

2024년 취업자 수는 23.7만명(0.8%) 증가하여 고용률은 62.8%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3.0%를 기록할 전망이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된다는 점과, 2022~2023년 발생한 고용호황의 기저효과는 고용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돌봄 부문 노동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와 노인일자리 확대, 외국인력 도입 확대 및 유연화는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의 효과는 향후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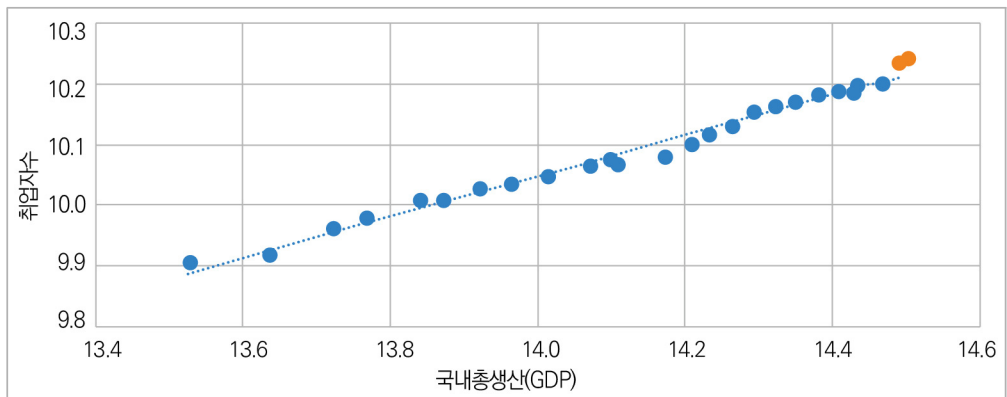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2023년 하반기 중 취업자 수는 28.6만명 증가하여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2.9만명(1.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상반기(+37.2만명)에 비해 8.6만명 축소된 수준이다. 수출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성장률(1.3%)은 상반기(0.9%) 대비 소폭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소비 등 내수 증가세가 위축될 것이라는 점에서 취업자 수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 등으로 인해 숙박·음식점업 등의 업황이 개선된다면 증가세 둔화는 소폭 완화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고용률은 63.0%를 기록하여 2023년 고용률은 62.6%로 전망된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0.5%p 높은 수준이다. 최근 15세 이상 인구는 0.5%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취업자 수는 1% 이상 증가하여 15세 이상 중 취업자 비중을 의미하는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다. 실업률은 2023년 하반기 2.4%를 기록하여 2023년 연간 실업률은 2.7%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4년 취업자 수는 23.7만명(0.8%) 증가할 전망이다. 2024년 전망치의 주요 결정 요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2024년 실질GDP는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응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2022~2023년에 기존 GDP와 취업자 수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높은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고, 이러한 급격한 증가의 영향으로 향후 몇 년간 취업자 수는 경제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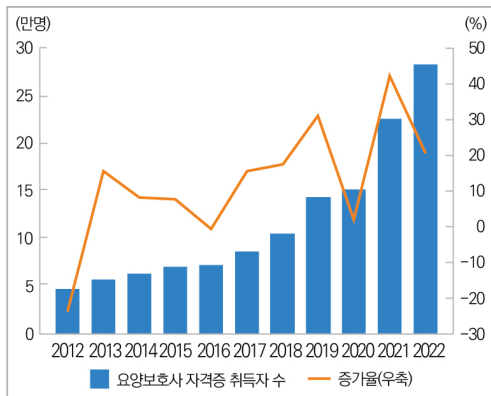
[그림 II-28] GDP와 취업자 수의 상관관계(1998~2023년)



주: 1) 자연로그로 변환된 GDP와 취업자 수의 관계를 파악하였음
 2) 오른쪽 끝의 주황색 점은 2022년과 2023년 수치이며,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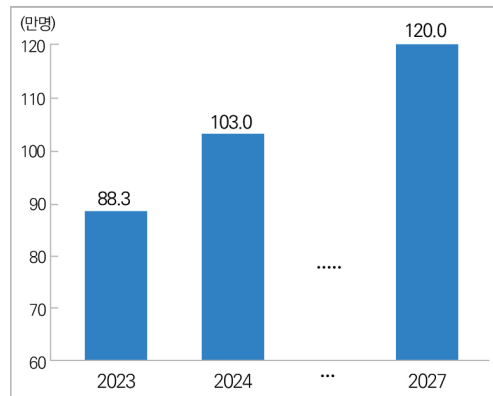
향후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취업자 수를 변화시킬 요소들이 존재한다. 특히, 돌봄 부문에서의 노동수요 확대 및 노인일자리의 확대는 2024년 취업자 수 전망의 주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던 돌봄 부문의 노동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인구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분야의 노동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가 급증하는 등 노동공급 여력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취업자 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2024년 노인일자리 수를 103만개로 전년대비 14.7만개 늘리고, 2027년까지 120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³⁷⁾³⁸⁾ 돌봄 분야의 노동수요와 노인일자리는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성장률과의 관계에 기반하여 도출한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림 II-29]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



자료: 한국보건인력조사시험원

[그림 II-30] 노인일자리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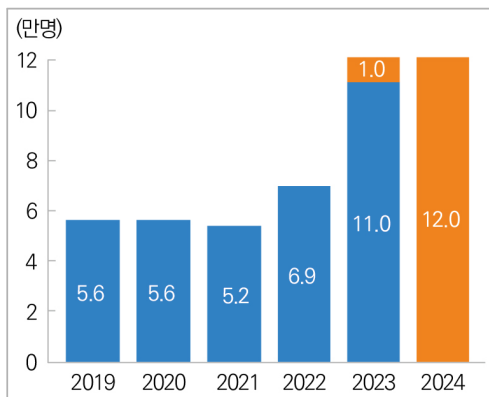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3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월별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을 통해 역산해보았을 때,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1년 중 평균적으로 약 9.7개월간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2024년 노인일자리 14.7만개의 증가로 연간 취업자 수가 약 11.9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8)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2023. 8. 보건복지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 202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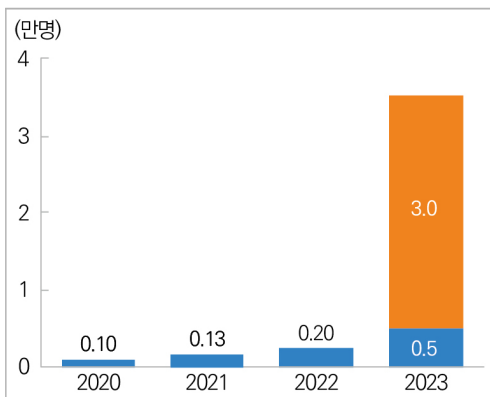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최근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인한 빈일자리를 해외인력 확대로 대응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존재한다. 정부는 기존 5~6만명 수준으로 유지되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³⁹⁾ 쿼터를 2023년 1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2024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쿼터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⁴⁰⁾ 또한, 외국인 숙련근로자(E-7-4)⁴¹⁾의 쿼터를 현재 5천명에서 3.5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된 외국인력 확대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이 해결된다면, 취업자 수는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II-31] 비전문취업(E-9) 쿼터 변화



주: 2023년 주황색 부분은 8/24일 정부의 발표에 기반하여 작성
자료: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그림 II-32] 숙련일자리(E-7-4) 쿼터 변화



주: 2023년 주황색 부분은 8/24일 정부 발표에 기반하여 작성
자료: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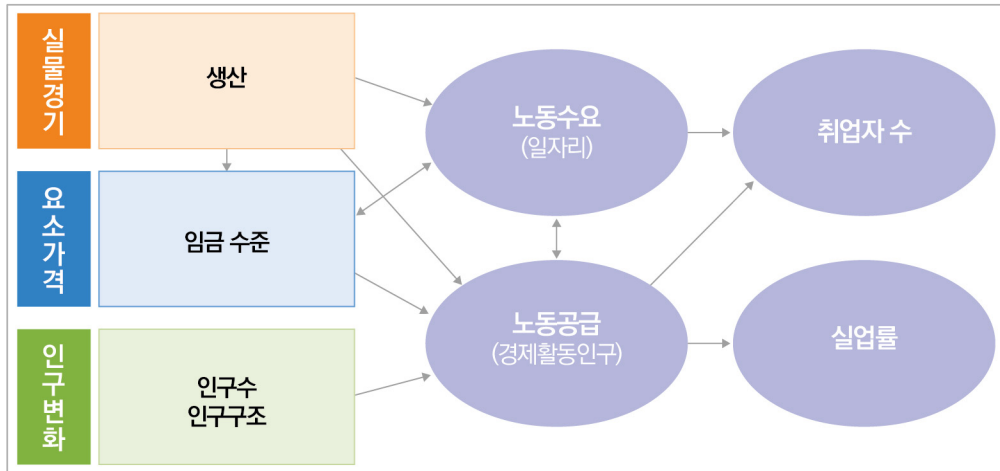
39)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이며, 해당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게 된다. E-9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허가된 산업(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조선업 등)에서 최장 4년 10개월(최초 3년+연장 1년 10개월)간 취업이 허용된다. 체류 만료일이 되면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출국한 후 국내에서 근무한 기업체의 초청을 받아 재입국하여 4년 10개월을 추가 근무할 수 있다. (2022년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10년 이상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해당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40) 정부는 2023년 8월 24일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서 올해 11만명으로 계획되어있던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고, 2024년에도 12만명+@ 수준의 쿼터를 설정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41) 외국인 숙련근로자 비자(E-7-4)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이전 정부 발표는 최소 근무 기간 요건을 4년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포함). 외국인이 E-7-4비자로 변경하면 본국에 거주하는 부인과 자녀들을 한 국으로 초청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하에 부인은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자녀들은 취학이 가능하다.

고용 전망에서 고려하는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향후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성장률이다. 생산의 주요 투입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며, 따라서 노동투입의 변화와 생산량의 증가(경제성장)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의 규모와 인구구조는 노동공급(경제활동인구) 측면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또한, 생산량 증가로 인한 노동수요의 증가는 노동탐색의 기회비용을 줄여 노동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다.⁴²⁾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균형에서 취업자 수가 결정되며, 일하길 원하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하지 못한 인원은 실업자가 된다. 또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노동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 사용자 측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기계와 같은 자본으로 대체할 유인이 커진다.⁴³⁾ 반면, 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을 공급할 유인이 커져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상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용 전망을 수행하였다.

[그림 II-33] 고용지표와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2) 안주엽,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의 기초분석”, 매월노동동향, 창간호, 2001

43) 다만, 이번 전망에서는 자본투입의 단기적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투입 결정이 임금에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하였다.

제2절 중기 전망

- **2023~2027년 취업자 수**는 연평균 20.7만명(0.7%) 증가할 전망
 -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27.3만명 증가) 대비 증가폭 축소
 - 향후 취업자 수 증가세는 지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

(전년대비, 만명,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 ~2022	2023 ~2027
32.9	23.7	21.5	15.1	10.1	27.3	20.7
(1.2)	(0.8)	(0.8)	(0.5)	(0.3)	(1.0)	(0.7)

주: 괄호안의 값은 증가율을 나타냄

- **2023~2027년 실업률**은 평균 3.1%를 기록할 전망
 - 지난 5년(2018~2022년 평균 3.6%) 대비 0.5%p 낮은 수준
 - 2023년 2.7%로 저점 기록 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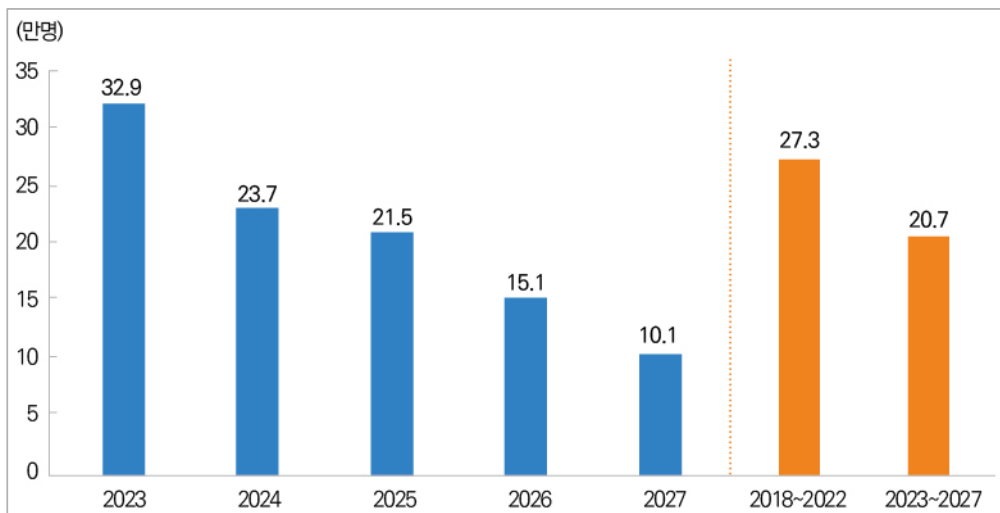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 ~2022	2023 ~2027
2.7	3.0	3.2	3.3	3.3	3.6	3.1

2023~2027년 기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20.7만명(0.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증가폭(연평균 27.3만명, 1.0%)에 비해 6.6만명(0.3%p) 낮은 수치이다.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2023년 32.9만명 증가한 후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며 2027년에는 10.1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22~2023년 2년 동안 GDP와 취업자 수 간의 장기관계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⁴⁴⁾ 하지만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은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균형에서 이탈하더라도 다시 균형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따라서 최근의 높은 취업자 수 증가세 이후 균형으로 복귀하려는 힘은 향후 취업자 수 증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돌봄 분야

44) [그림 II-28] 참조

의 노동수요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지속 확대될 것이라는 점과 2027년까지 계획된 노인일자리 확대(2024년 103만개→2027년 120만개)는 중기 취업자 수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향후 확장적 외국인력도입 정책이 지속된다면,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실질GDP 성장률은 2024년 2.0%를 기록한 후 2025년 3.0%로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세는 반등없이 지속 둔화하여 실질GDP 성장률과 다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부터 외생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 증가세는 2024년 14.7만개에서, 2025~2027년에는 연평균 5.7만개로 축소된다. 또한 현재 확장적인 외국인력도입 정책이 2025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아직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중기 취업자 수 증가세는 향후 지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II-34] 중기 취업자 수 증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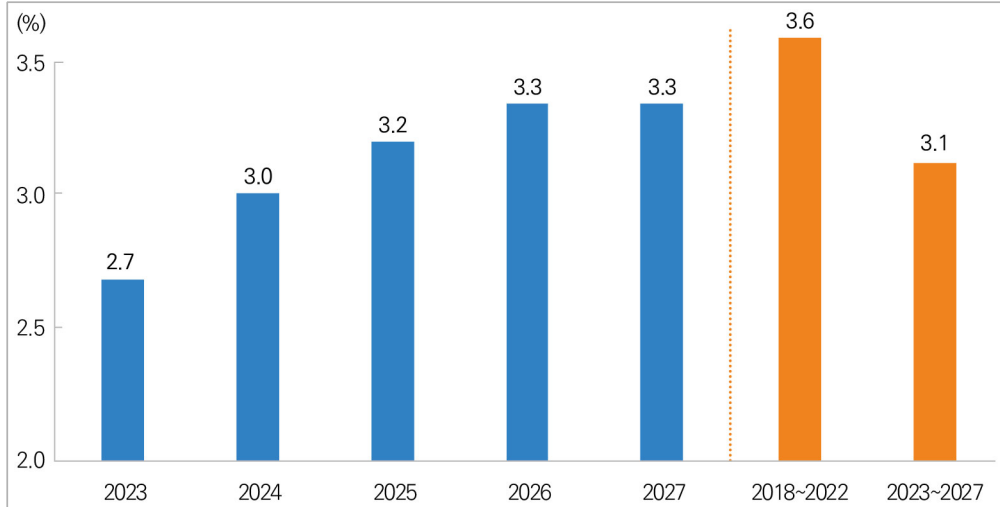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실업률은 2023년 2.7%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하여 2027년 3.3%가 될 전망이다. 향후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2027년 기간 중 평균 실업률은 3.1%로 지난 5년간 평균인 3.6%보다 0.5%p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023년 양호한 고용상황으로 인해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에 일부 기인한다. 또한, 향

후 증가가 예상되는 돌봄 분야 및 노인일자리 등의 신규 취업자 중 일부는 노동시장의 밖에 머무르다 취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전체적인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⁴⁵⁾

[그림 II-35] 중기 실업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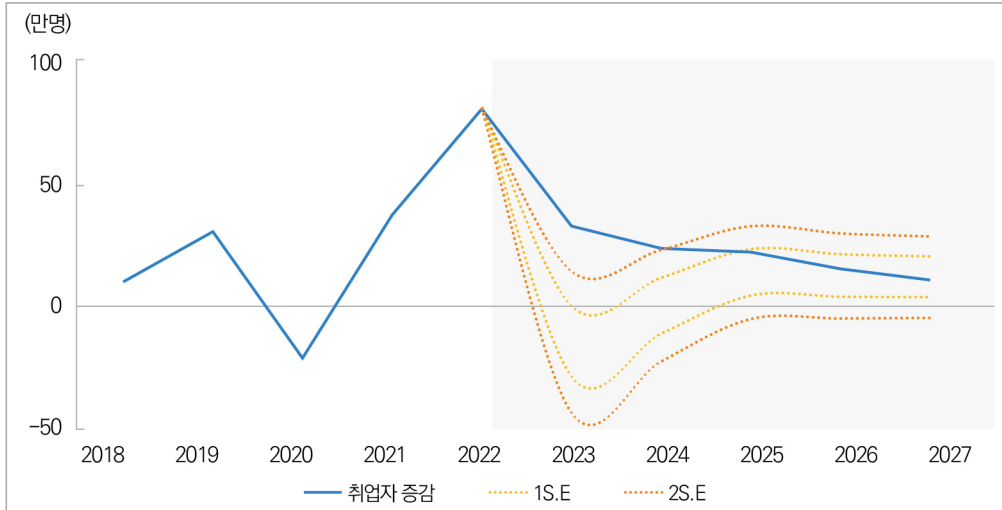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아래의 그림은 취업자 수 증감 및 실업률 변화에 대한 예측치와 전망 모형의 예측 구간(prediction band)을 보여준다. 전망은 일차적으로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값을 기준값으로 설정한 후, 모형이 반영하지 못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기준값을 보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위에서 상술한 전망의 상·하방 요인들로 인하여 2023~2024년 취업자 수는 전망모형의 추정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점차 모형값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업률은 과거 경기와의 관계를 등을 고려할 때 2023~2027년 기간 동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돌봄 분야이나 노인일자리 등에서 경기와 무관한 외생적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2027년까지 실업률은 모형 추정치 대비 낮은 수준의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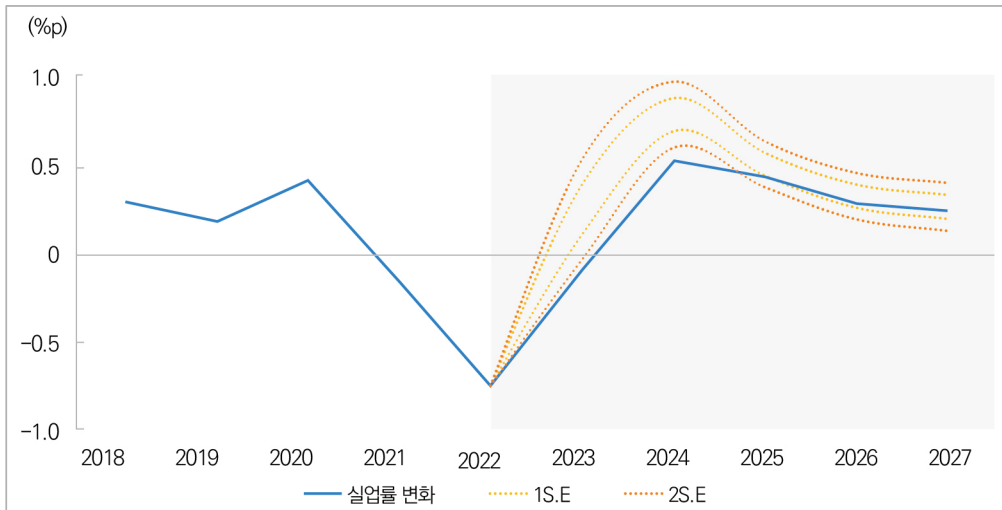
45) 실업자는 일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비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외부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과 동시에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경우, 실업률의 계산법(실업자/경제활동인구)에서 분모만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실업률이 하락한다.

[그림 II-36] 취업자 수 증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그림 II-37] 실업률 변화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임금상승률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임금상승률은 전년(2.9%) 대비 0.1%p 상승한 3.0%를 기록할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임금상승률	4.9	2.4	3.3	2.9

- 전망의 주요 변동 요인(임금)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일부 산업의 높은 빈일자리율	• 저성장 기조 지속
	• 물가상승률 하락
	•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2024년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3.0% 상승할 전망이다. 2023~2024년의 저성장 기조 지속과 물가상승률 안정, 저임금일자리의 증가 등이 임금상승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일부 산업의 높은 빈일자리율이 해당 산업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임금상승률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하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3.3% 상승하여, 2023년 임금상승률은 2.9%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반기 임금상승률은 상반기(2.4%) 대비 0.9%p 높은 수치이다. 2023년 상반기는 2022년 상반기에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했던 것이 기저효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는 특별급여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3년 하반기에 특별급여 측면의 기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2024년 임금상승률은 3.0%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4년 전망치를 결정할 주요 결정요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내년도 실질GDP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임금근로자는 이보다 낮은 수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여 임금상승률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물가상승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은 임금상승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⁶⁾ 물가상승률은 올해 3.4%를 기록한 후 2024년 2.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물가상승률의 안정화는 전년대비 임금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저임금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 관련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약 5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⁴⁷⁾ 2024년 14.7만개 증가가 계획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약 20~60만원 수준에 그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향후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저임금근로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비중 증가는 전체 임금수준을 하락시켜 임금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임금상승률 전망에서 고려하는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은 임금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몫 또한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취업자 수의 증가는 1인당 노동생산성 (=GDP/취업자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유희인력이 많지 않은 경우, 1단위 고용을 위한 단위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률은 생산 또는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임금상승률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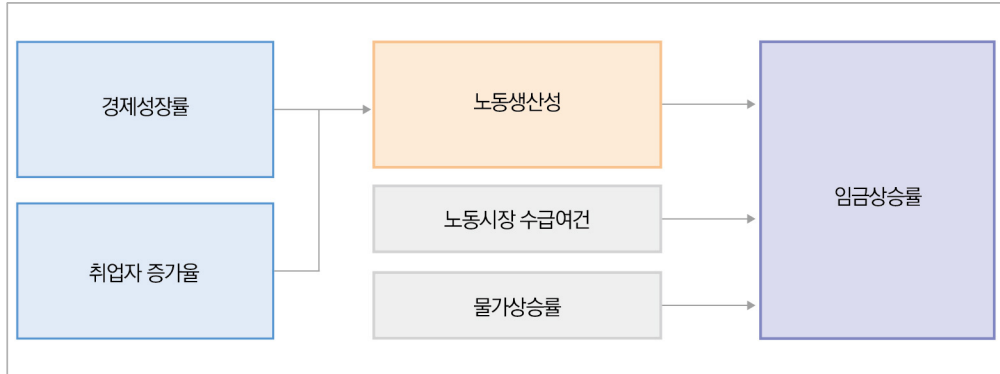
46) 물가는 시차를 두고 임금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성 외(2022)는 물가상승률이 약 4분기의 시차를 두고 임금상승률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정성·임웅지·오강현·최열매·김윤경·이재진,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 BOK 이슈노트 제2022-26호, 2022

47)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자체 운영 시설 종사 요양보호사의 2020년 12월 기준 평균 월 보수액은 211.6만원으로, 동 시점 총산업 평균임금인 400.4만원(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의 약 52.8% 수준이다.

경승구·박세영·이효용·신예린,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연구”, 건강보험연구원, 2021

[그림 II-38] 임금상승률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절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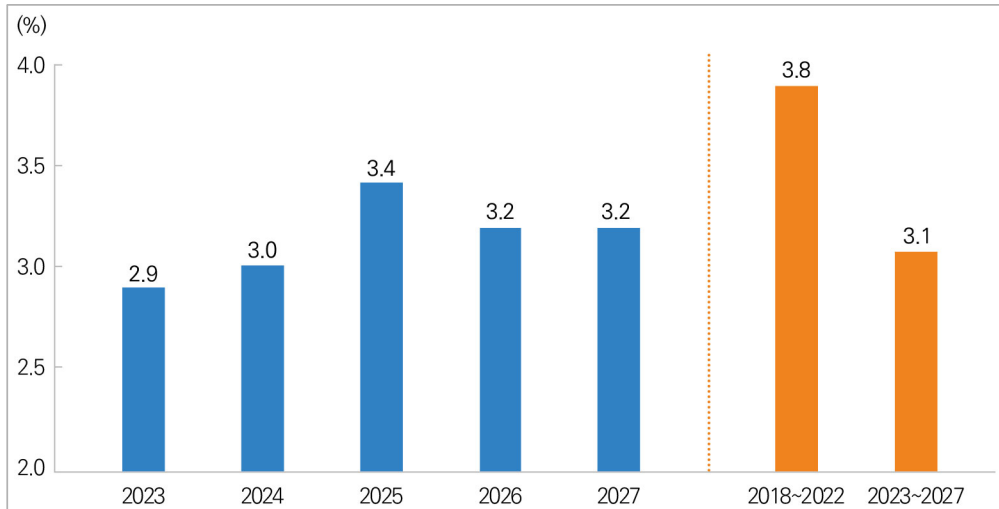
- **2023~2027년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3.1%를 기록할 전망
 - 지난 5년(2018~2022년 평균 3.8%) 대비 0.7%p 낮은 수준

(단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2022	2023~2027
2.9	3.0	3.4	3.2	3.2	3.8	3.1

2023~2027년 기간 동안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3.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상승세(3.8%) 대비 0.7%p 낮은 수준이다. 우선 2023년은 상술한 바와 같이 특별급여의 감소로 임금상승률이 2.9%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2024년 또한 노인일자리 증가 등으로 인한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로 임금상승률이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돌봄 부문 취업자 증가, 노인일자리 증가, 외국인력 확대 등이 우리경제의 취업자 수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나 이들의 임금수준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임금상승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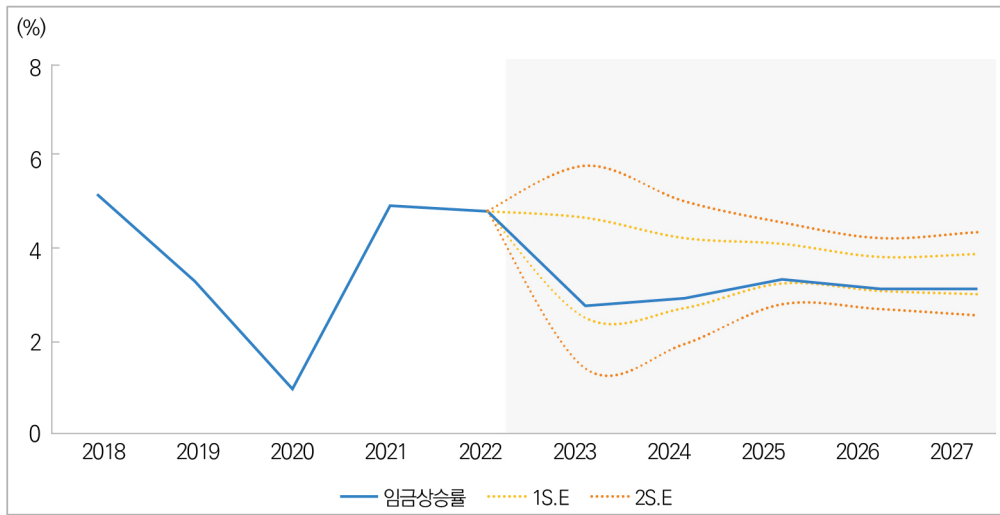
[그림 II-39] 중기 임금상승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아래의 그림은 임금상승률에 대한 예측치와 전망 모형의 예측구간을 보여준다. 2023년 이후 임금상승률은 모형에서 추정되는 값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등에 기반한 임금상승률 전망 모형이, 외생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저임금근로자와 이로 인한 임금변화를 포착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예상되는 저임금근로자의 규모와 그들의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모형추정치를 보정하였고, 그 결과 모형 값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도출하였다.

[그림 II-40] 임금상승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제9장

인구

제1절 중기 전망⁴⁸⁾

- 2023~2027년 인구는 연평균 0.14% 감소할 것으로 전망

(단위: 만명,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2022	2023~2027
인구	5,159	5,154	5,149	5,142	5,133	5,173	5,147
증가율	-0.20	-0.08	-0.11	-0.14	-0.16	0.10	-0.14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극복 정책적 노력 • 국외 인구 순유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지속

2023~2027년 총인구는 연평균 0.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평균 증가율인 0.10%보다 0.24%p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상반기 중 출생아 수(12만 343명)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고, 동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 명으로 2009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던 전년에 비해 2023년 상반기 사망자 수(17만 2,374명)는 지난해 동기 대비 2만 1,851명(-11.25%)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구 자연증가(출생아 수 -사망자 수)는 5만 2,032명 감소를 기록하였다.⁴⁹⁾

이소연 경제분석관(soynlee@assembly.go.kr, 6788-4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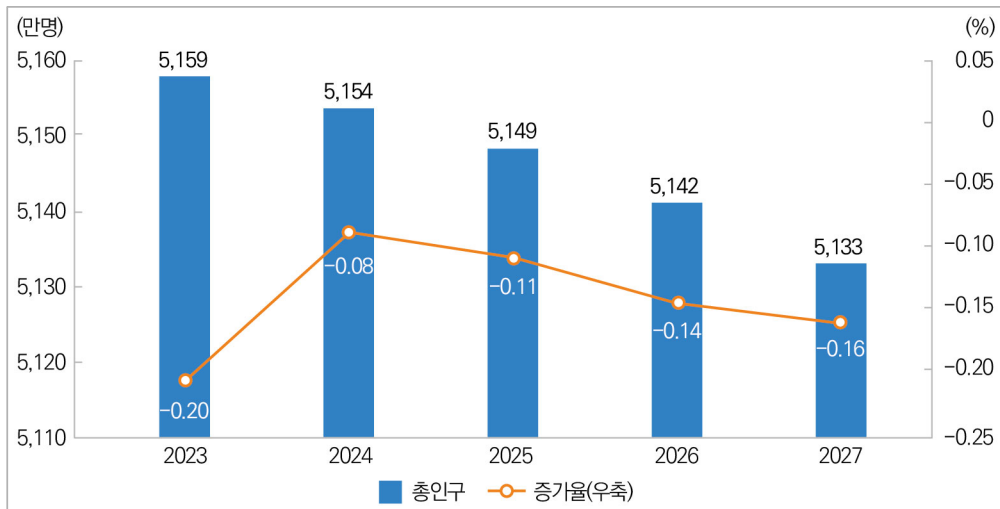
48) 인구전망은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2021)」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 연도를 2022년까지 업데이트 하여 내국인 인구를 전망하고, 통계청(2021)의 외국인 전망 수치를 합하여 총인구를 전망한다.

49) 통계청,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 보도자료, 2023.8.30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인구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우리나라 인구는 5,159만명으로(전년대비 -0.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는 저조한 합계출산율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내년도 ‘신생아 3중 특례’⁵⁰⁾를 통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신설 및 부모 급여 증액 등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출산율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II-41] 총인구 및 증가율 전망(2023~2027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0) ‘신생아 3중 특례’는 신생아 출산 가구(2023년 이후 출생)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용자, 주택 우선 공급하는 지원정책을 의미한다.

제2절 인구변동요인

1. 출산율

- 2023~2027년 **합계출산율**은 감소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⁵¹⁾

(단위: 15~49세 여성 인구 1명당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출산율	0.75	0.74	0.72	0.70	0.69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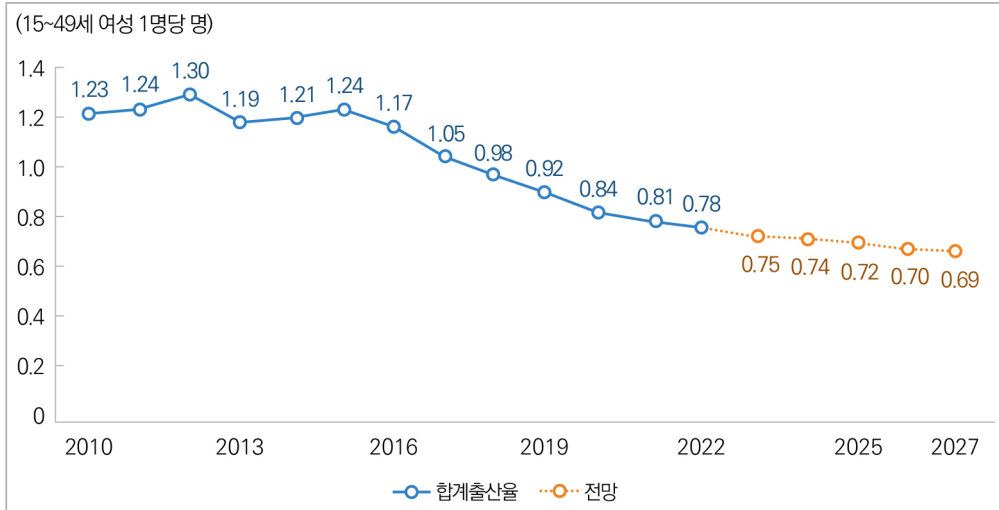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저출산 극복 정책적 노력	• 초혼 및 초산 연령 상승
• 육아 친화 사회적 분위기	• 기대 자녀 수 감소
	• 기혼 출산율 하락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점차 하락하여 2027년 0.69명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육아 휴직제도 개편 및 부모급여 상향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육아 친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3년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 343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160명(-6.35%) 감소하였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1개월째 감소하는 가운데 2023년 2분기 출생아 수(56,087명)는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합계출산율은 0.70명을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혼인 건수는 10만 1,70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633건 증가하였으며, 2023년 1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결혼 수요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초산 연령 또한 상승함에 따라 기대 자녀 수 감소로 인해 출생아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1) 합계출산율은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2021)」의 모형을 이용하여 기준 연도를 2022년까지 업데이트 하여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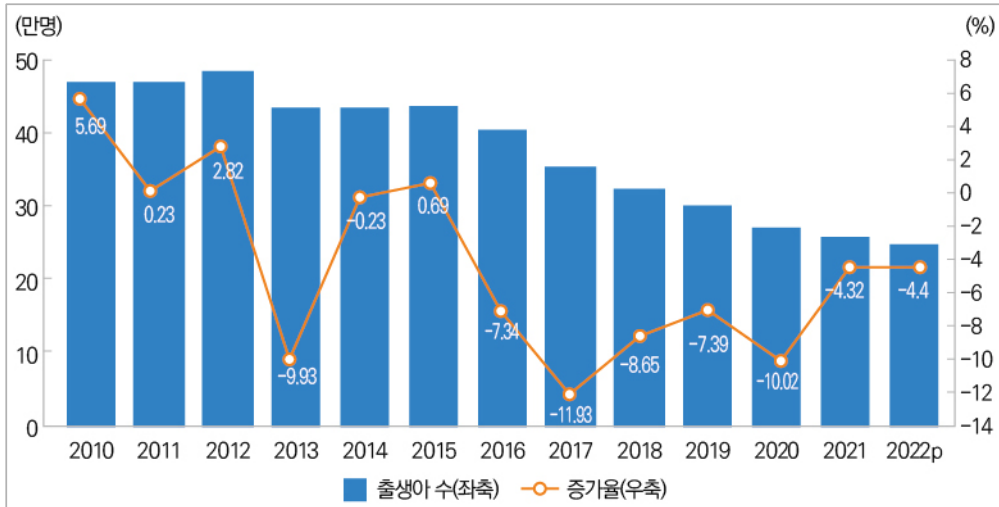
[그림 II-42]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아래 그림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출생아 수이다. 2010년 출생아는 47만명이었으며, 2012년 48.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인다. 2010~2022년 기간 동안 출생아 수 증가율은 평균 -4.2%로 나타났다.

[그림 II-43] 출생아 수(2010~2022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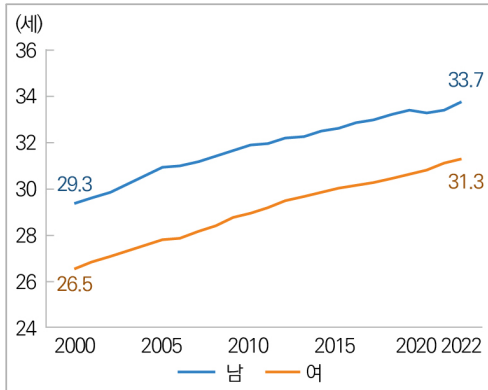
[그림 II-44] 월별 혼인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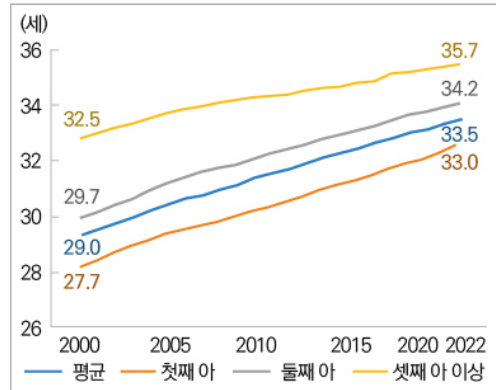
2022년 현재 평균 초혼 연령은 남 33.7세, 여 31.3세로 높아졌으며, 출산 연령 또한 33.5세로 2000년 29.0세에서 22년 만에 4.5세 높아졌다.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초산 연령은 33.0세로, 이러한 초산 연령의 상승은 기대 자녀 수 감소를 가져온다.

[그림 II-45] 평균 초혼 연령



자료: 통계청

[그림 II-46] 평균 출산 연령



자료: 통계청

[BOX 5]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2023년 초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신설된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모두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라면 2022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수혜 가능

[부모 급여 현황]

	영아수당('22~)	부모급여('23~)		부모급여 인상('24~)	
연령	만0세	만0세	만1세	만0세	만1세
지급금액	월 30만원	월 70만원	월 35만원	월 100만원	월 50만원

주: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중복수혜 불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비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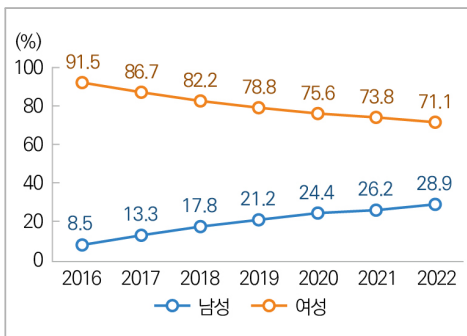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충해 주고, 양육으로 늘어난 가계 지출 상쇄로 경제적 부담 경감
 - 부모 급여 지급으로 소득대체율이 상승하므로 소득상실로 인한 출산과 육아 휴직 기피 현상 감소 기대 및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상승 기대

□ 육아 휴직자 수와 근로 시간 단축제 사용자 수는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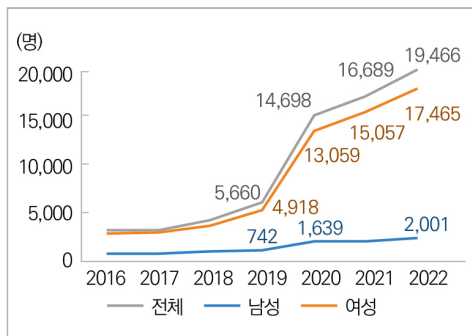
- 2022년 전체 육아 휴직자 수(13만 1,087명)는 전년대비 18.6%(2만 532명) 증가하였으며 남성 육아 휴직자 비율은 28.9%로 꾸준히 증가
 - 2023년 자녀 돌봄 유급휴가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 2022년 근로 시간 단축제 사용자 수(1만 9,466명)는 전년(1만 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
 - 2023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대상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증가

[남·여 육아휴직자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2. 사망률

- 2023~2027년 기대여명은 상승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단위: 기대여명,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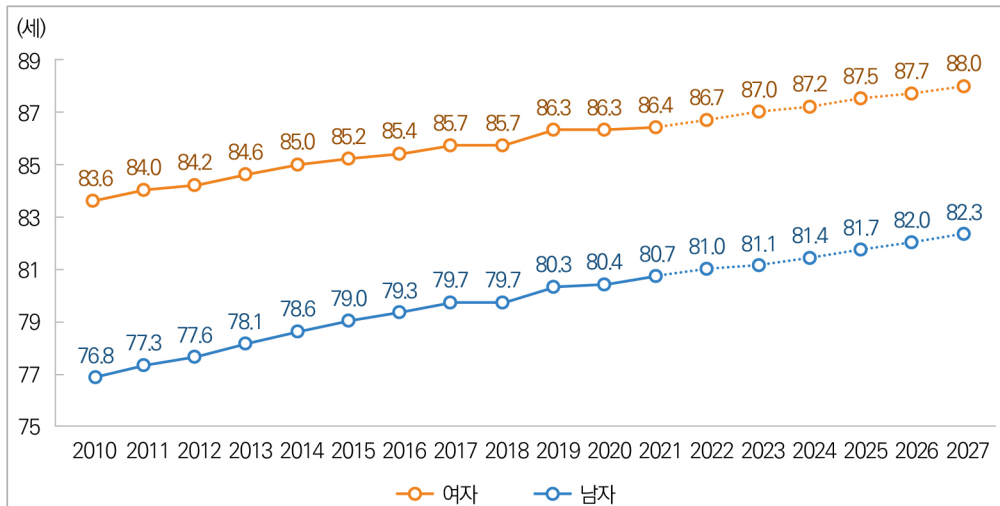
	2023	2024	2025	2026	2027
남성	81.1	81.4	81.7	82.0	82.3
여성	87.0	87.2	87.5	87.7	88.0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고령인구 증가	•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 기대여명 증가

2023년~2027년 기대여명을 전망한 결과, 남성은 2020년 80.4세에서 2027년 82.3세로 1.9세 상승하였으며, 여성은 2020년 86.3세에서 2027년 88.0세로 1.7세 상승하였고, 이러한 상승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⁵²⁾

[그림 II-47] 기대여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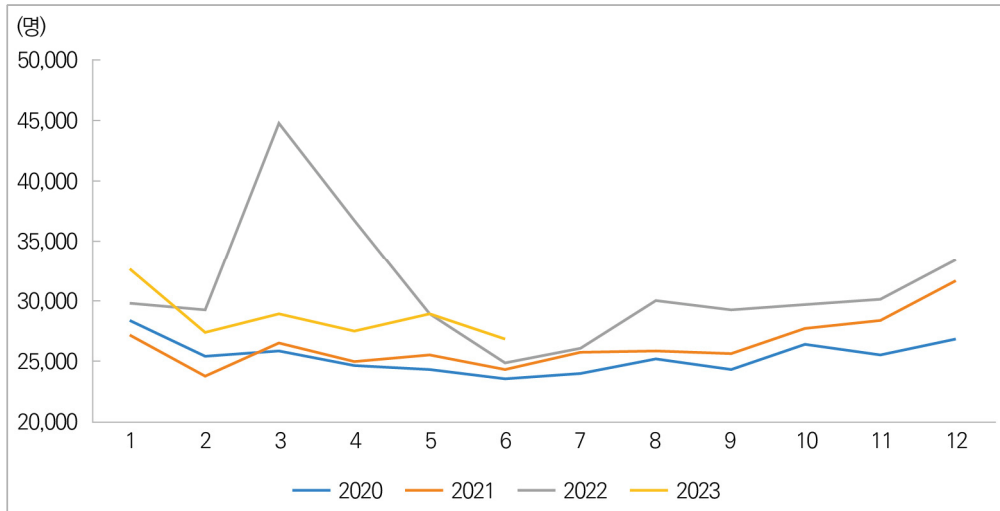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52) 기대여명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서 0세 출생자의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라고도 한다. 성별연령별 사망확률이 하락하면 기대여명이 상승한다.

2023년 상반기 사망자 수는 17만 2,374명으로 작년 상반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급증⁵³⁾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사라져 전년동기대비 2만 1,851명(-11.25%)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80대, 90대 이상, 70대 순으로 증가하여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로 보인다.

[그림 II-48] 월별 사망 추이(2020~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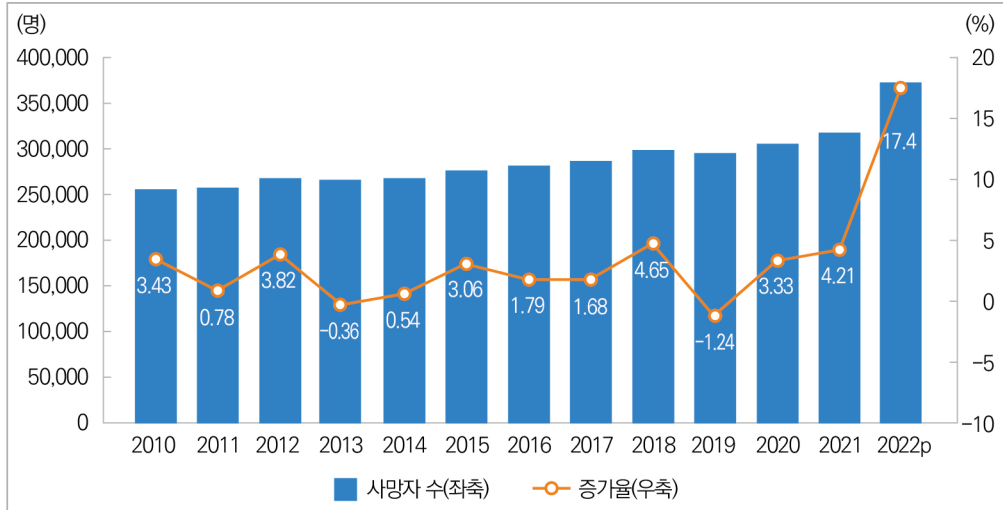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II-49]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 규모이다. 2010년 사망자 수는 25.5만명 수준에서 2022년 37.3만명(잠정)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2021년 대비 2022년 사망률이 4.21%에서 17.4%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 상반기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로 보인다. 연도별로 증가율의 등락이 있으나, 2010~2022년 기간 동안 사망자 수 증가율은 평균 3.31%로 나타났다.

53) 통계청은 「2022년 3월 인구동향」(2022.5.25.) 자료를 발표하면서 2022년 3월에는 오미크론 확산이 가장 심했던 시기로 코로나19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림 II-49] 사망자 수 추이(2010~2022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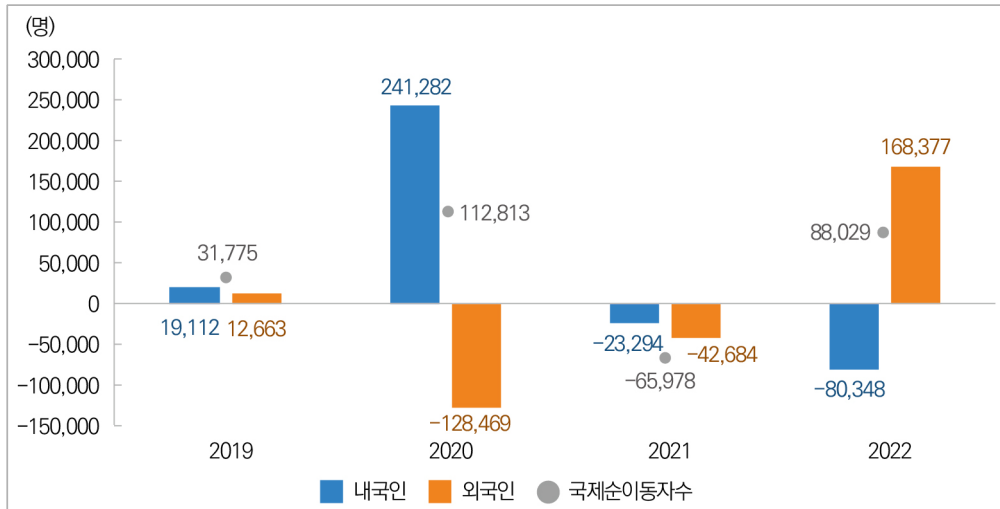
3. 국제이동

- 2023~2027년 국제이동률은 성별·연령별 평균 이동률을 적용하여 추정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취업인구 확대 •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순유출 확대

2022년 외국인 입국자(41만 3,000명)는 전년대비 19만 2,000명(87.2%) 증가하여 16.8만명이 순유입, 내국인은 8.0만명 순유출하여 국제 순이동은 전년도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 완화 및 외국인 취업인구 확대로 외국인 순 유입 규모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인구 증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국인들의 순유출 확대는 인구 규모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50] 연간 내·외국인 국제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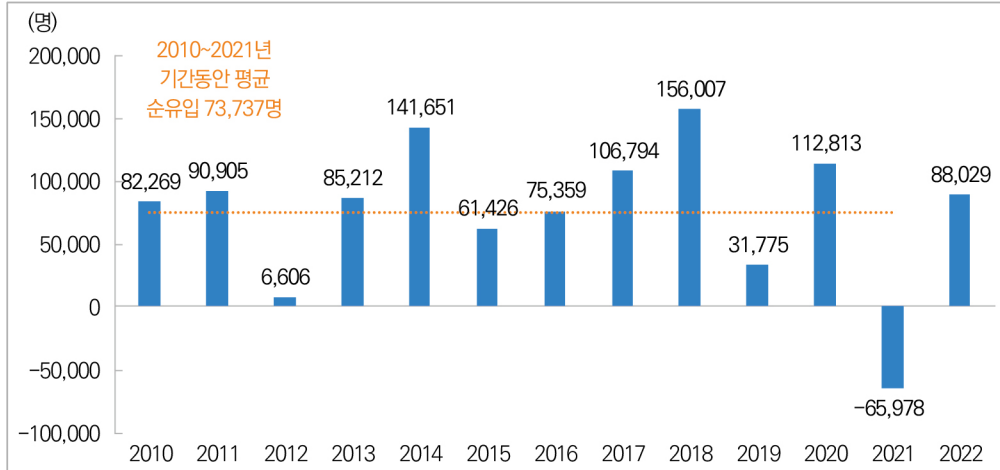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국제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세 둔화로 인해 2022년 순유입으로 전환하였다. 비전문취업비자 근로자 쿼터가 2022

년 6만 9,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명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코로나 이전 2배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되어 외국인 순유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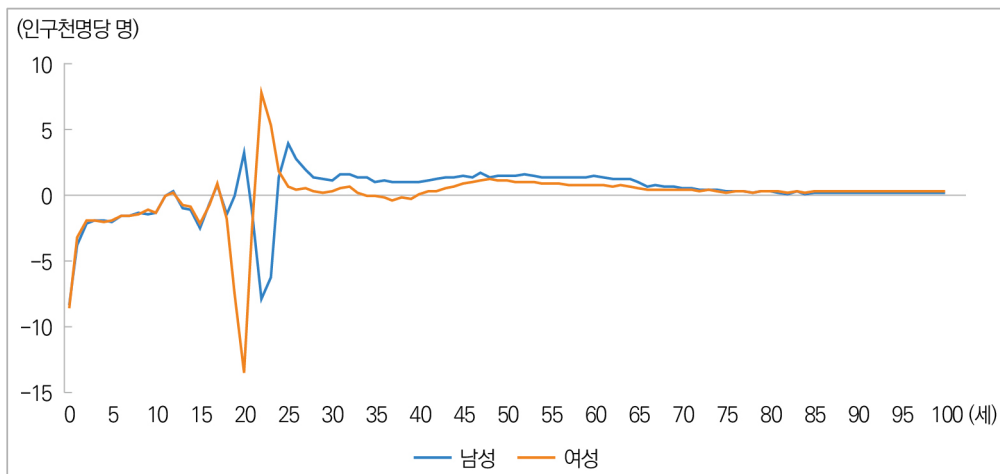
[그림 II-51] 국제인구 순유입 추이(2010~2022년)



자료: 통계청

지난 7년(2013~19년) 인구 순유입 규모를 바탕으로 성별·연령별 인구 국제 이동을 구하고 최저, 최고값을 제외한 5개년도 평균 국제 이동을 구해 인구 순이동자 수 추계에 적용하였다.

[그림 II-52] 성별 연령별 국제순이동률



자료: 통계청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Ⅲ (소득부문)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I

- 소득 부문 -

(Economic Outlook for 2024 and the Medium-Term III)

발 간 일 2023년 10월 5일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디자인·인쇄 (주)명문기획 (tel 02·2079·9200)

ISSN 3022-0734

© 국회예산정책처, 2023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8-002043-10
ISSN	3022-0734

